

#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이윤진·김은설·조혜주



연구과제 2024-16

#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저

자

이윤진, 김은설, 조혜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6

##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00-5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현재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인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유보통합의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주무부처와 연령통합을 정부가 처음부터 확정하면서, “이제 유보통합이 가시화 되는구나”하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하는데 주력하였다. 우리의 유보 현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설립유형별, 지역별 등에 따라 운영과 이용 현황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장의 모든 정책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 기준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조직, 예산, 법령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까지 달성을 계획했던 교육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등 실행과제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 과제들은 시도교육청과 시도 등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달성이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은 현장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쟁점들을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제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 바쁘신 가운데 면담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원장님과 선생님, 현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드린다. 대만 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타이페이 대학교 유아교육과의 Pei-Jung Lin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 목차

요약	1
<b>I. 서론</b>	<b>1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b>II.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b>	<b>23</b>
1.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추진 성과	23
2.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35
<b>III.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b>	<b>43</b>
1.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43
2.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47
3.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양성 통합	52
4.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및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55
5. 학부모 부담 경감	62
6.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65
<b>IV. 현장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b>	<b>75</b>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교사·전달체계 관계자 등	75
2. 학부모	87
3. 소결	92
<b>V. 국외사례: 대만의 유보통합</b>	<b>97</b>
1. 유보통합 추진 배경	97
2. 유보통합 추진 과정	98

---

3. 유보통합 후 유아원 유형 및 운영·이용 현황 .....	101
4. 시사점 .....	114
<b>VI.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b> .....	<b>121</b>
1. 추진 방향 .....	121
2.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	123
<b>참고문헌</b> .....	<b>129</b>
<b>Abstract</b> .....	<b>135</b>
<b>부록</b> .....	<b>137</b>
〈부록 1〉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 .....	137
〈부록 2〉 유보통합 추진 일정(안) .....	138
〈부록 3〉 면담지(원장, 교사, 학부모) .....	139
〈부록 4〉 전문가 유보통합 이행수준 진단 조사지 .....	142
〈부록 5〉 대만 출장 면담지(원장, 교사, 학부모, 공무원) .....	147
〈부록 6〉 17개 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전담팀 현황(2024. 12. 3. 기준) .....	151

---



## 표 목차

〈표 Ⅰ-3-1〉 보육 현장전문가 면담 사례	14
〈표 Ⅰ-3-2〉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면담 사례	16
〈표 Ⅰ-3-3〉 영유아 학부모 심층 면담 사례	17
〈표 Ⅰ-3-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현황	18
〈표 Ⅰ-3-5〉 대만 타이베이시 출장 일정	18
〈표 Ⅰ-3-6〉 대만 타이베이시 방문 기관의 면담참여자 인적사항	19
〈표 Ⅱ-1-1〉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25
〈표 Ⅱ-1-2〉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제	27
〈표 Ⅱ-1-3〉 A교육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안)(2023년)	28
〈표 Ⅱ-1-4〉 B교육청의 선도교육청 추진과제와 실적(2023년)	29
〈표 Ⅱ-1-5〉 B교육청의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2023년)	31
〈표 Ⅱ-1-6〉 육아정책연구소 수행 유보통합 기초 연구(2023년)	32
〈표 Ⅱ-1-7〉 「정부조직법」개정(2023.12.26)	34
〈표 Ⅱ-2-1〉 정부 계획 대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2023년)	38
〈표 Ⅲ-1-1〉 「영유아보육법」개정(2024.2.6.): 일부 조항 개정 예시	44
〈표 Ⅲ-1-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45
〈표 Ⅲ-2-1〉 기초자치단체 수와 교육지원청 수의 불일치	49
〈표 Ⅲ-4-1〉 2024년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개요	58
〈표 Ⅲ-4-2〉 설립유형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59
〈표 Ⅲ-4-3〉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59
〈표 Ⅲ-5-1〉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만 5세 지원	62
〈표 Ⅲ-5-2〉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63
〈표 Ⅲ-5-3〉 보육료 지원단가: 영아	63
〈표 Ⅲ-5-4〉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유아학비 연령별 지원(월) 현황	64
〈표 Ⅲ-6-1〉 정부 계획 대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2024년)	69
〈표 Ⅳ-1-1〉 유보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장전문가 의견	76
〈표 Ⅳ-1-2〉 권역별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 여부: 현장전문가 의견	78
〈표 Ⅳ-1-3〉 유보통합 3대 쟁점에 대한 입장: 현장전문가 의견	79
〈표 Ⅳ-1-4〉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원금 교육부 권고 사항	80

---

〈표 IV-1-5〉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사립유치원 비지원 주된 이유	81
〈표 IV-1-6〉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현장 의견수렴 유무: 권역별 현장전문가 의견	82
〈표 IV-1-7〉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유보의 입장	85
〈표 IV-1-8〉 통합기관 유형 분류에 대한 입장 차이: 국공립어린이집	87
〈표 IV-2-1〉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	88
〈표 IV-2-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공통점과 차이점	89
〈표 V-2-3〉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90
〈표 IV-2-4〉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바라는 점	91
〈표 IV-2-5〉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92
〈표 V-1-1〉 대만 유보통합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 체제	98
〈표 V-1-2〉 대만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	99
〈표 V-3-1〉 대만 유보통합 전·후 설립유형 및 운영 변화	101
〈표 V-3-2〉 통합 후 유아원 유형별 정의와 특징	102
〈표 V-3-3〉 통합 후 유아원 유형 및 기본 운영 사항	103
〈표 V-3-4〉 통합 후 유아원 유형별 운영 기본 방침	104
〈표 V-3-5〉 타이베이시 사립유아원 이용 학부모 학비 지원	104
〈표 V-3-6〉 공립(병설)유아원 통합 후 주요 변화	106
〈표 V-3-7〉 공립(단설)유아원(통합 전 공립탁아소) 통합 후 주요 변화	108
〈표 V-3-8〉 비영리유아원 반별 재원아수 및 교사, 교보원 배치	109

---



## 그림 목차

[그림 II-1-1] 중앙단위의 유보통합 추진체계 구축 .....	24
[그림 II-1-2] 중앙단위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조직도(2023년) ..	24
[그림 II-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지원 체계 .....	26
[그림 III-1-1]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 신설 .....	47
[그림 III-2-1] 유보통합 이관 절차 .....	48
[그림 III-2-2]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지원 구조(예시) .....	50
[그림 III-2-3] 시도, 시군구 예산 이관·지원 방향(안) .....	51
[그림 III-3-1] 보육교사,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에 따른 의무와 권리 변화 ·	53
[그림 III-4-1] 통합기관의 운영시간 .....	56
[그림 III-4-2] 통합기관의 유형 .....	57
[그림 III-6-1] 교육부 '중앙-지방 이관 일정(안)'('23.9.25. 지방업무 이관) ·	66

---



## 1. 서론

### 가.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써<sup>1)</sup>, 2024년도에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실행과제들의 이행 정도를 다양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음.
- 최일선 현장(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성공적으로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등을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함.

### 나. 연구내용

- 정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추진일정을 준거로 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유보통합 추진 계획 및 2023년에 추진한 유보통합 실행과제들의 이행 정도를 파악함.
- 2023년에 첫 도입한 현장 대상의 선도교육청 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사례를 발굴, 분석함.
- 정부의 2024년도 유보통합 실행과제를 정리, 분석하고 2023년 이행 진단과 동일한 준거로 이행 수준을 진단함.
- 2024년 9월부터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보통합 시범사업(가칭 영유아학 교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대만의 유보통합 과정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대만은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방식과 유사하게,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 관할의 '유아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단일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참조할 만한 사례임.
-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유보통합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1) 당초 3개년 연구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도로 종료됨.

##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면담조사(원장, 교사, 학부모 등)를 실시함. 특히, 현장 전문가 대상의 면담조사가 주된 연구방법임.
  - 권역별로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집단면담조사를 실시함. 원장들 대부분이 현장 경력이 30여년 이상 고경력자임.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방향 등에 대한 자문회의 및 유보통합 실행과제의 이행 진단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 등의 자문을 구하고,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황 파악 및 연구결과와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국외출장: 대만
  - 설립유형별로 5개 유아원(유보통합기관)의 원장,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의 통합 기관의 운영 및 이용 현황을 알아봄.

## 2. 주요 연구결과

### 가.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 정부가 2023년 계획한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 정도를 파악함.
  - 계획대로 이행한 실행과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구성·운영, 선도교육청 사업,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새로운 통합모델 구상을 위한 연구,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 등임.
  - 계획 대비 미이행 또는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전문가 의견조사) 실행과제는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운영,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관련 연구 결과 시안 공개 등임.
  - 관련한 정책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유보통합 관련 쟁점 사항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면서 연구결과에 대해 현장은 잘 알지 못하는 등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와

불신이 발생함.

□ 2023년 유보통합 현장 적용 정책: 선도교육청 사업 평가

-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이라는 유보통합의 원칙을 기반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정부 계획 대비 선도교육청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면담조사 결과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음. 현행 시스템 상 교육청에서 시도청으로 재정지원 불가, 현행법상 0~2세 영아 지원 제한 등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

나.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 정부가 2024년 계획한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 정도를 파악함.

-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보육업무와 인력이 교육부로 이관 완료함. 따라서 후속 작업으로 2024년도의 주요 실행과제는 지방단위의 일원화임. 17개 시도교육청에 유보통합 추진 조직(기구)이 구성되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행 수준이 미진한 상황임.
- 중앙정부는 지난 10월 30일에 지자체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협의회는 과거 누리과정 갈등의 재현을 우려하면서 ①전출시점 명문화 ②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③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상황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시도, 시군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유보통합 현장 적용 정책: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및 통합기관(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평가

- 유보통합의 첫 시범사업이란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없이 너무나 촉박하게 진행됨. 초고속 사업 추진으로 정부와 현장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시범사업의 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기

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52개)이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의 1%도 채 안 됨. 극소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통합기관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도출한 통합모델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수용할지에 대해 우려됨.
  - 정부가 발표한 통합기관 유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한 점,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을 사립일반형으로 분류한 점, 사립일반형으로 분류된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채를 허용하므로 같은 범주에 묶인 사립유치원도 부채를 허용해 달라는 점 등 통합기관 유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음.
  - 향후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교부금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가 함께 투입해야 할 것임.
-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관련한 정부의 로드맵은 2024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 양성과정 개편을 준비해서 2026년부터 양성과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에 2024년 말까지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안이 나올 예정임.
-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실행과제는 유보통합 정책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으로서 이미 학부모 부담은 거의 없음. 따라서 이 실행과제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과로 평가하기란 한계가 있음.

## 다. 현장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 현장 전문가(원장, 교사, 전달체계 관계자 등) 대상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의견을 파악함. 특히,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선도교육청 사업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봄. 공통점은 “아이에 대한 사랑” “누리과정” “운영시간” 등임. 차이점은 유아교육은 교사양성을 주로 꼽았다면, 보육은 회계 및 입소 시스템, CCTV 설치, 정보고시 내용, 교사양성 등 차이점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옴.
  - 교사에 대한 유보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보통합 시 교사 자격·양성체계 부분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선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함. 특히, 교육청 중심의 사업이다보니 어린이집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유아교육진흥원 견학 기회를 주는 등의 일부 사례들이 있었으나, 유보 기관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현장과 교육청 간의 상호 노력은 거의 없었음.

-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현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한 개별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현장의 관심이 큼. 그러나 다수의 유보 현장은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유아교육이 “보육”에 치우친 시범사업이라고 인식하면서 보육보다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함.
-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당 1억원 내외로 지원되는데 집행항목에 운영비가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옴. 특히,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는 원아당 원비로 마련되는데 본 시범사업의 주요 골자는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고,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데 시범사업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것임. 교사대아동비율을 맞추려면 원아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운영비 결손으로 이어짐. 시범사업 예산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보육계에서는 모집단 수 자체가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데 동수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는 정부 방침을 비판함.
- 정부는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난 7월 본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큼. 또한,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면서 혼란과 불만이 더욱 커짐.
- 통합기관 명칭에 대해서 유보의 입장이 확연히 다름. 유아교육은 유아학교, 보육은 영·유아학교를 주장하는 가운데,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전문 보육·교육기관 명칭을 주장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면담에서도 문제제기를 확인함. 지난 10월 정부는 이를 취소하고 ‘제3의 유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측에서는 ‘국공립’을 주장하고 있음.

####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면담조사

-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지금의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학부모가 처한 상황(취업, 거주지 등)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함. 한 개 기관을 계속 다니는 경

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긴 경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등 많지 않은 사례지만 다양한 선택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학부모들은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은 주요한 선택 기준은 아니었음.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원하는 교육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함.

## 라. 국외사례: 대만의 유보통합

□ 대만의 유보통합 특징: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

- “통합 법” 제정을 목표로 연령 범위와 담당 부처를 정함. 10여년의 논의 끝에 주무부처는 교육부, 연령은 2~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및보육법(幼兒教育及照顧法)”을 확정함.
- 연령 통합이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2세아를 받지 않았던 기존 유치원에서 2세아를 수용하게 된 객관적 근거로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를 가져옴.
- 대만의 유보통합 전·후 기관 유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요약표 1〉 대만 유보통합 전·후 설립유형 및 운영 변화

통합 전	통합 후
공립(병설)유치원	공립병설유아원(國小附幼), 공립단설유아원(專設園)
공립탁아소	
사립유치원	사립유아원,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사립탁아소	

- 유보통합 후 기관 유형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정부 지원도 늘어남. 통합 후에 시설·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보통합은 정책의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의 출발점임. 한편, 열악한 사립유아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공공유아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변경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었음. 정부 지원은 강화하되, 지원의 기준을 엄격히 해서 상향 표 준화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함.
- 대만은 통합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함. 지방단위에서의 통합은 약 3년의 시간이(2009년~2011년) 소요됨.

서로의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 설립허가증을 통합하는 과정,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 등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이 회의를 했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함. 본 면담에 참여한 대만의 공무원은 한국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이에 교육부, 복지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구성된 “4자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가동할 것을 제안함.
- 대만의 유보통합에서 교사체계는 통합하지 못함. 통합 후에도 (유아)교사와 교보원으로 구분되어 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갈등이 남아있음. 또한, 대만의 유아교육 전문가는 대반(4~6세)을 교보원이 담당하는 점, 교보원과 교사의 급여 차이가 없어지고, 교사 업무가 많아지는 점 등을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반면, 보육 전문가는 유보통합 후에 2세아가 3~5세와 같은 기관에 통합되면서 오히려 보육의 질이 낮아졌다고 평가함.
- 교사와 교보원의 처우가 달라서 교보원은 교사가 되려고 하고, 교사는 국가 시험을 치러 공립유아원의 교사가 되려고 하면서 사립유아원들은 교사 채용이 어려움.
- 대만은 통합 후에도 정부 지원은 강화하되 유형을 단일화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함.

### 3.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

#### □ 추진 방향

- “영유아의 최우선 이익” 원칙 준수
- 정부는 지방정부(지자체, 교육청)·현장(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쌍방향” 소통
- “격차 해소”보다는 “상생의 길”
- “차근차근” 유보통합

#### □ 추진 전략 및 과제

- 쟁점사안 중점 논의를 위한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 구축
  - 지방정부 및 현장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 협의하는 체계 마련
  -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논의

- 지방정부의 재정 및 인력 이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논의
- 정부가 제시한 통합기관 5개 유형 재논의
- 지역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제고 방안: 상향식 방식으로(지자체→정부)
  - 예산이나 인력, 기관수 등 제(諸) 부문에서 보육이 유아교육보다 큼. 규모가 큰 보육이 규모가 작은 유아교육으로 통합은 많은 쟁점들이 발생함. 이에 대해 정부가 통일된 통합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음. 따라서 지역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는 지역(시도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상향식 방식을 제안함. 정부는 각 시도별 논의 결과를 수집, 분석함.
  - 시도교육청 내 유보통합전담 조직(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 지자체 보육예산 및 인력 이관 범위 논의
    - : 기관보육 외 가정양육 예산/특수시책사업 예산 이관 범위 논의
-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세부과제 조정
  - 일부 기관 선정의 공모방식보다는 모든 기관이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 운영시간 조정: 일일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 검토
  - 배치인력: 운영시간 단축과 연동됨. 또한, 농어촌 지역 등의 교직원 채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는 배치인력 기준 조정이 필요함.
  - 통합기관 명칭: 공모 및 제3의 전문분야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결정
  - 통합기관 유형 재검토: 현행 기관별 정부 지원금이 상이(예: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금과 사립유치원의 교사처우개선비가 다름)한데 이를 하나의 사립일반형으로 묶으면 어떻게 조정, 지원할지 등의 문제
- 통합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화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대만은 유보통합으로 기관 유형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림.
- 관련 법·제정, 교사 자격·양성 개편 등 핵심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게 접근함.

# I

##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이 포함되었다. 국정과제 46번(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84번(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을 공통으로 적시하였다. 국정과제 46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국정과제 84번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다. 같은 국정과제가 두 부처에 들어가 있는 국정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 출범 후,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준비팀 출범·운영(‘22.9.14),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대상 간담회 실시(‘22.12.15~16, 교육부·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논의(‘22.11.24), 고위당정 협의(‘22.12.18),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위한 (총리)훈령 제정(‘23.1.)을 추진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3)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30일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5).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1단계(‘23~‘24년)에서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통합을 위한 제반 마련을, 2단계(‘25년)는 본격적 추진(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이라는 하향식 방식(top down)을 취했다. 요컨대, 먼저,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2023년 중앙 단위 일원화), 교육청 중심으로(2024년 지방 단위 일원화) 2025년에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상향식 방식(bottom up)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sup>2)</sup>

2)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방식은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2단계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추진” 3단계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임(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3).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3단계까지 가지 못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확정함으로써 부처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란은 종식하고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sup>3)</sup>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을 완료하였고,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정부 업무포탈,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해 연말에 통과되어 올해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교육부 보도자료, 2023.12.08.) 가장 핵심적인 실행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대로 2025년부터 현장에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교사 자격·양성 체제, 통합기관의 시설기준 및 명칭 등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유보 이원화 체계가 오랫동안 지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쉽게 풀기 어려우며 최일선 현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의 복잡성은 더욱 심하다. 따라서 현정부처럼 하향식 유보통합 방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일선 현장(어린이집, 유치원 등)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반발에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설립·운영한 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sup>4)</sup> 현장과의 소통은 필수조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써<sup>5)</sup>, 2024년도에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실행과제들의 이행 정도를 다양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최일선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성공적으로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등을 파악하여 현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한 대만 사례 역시, 다양한 유형의 유아원을

3) 2023년에 유보통합을 주제로 공식적인 포럼이나 국회토론회가 총 7회 개최되어(문무경 외, 2023: 52-53)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들이 표출됨.

4) 유치원 전체 원아수 521,794명 중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359,133명이며 어린이집 전체 아동수 1,011,813명 중 민간과 가정의 아동수가 각각 420,219명, 159,864명임(육아정책연구소, 2023: 24).

5) 당초 3개년 연구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도로 종료됨.

방문하여 현장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전체적인 유보통합 추진 계획 및 2023년에 추진한 유보통합 실행과제들의 이행 정도를 파악하되 정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추진 일정을 진단의 준거로 삼았다.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실행과제와 그렇지 못한 실행과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보통합 토대 마련을 목표로 2023년에 첫 도입한 “선도교육청 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사례를 발굴, 분석하였다.

둘째, 정부의 2024년도 유보통합 실행과제를 정리, 분석하고 2023년 이행 진단과 동일한 준거로 이행 수준을 진단하였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보통합 시범사업(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대만의 유보통합 과정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만은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 관할의 ‘유아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단일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유사한 방식이란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또한, 대만은 2018년, 2022년에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등 유보통합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유보통합을 이끌어 낸 과정뿐 아니라 현재에 주목하여 우리가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유보통합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조사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추진 방안(계획안), 법령 및 관련 뉴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보고서, 유관 학회나 단체 등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자료집, 대만 유보통합 선행연구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 나. 면담조사

유보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호응과 참여가 절대적이다. 특히, 정부가 교육부로 0~5세 영유아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하향식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하는 조사방법을 통해 정부정책을 보완·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권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집단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과정에서 정부조직 발표(6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발표(7월)가 나오면서 면담내용이<sup>6)</sup>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1) 어린이집 원장·교사 및 보육 관계자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교사 및 보육관계자(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28명이다. 권역별로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집단면담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경력력이 최대 43년6개월, 최소 12년으로 보육 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한 고경력자들로, 보육정책의 역사를 함께 한 현장전문가들이었다. 어린이집 교사 면담은 보육교사 연합회 관계자 대상으로 서면으로 실시하였다.

〈표 I-3-1〉 보육 현장전문가 면담 사례

지역	날짜	기관유형	연령	최종학력	총 경력	전공	비고
수도권	6.3	국공립	60대	대학원졸	39년 4개월	유아교육	-
		국공립	50대	대학원졸	16년10개월	아동학	
		민간	50대	대학원졸	24년 5개월	유아교육	
		가정	50대	대학원졸	27년10개월	사회복지	
	6.25	국공립	50대	대학원졸	26년	유아교육	-
		민간	50대	대학원졸	17년7개월	유아교육	
		가정	50대	대학원졸	18년	유아교육	
	7.31	국공립	40대	대졸	22년8개월	사회복지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
12.10	국공립	40대	대학원졸	19년6개월	유아(특수)교육	-	

6) 부록 면담지 참조

지역	날짜	기관유형	연령	최종학력	총 경력	전공	비고	
강원권	8.22	육아종	50대	대학원졸	38년	유아교육	-	
		국공립	40대	대학원졸	23년2개월	유아교육	시범사업 참여	
		민간	60대	대졸	25년	아동학	-	
		가정	60대	대졸	30년9개월	아동학	공공형	
경상권	9.3	육아종	60대	대학원졸	20년	사회복지학	-	
		국공립	50대	대학원졸	17년	아동복지학		
		법인·단체	50대	대학원졸	28년2개월	교육학		
		민간	70대	대학원졸	23년3개월	상담심리		
		가정	60대	대학원졸	30년6개월	유아교육		
충청권	9.9	육아종	50대	대학원졸	28년	유아교육	-	
		국공립	60대	대학원졸	34년8개월	유아교육		
		법인	50대	대졸	36년7개월	유아교육		
		가정	50대	대학원졸	15년6개월	아동학		
		민간	60대	대졸	43년6개월	보육학		
전라권	9.11	육아종	50대	초대졸	32년	유아교육	-	
		국공립	40대	대졸	23년	아동학		
		사회복지법인	40대	대학원수료	12년4개월	아동가족학		
		민간	50대	대학원졸	26년4개월	유아교육		공공형
		가정	40대	대학원졸	16년	아동가족학		공공형

주: 육아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준말

## 2) 유치원 원장<sup>7)</sup> 및 교사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는 총 21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사립 원장이 19명으로 사립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8)</sup> 어린이집 원장 면담과 동일하게 권역별로 집단면담으로 실시하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경력도 최대 42년 6개월, 최소 11년 3개월로 대부분이 고경력의 현장 전문가들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현장에서 유아교육 정책의 역사를 같이 해 왔다.

7) 국공립유치원은 교사 포함

8) 현재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공립유치원은 연합회 관계자 대상으로 서면으로 실시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함.

〈표 I-3-2〉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면담 사례

지역	날짜	기관유형	연령	최종학력	총 경력	전공	비고
수도권	7.9	사립	50대	대학원수료	30년	유아교육	-
		사립	50대	대학원졸	32년	유아교육	
	8.7	사립	60대	대학원졸	37년	유아교육	-
		사립	50대	대학원졸	30년3개월	유아교육	-
	9.5	사립	60대	대학원졸	33년	유아교육	-
강원권	9.24	사립	50대	대학원졸	35년7개월	유아교육	-
		사립	40대	대학원수료	12년7개월	유아교육	온종일 돌봄사업
		사립	50대	대학원졸	30년	유아교육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
경상권	10.4	사립	50대	대학원졸	37년	유아교육	-
		사립	60대	대학원졸	30년10개월	유아교육	
		사립	50대	대학원수료	36년	유아교육	
	6.4	공립	30대	대졸	14년 3개월	아동학	선도교육청 사업참여
		공립	30대	대학원졸	11년 3개월	유아교육	
충청권	9.30	사립	60대	대학원졸	42년6개월	유아교육	-
		사립	50대	대학원졸	33년5개월	유아교육	
		사립	60대	대학원졸	28년8개월	유아교육	
전라권	10.7	사립	50대	대졸	25년	유아교육	-
		사립	50대	대학원졸	22년8개월	유아교육	
		사립	60대	대학원졸	23년	유아교육	
		사립	50대	대졸	20년	유아교육	
		사립	60대	대학원졸	15년6개월	유아교육	

###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유보통합의 정책수요자인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자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학부모,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학부모와 비참여 기관의 학부모 등을 고려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3-3〉 영유아 학부모 심층 면담 사례

구분	현재 이용기관	연령	최종학력	자녀수	직업	비고
1	병설유치원	41세	대학원졸	1명	주부	선도교육청 거점형 방과후 운영사업 경험
2	구립어린이집	41세	대학원졸	2명	주부	자녀 2명 같은 어린이집 재원 중
3	사립유치원	38세	대졸	1명	교사	-
4	구립어린이집	44세	대졸	2명	사무직	선도교육청 사업 경험: 부모교육
5	사립유치원	44세	대졸	1명	알바	-
6	사립유치원	40세	대졸	1명	주부	-

####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유보통합추진단에는 정책연구를 수행, 자문 역할을 하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문단은 일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유아교육, 보육, 특수교육 등 총 12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방향과 정책자문 등을 얻고자 이들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마무리단계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과제의 이행 진단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10월말~11월초). 의견조사에는 자문단 위원 총 12명 중에 7명이 참여하였다.

####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연구 관련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 등의 자문을 구하고,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황 파악 및 연구결과와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표 I-3-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현황

날짜	소속	직책	안건
3.21.	유보통합 추진단	과장	- 2023년 개발 성과지표(관리체계일원화) 등 연구결과 공유 - 관리체계일원화 관련 법 개정이 2024년 연말 입법 예정이라 기 개발 성과지표 적용은 어려움 - 2023년 수행한 선도교육청 사업 중심으로 분석 제안
4.24./12.16.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팀장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 연구결과 및 정책방안 중심으로 자문
4.26.	A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 추진 현황
5.2.	B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 2024년 선도교육청 계획 - 지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등
11.3	교육부 담당자		- 연구결과 및 정책방안 중심으로 자문

## 마. 국외출장

2012년에 교육부 체제로 유보통합을 한 대만을 방문하여 설립유형별로 5개 유아원(유보통합기관)의 원장,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의 기관의 운영 및 이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당시 유보통합 정책을 최일선에서 직접 체험한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학계 전문가를 통해 유보통합 이후 현재 대만의 현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만 타이베이시를 2024년 5월 21일~5월 25일 방문하였다.

〈표 I-3-5〉 대만 타이베이시 출장 일정

날짜	주요활동	면담참여자
5. 21(화)	• (오전) 김포공항	출국
	• (오후) 유보통합 기관 사립유아원(통합 전 사립 유치원) 방문 및 면담	집행장(설립자), 원장, 학부모(외벌이 가정)
5. 22(수)	• (오전) 유보통합 기관 공립유아원(통합 전 공립 유치원) 방문 및 면담	원장, 학부모(외벌이 가정)
	• (오후) 유아교육 전문가 면담	대만시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5. 23(목)	• (오전) 지방정부 취학전 교육 담당공무원 면담	취학전 교육 담당 과장
	• (오후) 유보통합 기관 사립유아원(통합 전 사립 탁아소) 운영자 면담	원장
5. 24(금)	• (오전) 유보통합 기관 비영리유아원(통합 전 사립탁아소) 방문 및 면담	원장, 학부모(맞벌이 가정)
	• (오후) 유보통합 기관 공립유아원(통합 전 공립 탁아소) 방문 및 면담	원장
5. 25(토)	• 타오위안 공항 출발	입국

〈표 I-3-6〉 대만 타이베이시 방문 기관의 면담참여자 인적사항

날짜	원장 및 전문가	학부모
5. 21(화)	- Hsiao Min-Fe 설립자, 라이웨이린 원장 : 원장경력 43년/석사/60대	- 맞벌이 가정 - 자녀 2명 *첫째 자녀가 다닌 유아원을 둘째 자녀가 다님
5. 22(수)	- 李淑華 원감 : 원장경력 27년9개월/대학원졸/59세	- 다자녀 가정: 자녀수 4명 *자녀 모두 같은 유아원 다님 - 외벌이 가정
	- 대만시립대 유아교육과 Pei-Jung, Lin 교수 *창의과학교육체험관 소개	-
5. 23(목)	- Hsieh, Chung-Wei 지룽시 과장	-
	- 林才寧 (행정)원장 : 원장경력 22년11개월/대졸/62세	-
5. 24(금)	- 林意紅 원장 : 원장경력 15년/석사/53세	- 맞벌이 가정(부부) - 자녀 2명 *첫째 자녀가 다닌 유아원을 둘째 자녀가 다님
	- 陳玟秀 원장 : 원장경력 6년10개월(교사경력 30년) /대학원졸/58세	-

주: 1) 모든 기관의 학부모 면담 주선을 요청했으나, 섭외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진행함.  
2) 교사 면담은 면담시간이 근무시간이라 진행하지 못함.



# II

##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01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추진 성과

02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 II.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이 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유보통합 정책에서 1차년도(2023년)에 추진한 실행과제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였다. 진단의 일차적 근거는 정부가 2023년 1월 30일에 발표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실려있는 과제별 추진 일정(안)이다. 다음으로 과제별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과제, 그렇지 못한 과제 등 추진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규명하여 일차적 이행진단 결과와 종합해서 최종 이행진단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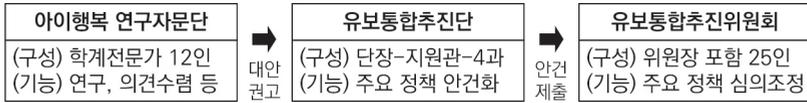
### 1.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추진 성과

####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정부는 2023년 1월에 발표한 대로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신설하고(2023년 1월 30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했으며(2023년 4월 4일),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공무원이 담당하였다.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연구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추진단에 통합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단은 이를 정책화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구조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2023년에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였다(4.4., 7.28.,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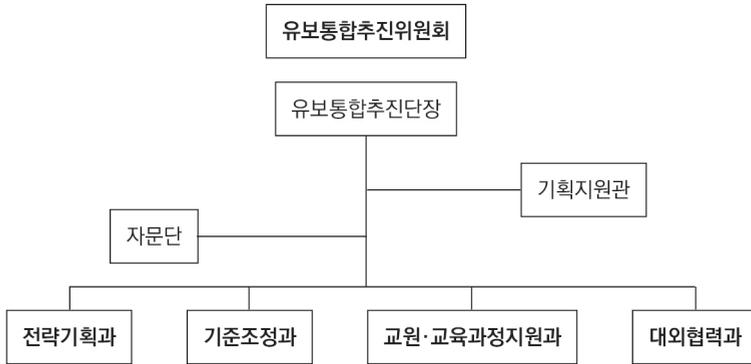
[그림 II-1-1] 중앙단위의 유보통합 추진체계 구축



\* 전체 회의, 설문, 포럼, 간담회 등을 종합하여 정부에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권고

자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7.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p.1.

[그림 II-1-2] 중앙단위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조직도(2023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3.1.30.), 유보통합 추진 방안, p.7.

이들 3개 추진체계가 공식적, 대외적으로 개최한 회의는 2023년 10월 19일~20일 1박2일 간 개최한 워크숍으로 2023년 연말에 발표할 “유보통합 모델 시안” 및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교육과정, 교사자격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2023년 추진체계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계획한 실행과제는 모두 이행하였다. 추진위원회와 연구자문단 구성을 2023년 상반기(4월)에 구성하였고, 운영에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추진위원회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등 상하반기 모두 개최하였고, 연구자문단도 연구 수행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였다.9)

한편, 과제별 추진 일정표에는 없으나, 중앙정부는 2024년에는 지역단위의 유보통합을 추진을 위해 업무, 재원 등의 이관 범위와 인력규모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주체로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회”10)을 구성하였다(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7.28.; 1).

9) 연구별로 회의를 개최했으므로 정확한 횟수는 발표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 나. 격차 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선도교육청 사업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2025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3년부터 일부 시·도 교육청을 선정하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현장에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03.13).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이라는 유보통합의 원칙을 기반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였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운영 방법에 대한 계획은 다음 <표 II-1-1>와 같다.

<표 II-1-1>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원칙	운영 분야	대상	적용범위	선정규모
① 국민안심	■ 급식비 격차 완화	어린이집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 교육청
	■ 유아학비 경감	유치원		
	■ 방과후 과정보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내 3그룹 이상	4-5개 교육청
	■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내 20개 기관 이상	2개 교육청
	■ 안전환경 조성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② 다양 ③ 자율 ④ 지역중심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03.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p.2.

10) 중앙·지방이 “재정확보, 인력 지원 등 노력, 유보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4자 공동선언을 함(2023. 7. 14).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담당 과제별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사전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선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통해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및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II-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지원 체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03.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p.2.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선도교육청 사업은 2023년 5월 9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하여 출범하였으나 이후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문무경·박창현·정유나, 2023: 47). 교육부에 따르면 초기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지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 지자체 58억 원)을 지원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05.15). 추진과제에 따른 담당 선도교육청은 다음 <표 II-1-2>와 같다.

〈표 II-1-2〉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제

분류	추진 과제	담당 선도교육청
지원 격차 완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유아학비 경감	대구, 광주
돌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대구, 경기, 경북
	방과후 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경북
발달지원	장애영유아 조기진단 지원	대구
	영유아 발달검사·전문기관 연계 등	충북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대구, 세종, 강원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충북
	안전체험교육	세종
	유아 체험활동 지원	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남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네트워크	서울, 부산
	어린이집-유치원 환경경 개선	서울
교사·학부모 역량강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서울, 대구, 세종, 충북, 전북, 경남
	학부모의 자녀 양육역량 강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안전 환경 조성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조성	서울

자료: 1) 교육부 보도자료(2023.05.15.). 영유아 중심 차별 없는 교육·돌봄을 선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p.1.  
 2) 문무경, 박창현, 정유나(202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1). 육아정책연구소. pp.48-52.

일부 선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외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조성,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원 연수 상호 개방, 현장 밀착형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을 통해 교원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부모 행복교실을 운영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거점형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집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 장학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집중하였고 특히 만 3~5세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안전, 문화예술 등 유아 체험 프로그램 지원, 장애 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05.15.).

1) 사례 1. A교육청

A교육청은 2023년 3월~4월에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도청 유보통합실무추진팀과 같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과제 협의 및 발굴을 계획하였다(A교육청 내부자료, 2023.4.; 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유치원은 유아당 일일 평균 2,595원을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 1일 1,000원을 도 40%, 시군 60%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A교육청 내부자료, 2023.4.; 11).

〈표 II-1-3〉 A교육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안)(2023년)

구분	유치원(급식비)		어린이집(급간식비)	
	2023(1년)	비고	2023(6개월)	비고
지원인원	14,161명	유치원 재원아 전체	38,000명 (0~2세 20,520명 3~5세 17,480명)	
지원단가	평균 2,595원	식품비+운영비	1,000원	급간식비
지원일수	연 220일	수업일수 범위	월 20일 이내	
총소요예산	8,100백만원	*전액 급식비로 사용(간식비 불가)	4,560백만원	
재원분담	교육청 100%		도40%시군60%	

자료: A교육청 내부자료(2023.4.).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서, p.11.

면담에서 교육청 예산이 시도청으로 전달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비용 지원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재원에서 각자 분담하는 구조이다.

우리(교육청) 재원이 어린이집하고 도청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에다 사업을 보내주고 유치원하고 동시에 적용해서 단계적인 통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막히는 게 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A교육청 면담).

이외에도 유아교육진흥원(3~5세)과 육아종합지원센터(0~5세)를 상호 개방, 교류한다(A교육청 내부자료, 2023.4.; 22).

2) 사례 2. B교육청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을 잘 수행한 교육청으로 추천받은 B교육청의 추진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청별로 추진과제는 다른데, B교육청은 유아학비 경감부터 지역협의체 운영에 이르기까지 9종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유아학비 경감과 장애영유아조기진단비지원확대 사업 일부는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였다.

면담에서 교육청 예산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린이집으로의 직접적인 비용지원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도 지역단위로의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관리자급의 “유보통합 정책추진단”과 실무자급의 “유보통합 정책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는 1회, 후자는 2회 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II-1-4〉 B교육청의 선도교육청 추진과제와 실적(2023년)

추진과제	대상	예산 (단위:천원)	추진개요	추진실적
유아학비 경감	사립 유치원	5,028,600 (교육청)	• 학부모 유아학비 경감 (대상)3-5세 유아 (금액)유아 1인 월5만원	• 9~11월 유아학비 확대 지원금 지급
거점형방과후 과정 운영	공립병설 유치원	320,320 (특교)	• 중심유치원(1개)에서 협력유치원(2개) 돌봄 운영 (시행시기)2023.7~	• 공모로 4개팀 선정 - 방학중 특색프로그램 운영, 통학차량, 급 간식 제공
2019 개정누리과정 운영지원	어린이집	74,892 (특교)	• 유보 및 유초연계교육,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 방법 관련 컨설팅 장학 현장지원자료 보급 (시행시기)2023.9~	• 원장연수실시(9월) 378명 • 보육교사 직무연수 및 컨설팅 장학(10~12월), 240명 • 현장중심 유보이음 연수 실시(9~12월), 3지구 363명 • 현장지원자료 제작 및 보급(11월), 기관당 1부(1,079부)
유아체험 활동지원		43,200 (특교)	• 00유아교육진흥원체험 지원 (대상)어린이집 3-5세 유아 (내용)누리및안전체험,특별체험 (시행시기)8월~	• 누리및안전체험 - 8.4-8.18, 1057명 (53개 기관) • 유아특별가족체험

추진과제	대상	예산 (단위:천원)	추진개요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432명(108가족)</li> <li>• 테마형유아체험프로그램</li> <li>- 10~11월, 378명(24개기관)</li> </ul>
상담운영		26,728 (특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및부모, 교원 상담운영 (내용)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MBTI 활용 집단상담 (시행시기) 2023.10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li> <li>- 10~12월, 유아 19명, 부모 14명, 교원 20명</li> </ul>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확대	0~5세 공통	94,000 (특교) 9,985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장애조기진단비 지원 (대상)0~5세 영유아 (금액)500천원 이내(1인 실비) (시행시기)9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확대 안내및홍보</li> <li>- 공문안내 및 홍보포스터 제작·배부</li> <li>• 조기진단비 지원</li> <li>- 9~12월, 252명</li> </ul>
영유아 부모교육영상 제작	유치원 어린이집	714,000 (특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제작 (시행시기) 10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관련 부모교육 다큐멘터리 제작</li> <li>- '23.11~'24.2.3편 제작중)</li> <li>• 학부모 토크 콘서트 운영 및 영상물 제작 보급</li> <li>- '23.12.4., 200명</li> </ul>
지역협의체 운영	교육청 시군구	10,000 (특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시청간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내용)보육업무 이관사항 협의 등 (시행시기)9월, 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추진단: 35명</li> <li>• 실무협의체: 50명</li> <li>*총3회 실시(2023년)</li> </ul>

자료: B교육청 내부자료(2024.1.19.),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최종결과 보고서, p.9.

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한 사업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보이음 연구 및 영유아부모교육영상제작, 그리고 지역협의체 운영이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거점형방과후과정운영을 꼽았다(본 면담조사 결과). 자체 실시한 학부모만족도 결과는 97.2%였다(B교육청 내부자료, 2024.1.19.; 3).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족한 이유가 타 기관에 비해 방학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었는데, 방학 중에도 통학 차량을 운행해서 협력유치원의 유아들이 중심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면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의(표 II-1-5 참조) 돌봄서비스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운영 측면에서 유보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1-5〉 B교육청의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2023년)

교육 지원청	유치원(개)		현황(개, 명)			추진내용
	중심	협력	학급수	전체유아수	참여유아수	
동부	1	2	1	1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li> <li>• 놀이중심 교육활동 및 돌봄서비스 제공(8:00~19:00)</li> <li>• 외부업체를 활용한 점심도사탁 제공 및 통학차량 운행</li> <li>• 요일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및 원내·외 체험활동 운영</li> </ul>
서부	1	2	2	48	43	
남부	1	2	3	64	60	
**	1	2	2	51	44	
합계			8	180	166	

자료: B교육청 내부자료(2024.1.19.),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최종결과 보고서, p.3. 표와 내용 재구성

B교육청의 선도교육청 사업에서 유보이음 연수(3지구, 11개원, 363명), 컨설팅 장학 운영(4회, 89명), 현장지원자료 제작 및 보급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자체 만족도 조사는 어린이집원장 연수 81.3%, 2019 개정누리과정 운영의 실제 연수 96.8%, 현장 방문 연수 99.6%로 대체로 높게 나왔으나(B교육청 내부자료, 2024.1.19.; 4), 어린이집원장 연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3) 정책연구 수행

1단계의 목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김아름 외, 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자원 분석 및 이관 방안”(최효미 외, 202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연구: 비용지원을 중심으로”(양미선 외, 2023),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박창현 외, 2023)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김아름 외(2023) 연구에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지원을 위한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가정양육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각 경우별 기관들의 업무 이관 방향과 역할, 업무범위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최효미 외(2023)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의 이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이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원 이관 규모에 대한 3가지 경우의 시나리오와 장단점, 부담 주체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원 이관 방법도 4개의 시나리오로 제안하고, 재원 이관 시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미선 외(2023)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용 격차 발생 항목을 도출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발생 항목은 만 3~5세 유아 방과후 지원 단가, 급간식 추가 지원 단가, 만 0~2세 부모 부담 경비 지원으로 도출하여 각 항목별 단가 인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창현 외(2023) 연구에서는 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아, 유아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으로 연결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과제를 9가지 측면으로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별 추진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세부 과제별 담당부서도 제안하고 있다.

〈표 II-1-6〉 육아정책연구소 수행 유보통합 기초 연구(2023년)

구분	연구목적	정책제안
김아름 외(20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업무 분석을 진행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지원을 위한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li> </ul>	<input type="checkbox"/>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육업무, 통합 모델 마련 전 어린이집 성격 정의, 통합모델 마련 외 유관 법률 정비 필요</li> <li>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제외하는 경우와 이관 대상 가정양육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추진방향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아교육·보육 유관기관들의 업무 이관 방향을 정리함.</li> <li>- 2단계 추진방향에서는 업무 이관 후 각 기관들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리함.</li> </ul> </li> </ul>
최효미 외(20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보통합의 이행이 원활하기 진행되기 위해 재정의 통합 혹은 이관의 선제적인 방향과 이를 위한 효율적인 이관 방안을 제안함.</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 이관 규모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가지 시나리오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A: 현행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 전체</li> <li>- 시나리오 B: 표준보육비용 적용한 연간 추계액만 큼 이관</li> <li>- 시나리오 C: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예산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만큼 이관</li> </ul> </li> <li>각 시나리오별 장단점, 부담 주체별 비중 산출</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 이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의 이관 흐름을 중심으로 4가지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1: 부담주체별 분담금 전출</li> <li>- 시나리오2: 현행 국고보조금 흐름 확장 형태 이관</li> <li>- 시나리오3: 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비 형태</li> </ul> </li> </ul>

구분	연구목적	정책제안
양미선 외(20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항목을 파악하고,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4: 지방 교부세 조정(인하)를 통한 이관</li> <li><input type="checkbox"/> 법령 개정(안) 예시 제시</li> <li><input type="checkbox"/> 만3~5세 유아 방과후 과정비 지원단가 인상 방안</li> <li>• 3가지 안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 공립유치원 방과후 고정 전담교사 급여 기준</li> <li>- 2안: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기준</li> <li>- 3안: 사립유치원 최저임금 기준 적용</li> </ul> </li> <li>• 방과후 과정비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소요 재정 규모를 추정함.</li> <li><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단가 산출</li> <li>• 2가지 안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질 높은 급간식 제공</li> <li>- 2안: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단가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출기준과의 차액분 추가 지원 목적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li> <li>- 3안: 사립유치원 최저임금 기준 적용</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만0~2세 부모부담경비 지원</li> <li>• 생애 최초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 제안</li> <li><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유치원 협력사업 제안</li> </ul>
박창현 외(20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장애영아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영아 교육이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우선순위 및 차순위 정책과제 요약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는 9가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계', '기관 운영', '재원·재정지원 체계', '행정 및 전달체계', '법제도',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장애영아 디지털 관련' 으로 나누어 선정함.</li> </ul> </li> <li>• 장애영아 유보통합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가지 정책과제별 추진시기를 단기(1~2년), 중기(5~6년), 장기(~10년)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세부 과제별 담당부서를 제안함.</li> </ul> </li> </ul>

- 출처: 1) 김아름·최윤경·심현기·박유경(2023).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 1-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최호미·김태우(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자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1-1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양미선·김동훈·정유나(2023).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 지원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1-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박창현·박은정·김경희·이금규(2023). 장애영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1-2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사, 교육·보육과정, 통합모델기관, 재정 관련한 연구들을 수탁과제로 발주하였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연구자문단, 추진단과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10.19). 그

러나 추진단에서 수행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다. 관리체계 교육부로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023년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6월 부터 시행 예정(교육부, 2023.12.08)이었다. 이로써, 2024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표 II-1-7〉 「정부조직법」개정(2023.12.26)

기존	개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교육부)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자료: 법제처 사이트, 정부조직법 검색,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 라. 시도교육청 내 유보통합 조직 구성

2023년 10월 기준으로 모든 17개 시도-시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문무경·박창현·정유나, 2023: 58). 유보통합 협의체 규모는 최소 4명에서 최대 53명의 규모로(문무경 외, 2023: 58)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하는 체계이며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와의 연계 조직 외에 유보통합 실무협의체와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한 곳은 부산, 대구, 경기, 충남 4개 지역이다(문무경 외, 2023: 58; 2023년 10월 기준).

## 2.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첫 해인 2023년에 추진 계획이었던 실행과제들의 이행 정도에 대해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와 본 면담조사를 통해 진단하였다.

정부 계획대로 이행한 실행과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구성·운영,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정부 방안 발표(2023.7.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2023.11.16.), 새로운 통합모델 구상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논의,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이다.

반면,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실행과제로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마련이 필수인데, 관련한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실행과제가 2023년 하반기 이행이 계획이었으나, 2024년 현재까지(12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을 위한 정책연구는 수행했으나, 연구결과 등 시안을 발표하지 못했고, 연구보고서는 지금까지(12월) 미공개 상태이다.<sup>11)</sup>

계획대비 이행한 실행과제라 하더라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평가는 또 다른 내용이다. 가령, 선도교육청 사업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 도청으로의 시스템적으로 재정지원 불가, 현행 법상 0~2세 영아 지원 제한<sup>12)</sup> 등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미정(2023)도 선도교육청 사업이 정부가 기대한 지역중심 유보통합모델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1단계의 정책목표인 어린이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에 대한 현장의 체감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아 보인다(본 면담조사; 현장전문가, 학부모 면담 조사 결과).

또한, 관련한 정책연구들이 계획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쟁점 사항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없었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내지는 미흡하게 진행되면서 연구결과에 대해 현장은 잘

11) 정책연구보고서는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임.

12) 어린이집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이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알지 못했고,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와 불신이 발생하였다.

다음은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위원들의 유보통합 실행과제의 이행수준을 진단한 조사 결과이다. 유보통합 정책 및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문단위원들의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 진단은 상당히 많이 달랐다. 본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모두가 이행했다고 진단한 실행과제는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유보통합추진위원 및 자문단 구성·운영)”뿐이었다.

전문가3을 제외한 전문가들은 “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의 “시도교육청 수요조사”와 ④ 는 이행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3은 “수요조사가 포괄적이고도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부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모든 전문가가 미이행으로 평가한 실행과제는 “③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의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이다. 해당 실행과제는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계획했으나 2024년 하반기까지도 미추진 중이다.

“이관 업무정원조직(중앙, 지방) 분석”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4명은 대체로 중앙 단위의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지방 단위 분석은 미흡했다고 평가하였다. 지방 단위 분석도 완료했다고 평가한 전문가 3명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④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연구결과 시안 공개”에서 미이행(x)이 가장 많은 세부 실행과제는 “연구결과 등 시안공개”이다. 이는 앞서 “통합기관 모델 관련 정책연구 추진” 세부 실행과제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책연구는 추진했으나(전문가 2명 제외), 연구결과 시안은 공개하지 않았거나 미흡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3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으며 2명은 일부 이행 또는 추진 미확인으로 평가하였다. 이행했다고 평가한 전문가 1과 5는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함”이라고 평가하였다. 미이행으로(x) 평가한 전문가들은 “연구결과와 시안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유가 없었음” “시안은 2024년 6월 27일에 발표함”(일정 미준수) 등등의 근거로 미이행을 진단하였다.

일부 이행 또는 미확인으로 평가한(△) 전문가3과 전문가4는 각각 “연구보고서는 제출했으나, 교육부 정식 발표가 아니고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들었음” “연구결과 시안이 복수 안이 제시되고 구체성이 부족함”의 이유로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유보통합 정책을 자문하거나 정책연구에 참여한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의 전문가들 간에도 동일한 실행과제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2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실행과제의 세부 실행과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3년 11월 16일자로 해당 세부 실행과제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7명의 전문가들 중 2명만이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3은 “논의가 전혀 없어서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다”고 했고, 전문가7은 “시행령은 개정되었지만 아동을 위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미흡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이행이 완료된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유보통합이란 중요한 국정 과제 실행에 있어서 자문단 전문가들과 공유없이 추진한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정대로 실행과제를 완료했으므로 해당 실행과제는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표 II-2-1〉 정부 계획 대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도(2023년)

항목	일정	'23년		문헌분석을 통한 이행진도	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이행진도															
		상	하		진문가1	진문가2	진문가3	진문가4	진문가5	진문가6	진문가7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23~'25																				
	■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
[1단계: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	○	○	○	○	○	○	○	○	○	○	○	○	○	○	○	○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및 '선도교육청 운영계획' 발표			△/ 7월·9월 발표	○	△	△	△	△	△	△	△	△	△	△	△	△	△	△	△
	- 선도교육청 운영(교육장별 지원 실시)			○	○	○	○	○	○	○	○	○	○	○	○	○	○	○	○	○
	②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			△	○/X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관리시스템 등) 관련 자문단 논의			○	○	○	○	○	○	○	○	○	○	○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	○	X	△	△	△	X	○	○	○	○	○	○	○	○	○	○
	- 민0~2세 무상보육(계속)			○	○	○	○	○	○	○	○	○	○	○	○	○	○	○	○	○
	③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 이관 업무·정원·조직(중앙, 지방) 분석			○	X(지방)	△(지방)	△	△	△	△	△	△	△	△	△	△	△	△	△	△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수립			○/7월	X(재정)	△(재정)	△	△	△	△	△	△	△	△	△	△	△	△	△	△
	-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운영			△	○	△	△	△	△	△	△	△	△	△	△	△	△	△	△	△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항목	일정	'23년		문헌분석을 통한 이행진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이행진단							
		상	하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전문가6	전문가7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X	△	△	△	X	○	○	○
④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지문단 논의				○	○	○	△	○	○	○	○	△
- 통합 기관 모델 관련 정책연구 추진				○	○	○	△	○	○	○	○	△
- 연구결과 등 시안 공개				X	○	X	△	△	○	○	X	X
- 표준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				○	○	○	△	○	○	○	○	○

주: 1) 자료에서 2023년에 계획된 과제들만 발췌함.  
 2)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계획대로 이행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그렇지 않으면 ×, 일부 이행 및 추진 미확인은 △로 표기함.  
 3) 괄호 표시는 괄호안 내용으로 평가한 것임. 중앙은 했으나 지방은 분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3.1.30).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유보통합 추진 방안, p.19.



# III

##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 01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 02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 03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양성 통합
- 04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및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05 학부모 부담 경감
- 06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 Ⅲ.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이 장에서는 2024년에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계획 대비 이행정도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 가. 추진체계 운영

###### 1) 중앙정부

정부는 2023년에 구성·운영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2024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표 II-2-1 참조).

올해 첫 회의인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가 2024년 6월 27일 개최하였다. 이 회의 직후,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위원장(교육부장관)이 발표하였다. 제3차 회의가 2023년 9월13일에 개최되었으므로 거의 9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다. 정부 계획에는 일 년에 몇 회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단에서 정책화 안건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적었다는 것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정부는 2024년에는 지역단위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육업무 관련 조직과 재정을 이관하고 조례 개정 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 2) 지방정부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유보통합을 위한 전담 조직이 교육청별로 명칭이 다르지만,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24년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로 구성된 “4자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소관 부처와 업무 개정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에 「영유아보육법」 법률 소관부처와 업무의 주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업무의 중앙 단위 지원 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제8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제7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제31조의2)의 관할도 교육부로 변경되었다.

〈표 III-1-1〉 「영유아보육법」개정(2024.2.6.): 일부 조항 개정 예시

기존	현행
제4조(책임) ①~④	제4조(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b>교육부에</b>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내용은 좌동)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b>교육부장관</b> 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이하 내용은 좌동)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b>교육부장관</b>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b>교육부장관</b> 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1조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b>교육부장관</b> 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사이트, 정부조직법 검색,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본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개정안은 다음 <표 III-1-2>와 같다. 교육부 직무에 영유아 보육·교육을 추가하였고,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은 교육복지늘봄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영유아정책국이 함께 명시되었다.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은 삭제되었고, 초등 방과후 학교도 늘봄학교로 변경하였다. 신설 조항은 교육부의 새로운 조직인 영유아정책국에 관한 내용으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이다.

<표 III-1-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에 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둔다.	②.....교육복지늘봄지원국·영유아정책국.....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복지돌봄지원국) ①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2조(교육복지늘봄지원국) 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1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삭 제>
12.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2.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수립·시행
1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의 개선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4.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삭 제>
15. 초·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총괄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4.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현행	개정안
	<p>7.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p> <p>8. 영유아 교육·보육의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p> <p>9. 영유아 교육·보육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p> <p>10.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원 계획 수립·시행</p> <p>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p> <p>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p> <p>13.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p> <p>14. 유치원·어린이집의 설립·운영 지원</p> <p>15.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가</p> <p>16. 유치원·어린이집의 안전·건강·보건·급식 등에 관한 사항</p> <p>17.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p> <p>18. 영유아 교육·보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p> <p>19.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 추진 총괄</p> <p>20.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 세부기준 수립 총괄</p> <p>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p> <p>22.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p> <p>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p> <p>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p> <p>25. 영유아 교원의 양성·자격·임용·연수 총괄</p> <p>26. 영유아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p>27.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p> <p>28.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p> <p>29.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p>

자료: 행정안전부(2024.06.0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pp.10-15. 일부 조항 발췌.

## 다.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 신설: 보건복지부 보육 부서 이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5일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기능 및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을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 등을 신설하면

서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 등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 19명을 증원하되, 이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은 교육부로 이체하는(행정안전부, 2024.06.05.) 내용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고(그림 III-1-1 참조) 보건복지부 보육 담당 인력 33명이 교육부로 이동하면, 순증 인원은 19명을 포함하여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부 인력은 모두 52명으로 늘어난다(EduPress, 2024.06.05.).

[그림 III-1-1]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 신설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지원관
영유아재정과	영유아기준정책과
영유아안전정보과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자료: 교육부 사이트,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604&page=0604&s=moe>  
인출일 2024년 7월 2일.

## 2.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 가. 인력·업무 이관 범위 및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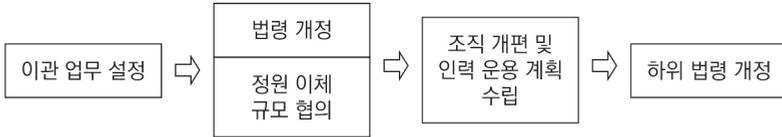
#### 1) 조직 이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수행 인력 규모를 확정한다. 관련해서 정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으로 파견, 업무 안착 지원을 권고하였다(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7.28.; 10).<sup>13)</sup>

보육 업무 이관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조직 및 재

원 등의 이관 범위를 설정이다.

[그림 III-2-1] 유보통합 이관 절차



자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7.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p.6.

이관 대상 업무는 어린이집 수급관리, 어린이집 지도·감독, 보육료, 어린이집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 보육교직원 관리, 가정양육 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정책 지원(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실태조사) 등이 될 것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즉시 추진해서 시도교육감 사무와 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7.28.; 10)하려고 했으나, 아직 개정 전이다. 지난 10월 30일자로 정부는 관련된 3개 법률을 발의하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4.11.27.).

## 2) 쟁점

보육업무를 맡을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조직이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시군구 및 읍면동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직은 매우 광범위하여 이를 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려면, 인력, 조직, 사무 등의 매우 정교한 재배치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직통합 세부계획 대책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베이비뉴스, 2023.12.04.). 관련해서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공병호, 2024.6.14: 143).

둘째,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수(226개)와 지역교육지원청 수(2022년 기준 176개)의 미스매치를 유보통합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관리해 나갈 지가 향후 과제이다(공병호, 2024.6.14: 143). 과도기에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청으로 파견을

13) 면담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의 파견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적정 배치를 해야 한다 (공병호, 2024.6.14.: 143).

〈표 III-2-1〉 기초자치단체 수와 교육지원청 수의 불일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기초자치단체수	25	16	9	10	5	5	5	31
교육지원청수	11	5	5	5	2	2	2	25

자료: 공병호(2024), 유아통합 이후 재정의 안정적 확보-특수시책 비용을 중심으로-. p.144.

셋째, 기존에 보육과 함께 지자체가 수행해 오던 가정양육지원의 행정적 기능을 교육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원조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전국 134개; 2024년 5월 기준)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소관 및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공병호, 2024.6.14.: 143).

## 나. 재정 이관 및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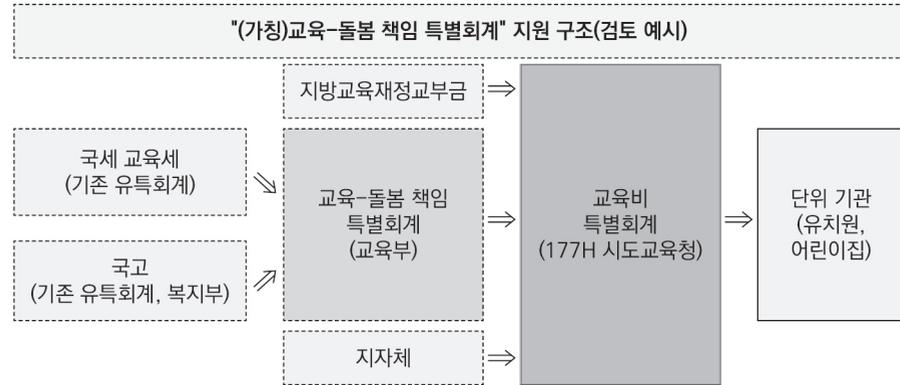
### 1) 법 제정

당초 정부의 재정 통합 방안은 별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신설 검토 및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고(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11), 2023년 하반기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을 계획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는 성공적인 유보통합뿐 아니라 초중등교육 발전도 모두 요원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어린이집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예산 등)을 신설하는 특별회계에 투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 상향”(현행 내국세의 20.79%) 검토를 제안하였다(베이비뉴스, 2023.12.04.).

최근(2024.10.30.) 정부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3개 법안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24.11.27.: 2).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매년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만 규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기에 보육경비를 전출하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 갈등처럼 시·도교육청이 경비를 떠안아 지방채를 발행했던 상황 재현을 우려하면서, 대응책으로 ①전출시점 명문화 ②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③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의 책무성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24.11.27.: 1-2).

[그림 III-2-2]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지원 구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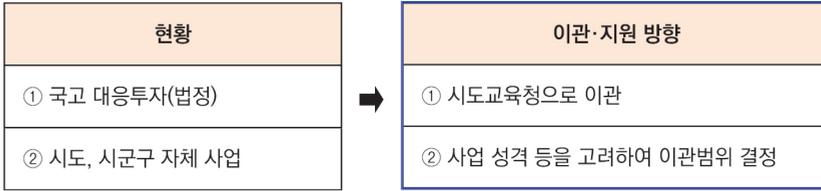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2023.1.30.).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유보통합 추진 방안, p.11.

## 2) 쟁점

현행 재원 구조는 영유아 보육 재원은 중앙의 국고, 유특회계(국고)와 지방의 지방재정(국고 대응,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7.28.: 5).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시도교육청로 이관하고 안정적인 예산마련을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의 자체사업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이관 범위를 결정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세부 이관 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7.28.: 11)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내린 상황이라 자체사업 예산의 이관 범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3] 시도, 시군구 예산 이관·지원 방향(안)



자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7.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p.11.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정적인 재정이관의 문제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재구조화, 무상교육 보육의 실현 등 교육보육 수준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재정의 마련이 유보 통합 실현에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 지자체 예산 등 여러 재원의 최적 활용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간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그 근간이 될 법령의 마련 또한 우선되어야 한다. 그간 보육 재정의 거의 50%를 지자체 예산에서 담당해 왔음을 고려하면서 유보통합 이후 어떤 부분에서도 재정 축소가 없이 영유아를 위한 유보의 발전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자체의 보육 예산이 저출산 등 타 관련 예산으로 전환되어 사용됨으로써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지방 보육 재정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특별별 제정 등을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보육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괄 이관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중앙 부처 일원화는 2023년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단시간에 시행이 되었으며 이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앞두고 있다. 교육청과 그 하위 조직인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이 이끄는 단일 조직으로, 각각의 장이 선출직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횡적인 관계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기초지자체의 보육업무와 광역지자체의 보육업무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보육업무가 시도교육감 소관으로 일괄 이관될 때 어린이 집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보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미정, 2024: 65-68).

셋째, 지역단위 관리체계 이관을 위해 교육청 내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인력 산정 기준 마련과 인력 확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보육은 지자체 소관 업무로서 이



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에 보육업무를 담당할 적절한 수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지자체별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2024년 전체 유아교육 예산은 5조 8천억원 정도인데 비해 보육 예산은 11조 3천억 원이고 이 중 지자체 예산은 5조 105억 원이므로 보육 사업의 상대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보육업무가 교육청에서 무리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요구되고 있다.

### 3.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양성 통합

#### 가.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양성 계획

정부는 유보통합 이전에 격차완화를 위해 보육교사 및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자격 체제개편과 연계해서 지급하도록 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14).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관련한 정부의 로드맵은 2024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 양성과정 개편을 준비해서 2026년부터 양성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14). 이에 2024년 말까지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교사의 법적 지위 부분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인데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도 교원으로 변경을 시안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06; 14, 19). 보육교사가 교원으로 전환되면 국·공립학교의 교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사학연금 가입 가능,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사직이 금지되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소청심사, 교권보호위원회 중재 등의 권리 구제의 권리도 발생한다(교육부, 2024.06; 20).

[그림 III-3-1] 보육교사,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에 따른 의무와 권리 변화

실고 의무 측면의 변동		
구분	현행	변경 후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교직원 복무에 대해 규정</li> <li>· 원장 겸임 금지 8시간 근무 원칙</li> <li>· 순번제 휴가 실시 등</li> <li>· 교원 복무규정 미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 적용</li> <li>·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종교종립 영리업무 및 경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등의 의무</li> </ul>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의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의무</li> </ul>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li> </ul>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li> </ul>
실고 권리 보호 측면의 변동		
구분	현행	변경 후
정치 운동 및 노동 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운동 허용</li> <li>·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운동 금지</li> <li>·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일부 제한(노동청의 금지 등)</li> </ul>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연금 가입 가능</li> <li>· '원장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 가능</li> </ul>
직무 관련 부상 질병, 장애, 사망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에서 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에서 보상</li> </ul>
실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에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에서 지급</li> </ul>
불이익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 사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권고 사직 금지</li> </ul>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구제</li> <li>· '보육활동 침해시 보육활동위원회 중재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 (24. 8. 4 시험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청심사 교원보호위원회 중재 등 교원지위법에 따른 권리 구제</li> </ul>
면직 사유 규정 및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면직사유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성적 불량 등 면직사유 규정</li> <li>·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li> </ul>

자료: 교육부(2024.06),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p.20.

일반교사의 통합자격으로 2개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이며 2안은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구분해서 양성하는 것이다(교육부, 2024.06; 16). 교사 자격·양성 문제는 가장 “뜨거운” 통합 쟁점 사안인 만큼, 2개 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나. 쟁점

교사의 자격·양성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현재 유·보로 나누어진 교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각각 양성과정이 다르고 자격을 받기까지 요구되는 교육과정이 다르며 교원과 근로자라는 신분 성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매우 이질적인 이들의 자격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보통합을 통해 하나의 형태를 가진 통합 기관에서 근무할 교사이므로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두 자격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은설 외, 2023 수행 미발간).

둘째, 교사의 자격을 아동 연령에 따라 전 연령 0~5세 담당 통합 자격으로 할 것인지 0~2세와 3~5세 담당 자격으로 연령별 구분을 둘 것인지의 문제이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사 또한 연령별 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두고 두 종류의 교사 자격으로 대응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영유아기 발달의 연령차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성격으로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두 교사 간 차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연령별 이원화 자격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교사의 학력 기준을 4년제 졸업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현재와 같은 전문대 졸업 학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김은설 외, 2023년 수행 미발간). 반면, 현장에서 어린 이집을 운영하는 관련자들과나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4년제로 상향 통합하는 것에 대해 교사 수급의 문제나 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학력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도, 유보통합이 되어 자격증 변환이 필요할 시 현직 교사들의 통합 자격 취득의 과정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급여 산정 방식의 차이, 수당 지원의 격차 등은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의 이슈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4.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및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가. 개요

정부는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통합기관’을 표방하면서 통합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되, 운영상의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12). 유치원, 어린이집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12).

통합모델은 시설·설비 등의 물리적 기준 조정, 명칭 외에도 교사 자격·양성, 교육·보육과정 적용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같이 고려되어야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으나, 정부가 예정한 시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유보통합 ‘유아 학교’ 3월 첫선”이란 이야기들이 회자되자,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교육부, 2024.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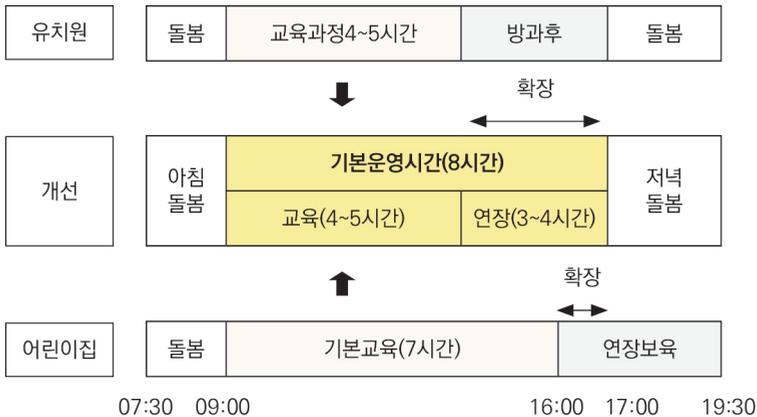
지난 6월27일은 정부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구현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고려하되 유형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강화하여 교

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및 제도적 확산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06.: 12). 정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지역별 특색사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4년에 100교 내외(교육청별 최소 6개 내외)로 실시하고 2027년까지 총 3,100교 내외로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06.: 12).

## 나. 실행방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통합모델 기관의 운영시간은 기본과정 8시간과 추가 4시간 총 12시간이다. 이로써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시간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정 시간이 늘어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을 강화해서 주 6일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부, 2024.06: 6-7).

[그림 III-4-1] 통합기관의 운영시간



자료: 교육부(2024.06),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p.6.

교사대아동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0세반은 1:2; 0~5세반 현행 평균 비율인 1:12에서 1:8로, 특수유아는 1:4에서 1:3으로 목표로 한다.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연구시간 확보, 이음교육 확대, 지역연계 확대, 양질의 선택 프로그램, 정서·심리 및 특수지원 등을 실시하며 연구·연수 여건 개선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운다(교육부, 2024.06.: 12).

통합기관의 명칭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결정하며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자율성 보장을 지향하는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 수렴 및 확정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5년에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한다(교육부, 2024.06.; 13).

통합기관 유형으로 총 5개 즉, “국공립”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단순화하며 앞으로 신설하는 통합기관은 국가·지자체·법인으로 설립주체를 한정하고, 시설기준은 기존 기관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강화한다(교육부, 2024.06; 22-24).

[그림 III-4-2] 통합기관의 유형



주: (국공립)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  
 (지정형) 시도 교육청 지정,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보편성 증진 및 선도적 역할 병행  
 (일반형) 다양하고 특색(特色)있는 프로그램 등 제공  
 (가정형) 영유아의 접근성 보장 목적  
 (직장형)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운영 (이상, 교육부(2024.06),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p.22)  
 자료: 교육부(2024.06),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p.22.

### 다. 시범사업 주요 개요

2024년 시범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상향평준화를 통해 유보통합 현장 체감을 높이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확산을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7개 교육청에 약 15억 내외를 지원한다. 교육청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총 6개 이상을 선정하되, 교육청 예산 활용 및 지자체 대응 투자 등에 따라 교육청별로 기관수는 조정가능하다.

〈표 III-4-1〉 2024년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목적	통합기관 출범 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상황평준화를 통해 유보통합 현장 체감↑,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 모색·확산	
지원기간	'24.9월 ~ '25.2월	시범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지원대상	시도 교육청	
지원규모	17개 교육청별 각 6개 이상 기관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이상을 선정하되, 교육청 예산 활용, 지자체 대응투자 등에 따라 기관 수는 교육청별로 조정 가능
예산	특별교부금 총 262억 원(17개 교육청 × 15억 원 내외*)	교육청별 예산은 시범학교 개수, 특색사업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요 내용	시범학교(現유치원·어린이집)는 기관의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한 상황평준화 과제 수행	시범교육청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지역 내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수행 등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8.20.).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p.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운영시간, 교사 대아동비율, 교육·보육의 질,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등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20.: 5). 시범교육청은 선정된 시범학교에 통합모델(운영시간, 운영일수, 교사대영유아비율, 입학입소, 평가(컨설팅), 비용지원구조 개편 등)을 선(先)적용·환류하는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20.: 5).

## 라. 시범사업 기관 선정

정부는 지난 8월20일에 전국 152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유치원이 68개, 어린이집은 84개이다. 국공립유치원은 8개 기관만이 참여해서 가장 저조하였다.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이 각각 25개, 24개로 비슷하게 참여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이 8개로 참여가 가장 적었다.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

이 포함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20.; 1).

〈표 III-4-2〉 설립유형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총계	기관 수									비고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152	68	8	60	84	25	24	14	13	8	통합유치원(4),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16) 포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8.20.).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p.2.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43개, 20개로 전체 선정기관의 약 4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총 5곳이 참여하는데 이 중 4곳이 대구 지역이다. 교육부의 시범사업 지침은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이상이었는 데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양 기관 수를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정한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이다. 유치원을 더 많이 선정한 지역은 없다. 이들 시범학교들은 출범시기에 따라 9월1일 또는 9월9일(2차)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표 III-4-4).

〈표 III-4-3〉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시도	출범 시기	선정기관 수											비고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서울	1차	7	3	-	-	3	4	2	1	-	1	-	장애통합(2)
부산	1차	6	3	-	-	3	3	1	1	1	-	-	
대구	1차	43	21	1	4	16	22	6	7	3	3	3	통합유치원(2) 장애전문(1) 장애통합(1)
인천	2차	8	4	-	-	4	4	2	1	1	-	-	장애통합(2)
광주	2차	6	3	-	-	3	3	1	-	1	1	-	
대전	2차	6	2	1	-	1	4	-	1	1	1	1	통합유치원(1) 장애통합(1)

시도	출범 시기	선정기관 수											비고	
		총계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울산	1차	6	2	-	-	2	4	1	1	1	1	1	-	장애전문(1)
세종	2차	5	1	-	-	1	4	1	1	-	1	1	1	장애통합(1)
경기	2차	6	3	1	1	1	3	1	1	1	-	-	-	통합유치원(1) 장애전문(1) 장애통합(1)
강원	1차	5	1	-	-	1	4	1	1	1	1	1	-	장애통합(2)
충북	2차	6	3	-	-	3	3	2	-	1	-	-	-	장애통합(1)
충남	2차	6	2	-	-	2	4	1	1	-	1	1	1	장애통합(1)
전북	2차	6	3	-	-	3	3	1	1	1	-	-	-	
전남	2차	6	3	-	-	3	3	1	1	-	-	-	1	
경북	2차	20	10	-	-	10	10	2	5	1	1	1	1	장애통합(1)
경남	2차	4	1	-	-	1	3	1	1	-	1	-	-	
제주	2차	6	3	-	-	3	3	1	-	1	1	-	-	
계		152	68	3	5	60	84	25	24	14	13	8		

주: \*법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 협동어린이집 포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기존 7개 어린이집 유형에 포함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8.20.).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p.6.

## 마. 쟁점

첫째, 유보통합의 첫 시범사업이란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없이 너무나 촉박하게 진행된 점이다. 2024년 시범사업은 설명회(7월~8월), 신청 및 선정(8월), 실행(9월)까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기까지 준비할 시간으로는 매우 짧았다. 이렇게 초고속 사업 추진은 정부와 현장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기란 어렵고 더 나아가 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통합기관 유형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번 시범사업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시범사업의 모델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

국공립 통합기관의 정의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 기관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부분 개인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양미선 외, 2021: 71) 국공립어린이

이집이 사립지정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공립 또는 사립의 분류 기준은 설립 주체에 있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제처 사이트, 영유아교육법 검색; 검색일 2024년 10월 15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을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약 6%가 있는데(양미선 외, 2021: 71), 이들 기관은 국공립으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교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분류하면 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베이비뉴스, 2024.7.19.). 아울러 주로 농어촌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통합기관 유형 어디에도 분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립(지정형)이 되면 수궁하기 어렵다. 공공형 민간어린이집도 사립일반형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교육부 사이트, <https://www.moe.go.kr/talkboard/remoteUnityList.do?type=default&page=56&m=010611&renew=T&catid=UNI&s=moe>. 검색일: 2024년 10월 15일). 사인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같이 사립유형으로 묶이면서 유치원에서 금지되어 있으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임대·부채 허용에 대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 및 지위보장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부채는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기관은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6: 14). 이에 사립유치원은 사립으로 분류된 어린이집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통합기관 유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이 통합기관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에 있는데 그러기에는 참여하는 기관이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의 약 1%도 채 안 된다. 게다가 국공립유치원은 현 정부의 유보통합을 “보육중심의 유보통합”이라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EduPress, 2024.7.1.) 전국에 8곳만 참여하는 등 정부가 기대하는 의미있는 통합기관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도출한 통합모델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수용할 지에 대해 우려된다.

넷째, 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이다. 시범사업의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지자체장(교육감)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024년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록; 9). 반면, 시범사업에서 유치원의 영아반 신설 여부 질의응답에서 교육부는 현행법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20.; 9).

유보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범사업이고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도출이 목적이므로 오히려 현행 관련법을 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 단위는 아직—2024년 시범사업 실시 시점 기준으로—통합이 안 되었으므로 시범사업의 예산은 교부금과 국고가 같이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하면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계획한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5. 학부모 부담 경감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학부모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선도교육청사업에서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23.1.30.; 5) 2024년 3월1일부터 만 5세아의 교육비·보육료를 월 5만원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다(표 III-5-1 참조).

〈표 III-5-1〉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만 5세 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재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18.1.1.~ 2018.12.31	50,000	50,000	50,000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자료: 교육부(2024.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p.2.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학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3~5세) 1인당 기본 교육·보육 지원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교육부, 2024; 1).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추가 학비 지원을 월 최대 20 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4.2.; 2).

〈표 III-5-2〉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5세	2018.1.1.~2018.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19.1.1.~2019.12.31.			
보육료 (어린이집)	3세	2020.1.1.~2021.2.28.			
방과후 과정비	3~5세	2018.1.1.~2021.2.28.	50,000	70,000	70,000

자료: 교육부(2024.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p.2,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액 지원하고 있다.

〈표 III-5-3〉 보육료 지원단가: 영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원/월)		
			기본보육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100%	0세반('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24.1.1~)	394,000	394,000	591,000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약 90%, 유치원은 46.0% 가량이 순수 교육·보육비를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21; 208). 순수 교육·보육비 외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안낸다는 응답이 어린이집 약 30%, 유치원은 24.4%로 보고되었다(김은설 외, 2021; 208). 정리하면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유치원은 절반 정도 비용 부

답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유치원 원아들의 약 70%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현실을(육아정책연구소, 2023: 26) 고려했을 때, 가장 학부모 부담 비용이 높았던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학부모 부담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겨레, 2023.11.12.).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사립유치원을 이용한 보호자의 유아 1명당 지출한 부담금이 5.1% 감소하고, 공·사립 간의 부담금 격차도 6.8%로 줄었으나 지역별 부담 격차는 더 커졌다고 했다(한겨레, 2023.11.12.). 유치원은 공통의 유아학비 지원 외에 시도별 지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 교육감 관할인 유치원은 시도별 연령별 지원단가가 다르고,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 기준도 다르다(표 III-5-4 참조).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시도교육청에서 원아지원액이 없고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원비 제한이 없는 지역(예: 서울, 부산 등)에 사는 학부모(보호자)의 경우, 원아 지원금이 있고 학부모의 자부담 상한액이 있는 지역(예: 울산, 충남)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은 유아 전(全) 연령 지원금이 있고, 학부모 부담금이 없으므로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보통합 추진 이전부터 영·유아무상교육·보육 정책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학부모의 기관 이용 자부담은 거의 내지는 많이 경감되었다.

〈표 III-5-4〉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유아학비 연령별 지원(월) 현황

단위: 원

구분	3세	4세	5세	비고
서울	0	0	5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부산	0	0	5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인천	0	0	221,000	선택적 경비 7만원 외 수납 불가
대구	50,000	50,000	5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대전	130,000	130,000	18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울산	0	215,000	215,000	선택적 경비 3만원 외 수납 불가
광주	0	0	15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경기	30,000	30,000	8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강원	150,000	150,000	20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충북	27,000	27,000	115,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구분	3세	4세	5세	비고
충남	213,000	213,000	253,000	선택적 경비 3만원 외 수납 불가
전북	165,000	165,000	215,000	학부모 부담금 수납 불가
전남	80,000	80,000	13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경북	30,000	30,000	80,000	추가 원비 제한 없음
경남	0	201,000	201,000	선택적 경비 3만원 외 수납 불가

\*누리과정비, 급식비, 학급운영비 등 기존 지원(보조)금 제외

\*만 5세 공통 유아학비 지원사업 포함

자료: 본 면담조사에 수집한 내부자료임.

## 6.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2024년 실행과제와 함께 2023년에 미이행한 실행과제들을 포함해서 이행 진단을 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첫째, 2023년에 미이행한 실행과제 중 가장 중요한 실행과제는 예산마련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임에도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이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을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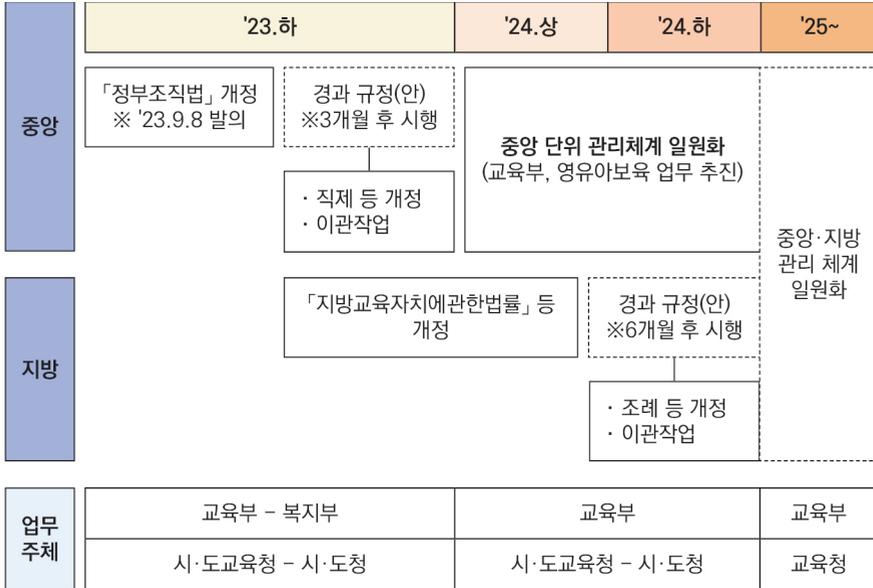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유보 상관없이 관계자 모두가 재정 확보를 1순위로 꼽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드러나는 논의조차 확인이 안 된다. 다만,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위원장)은 “하반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점으로 삼아 연말까지 예산마련 및 조직 확충, 세세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2024년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위원회 회의록, 7; 교육부 사이트에서 인출)고 발언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성과는 아직까지 없다고 진단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본 면담조사 보육관계자 면담).

한편,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계획한 지역단위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사무와 조직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안을 2024년 10월30일에 발의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의 보육

14) 이행진단은 2024년 10월 현재 기준임.

예산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책무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24.11.27.; 1).

[그림 III-6-1] 교육부 '중앙-지방 이관 일정(안)'('23.9.25. 지방업무 이관)



자료: 경기도교육청(2024.2.28.),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p.12.

둘째, 올해 유보통합 정책 중에 가시적인 성과는 하반기부터 실행하고 있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다. 이는 ④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실시는 세부항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2023년에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을 당시, 시범사업 계획은 없었다. 통합기관 모델 시안 관련 의견 수렴까지만 구상했었다.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발표·추진하였다. 다음 <표 III-6-1>에서 의견수렴 과정 여부를 △로 표시하였는데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개최를 의견수렴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시범사업이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정책사업 실행을 앞두고 1회 회의 개최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교육청 설명회에서 사업 내용을 처음 알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V장 참조).

셋째, 유보통합 최대 쟁점 중의 하나가 교사 자격·양성 문제이다. 관련한 개편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나온 발표는 없다. 관련 주제로 그동안 연구, 토론회, 포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의견을 내왔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2024년 유보통합의 중요한 실행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가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운영이다. 중앙 단위에서 유보 두 조직이 일원화됨에 따라 시도, 시군구 단위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행 정도는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조직은 설치되었으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선출직인 시도와 시도교육청장의 정치성향이 비슷한 지역은 보육업무 및 재정 이관에 대해 소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에 속한 경기도는 지난 9월30일에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이 2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의 보육재정 견해 차이를 확인”했고 “교육부의 구체적인 보육업무 이관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2024.09.30.).

다섯째,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행과제가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라 하겠다.

이어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위원 대상의 의견조사를 통해 2024년도 유보통합 실행과제의 이행 진단 수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 모두 이행한 실행과제는 “만0~2세 무상보육(계속)”이다. 다음으로 대체적으로 이행했다고 진단한 실행과제는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이다. 이 실행과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했다고 진단하였다.

나머지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행 수준이 미흡 또는 미이행으로 평가하였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특히, 하반기 실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의견조사 실시 시점이 2024년 10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운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본 연구 종료일)까지 위원회

또는 자문단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즉, 2024년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1회 개최되었고, 자문단 회의 운영—상반기에 분야별로 상이하지만—은 2023년에 비해 훨씬 저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이었던 지역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운영”은 전문가 2명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설치는 했으나 운영 측면에서는 성과가 없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종합해 보면 본 의견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자문단 위원이지만 유보통합의 추진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실행과제별 이행 진단을 다르게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교사 자격·양성, 시설 기준 등 개편 방안 마련” 실행 과제에 참여했거나 자문을 한 전문가(전문가 2, 3, 5, 7)는 이행했다고 진단했지만, 미참여 전문가(전문가 1, 4, 5)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통합기관 모델 시안 관련 의견수렴” 실행과제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2, 6)는 이행했다고 진단한 반면, 나머지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문단 내에서도 실행과제 추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던 통합기관 설립과 운영 기준에 대한 공청회는 현장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동아일보, 2024.12.16.).

〈표 III-6-1〉 정부 계획 대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2024년)

항목	일정	'24년		문헌분석을 통한 이행진단	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이행진단							
		상	하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전문가6	전문가7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23~'25												
■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X	△	△	△	○/△	*유명 무실	X	△
[1단계: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선도교육청 운영(교육청별 지원 실시)				○	○	○	○	△	△	*폐쇄적 운영	△	*잘 모름
□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												
- 제도 개선(관리시스템 등) 관련 자문단 논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개정												
*2023년 이행												
- 만10~2세 무상보육(계속)				○	○	○	○	○	○	△	○	○
- 만5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	○	○	○	○	○	△	X	○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항목	일정	'24년		문헌분석을 통한 이행진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이행진단							
		상	하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전문가6	전문가7	
-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 운영				△ *설치는 ○ 운영은 X	△	△	△	△	△	△	△	○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 별화제법 제정 추진					*2023년 미이행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2023년 일부 이행							
[4]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자문 단 논의				△	△	△	△	△	△	△	X	△
- 통합기관 모델 시안 관련 의견수렴				△	△	X	△/○	△	△	△	○	X
- 교사 자격 양성, 시설 기준 등 개편 방안 마련				X	○	X	*12월 공청회 무산됨에 따라 미이행	○	△	△	○	○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				○	○	○	○	△	○	○	○	○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3.1.30), 출생부터 국민인심 책임교육, 돌봄-유보통합 추진 방안, p.19.

주: 1) 자료에서 2024년에 계획된 과제들만 발췌함.

2) 진한태두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임. 이를 근거로 계획대로 이행하면 ○, 그렇지 않으면 x, 일부 이행 및 추진 미확인은 △로 표기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보통합의 주요 실행과제들이 정부가 구상한 로드맵 대로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할 수 있다. 유보통합 1단계(2023~2024)의 목표가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이란 기준에서 지난 2년 동안 유보의 격차가 해소되고 통합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기란 회의적이다. 어쩌면 오랜 이원화 체제 속에서 발전해 온 유보는 격차보다는 상이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체제를 2년의 시간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은 무리였던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끝으로 “㉒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은 이미 많이 달성한 실행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보육·교육 정책 확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자부담은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질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 과제를 유보통합 정책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IV

---

## 현장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

- 01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전달체계 관계자 등
- 02 학부모
- 03 소결



## IV. 현장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sup>15)</sup>

이 장에서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가장 민감한 현장의 전문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당자(주로 원장)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결과를 분석하였다. 현 정부의 전반적인 유보통합과 함께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위에서 추진한 ‘선도 교육청 사업’과 ‘(가칭)영유아 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 분석하였다.

###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교사·전달체계 관계자 등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호 기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이에 본 면담조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알아보았다. 면담을 통해 유보 현장 관계자들의 상호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이다. 유치원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양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도 도입되었고, 이후 보육 현장에 다양한 교사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오히려 영아 보육의 전문성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간과 내지는 폄하한다고 비판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했다 하더라도 교사 양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이 달라서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하면,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있어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유아교육 관계자).

유치원교사들이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활동, 교육과정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교사가 모든 교육활동 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강원권 유아교육).

누리과정 실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영아표

15) 면담조사 내용 분석 중심으로 보완 예정임.

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령(0~2세)으로 유치원에서 생경할 수 있으며, 교육이 아니라 아기를 돌본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보육관계자 2).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비교를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수도권 보육관계자).

유보의 공통점으로 유보 모두가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외 유치원은 운영시간을, 보육은 누리과정을 유보의 공통점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에서는 유보의 차이점으로 회계 및 입소시스템, 어린이집은 행정 지도·점검이라면 유치원은 교육적 마인드의 장학 중심, 누리보조교사 의무 채용 기준, CCTV 설치, 정보공시 내용, 특별활동 시간 및 비용 등이 의견도 있었다.

유아교육의 유보의 차이로 “교사양성”을 주로 많이 지적했다. 양성체계가 다르므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는 똑같은 누리과정을 하더라도 교육활동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육교사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다양한 교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육교사의 교육활동 수준이 향상되었고 유아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에 대한 유보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보통합 시 교사 자격·양성체계 부분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1〉 유보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장전문가 의견

구분	유아교육	보육
공통점	아이에 대한 사랑 운영시간	아이에 대한 사랑 동일한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이점	교사 양성: 유아교육과 vs 보육과(아동학, 사회복지학 등)	- 회계 및 입소 시스템 -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유치원은 장학 - 누리보조교사 의무 채용 기준 - 교육과정 운영 - CCTV 설치 - 정보공시 내용 - 특별활동 시간 및 비용 등 - 교사양성
	정규대학 유아교육과/교직과정 이수 졸업자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취득가능/ 교직과정 미이수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 가. 정부 유보정책 사업의 참여 여부 및 의견

### 1) 선도교육청 사업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2023년에 추진한 선도교육청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 어린이집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유아교육진흥원 견학 기회를 주는 등의 일부 사례들이 있었으나, 유보 기관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현장과 교육청 간의 상호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일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학습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아에게 지원한 급간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측에서 체감도도 높고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어린이집의 영아의 급간식비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현장(특히, 사립유치원)의 체감도가 낮다.

선도교육청 사업은 기관 개별 참여 신청 사업이 아닙니다....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유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완벽한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보육관계자 1).

선도교육청 사업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민간, 가정 상관없이 참여한 어린이집은 거의 없습니다. 선도교육청 사업은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별도의 급식비를 무상급식이라는 사업으로 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어린이집은 3~5세 유아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유치원 관계자).

한편, 선도교육청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지만 교육청 위주 사업이다 보니 어린이집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가령, 교사교육을 평일 14시 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사는 참석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무시간이어서 참석이 어렵다.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으나, 시간이 평일 오후 2시라 보육교사가 참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장소로 이동하기가 먼 곳이라(지방은 지리적 특성상 이동거리가 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총청권 어린이집 원장).

〈표 IV-1-2〉 권역별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 여부: 현장전문가 의견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수도권	- 거의 체감하지 못함. 특히, 이 사업을 통한 어린이집과의 교류는 없음.	-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참여하고 싶었으나 관련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기관 *유아 급식비는 지원/영아는 경기도청에서 별도 지원 - 2023년 사업에 참여: 교사공동체학습지원, 부모교육 두 파트 지원 받음.
강원권	- 거의 체감하지 못함. 특히, 이 사업을 통한 어린이집과의 교류는 없음. *2024년 일부 유치원 참여: 교사학습공동체사업	- 선도교육청 사업은 교육청 위주로 실시함.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인력을 지원했으나, 파트너십은 체감하지 못함.
충청권	- 관련 공문이 내려온 바 없음. 현장의 체감은 거의 없음.	- 체감하지 못함.
전라권	-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사업임.	-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실시함. : 2023년 유보 원장 대상 교육 실시 : 2024년 유보 교사 대상 교육 실시 *교육특수사업
경상권	- 사립유치원은 실제적인 지원은 없음. *일부 교육청 차원에서 유보 교사 지원사업 실시	- 관련 공문이나 내용 전달이 없었음. 참여한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 *선도교육청사업은 국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실시됨.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 2)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가) 유·보 간 온도차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는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2024년부터 현장에 구현”을 목적으로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발표하였다(교육부 영유아지원관, 2024.7.; 4). 이후 정부는 사업설명회(7월), 공모 및 선정(7~8월), 추진(9월~)으로 빠르게 진행하였다. 이에 현장전문가 대상의 면담조사에서 시범사업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면담을 진행할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본 시범사업은 최일선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행되는 만큼, 그간 정부

의 유보통합 정책 중 현장의 체감도가 가장 크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

유아교육 현장은 정부의 본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 31일에 국회에서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유보통합 '3대 쟁점'으로 명칭은 유아학교,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방안 마련을 주장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24.07.31.). 그러나 보육계는 3대 쟁점에 대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입장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교사 자격체제는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표 IV-1-3〉 유보통합 3대 쟁점에 대한 입장: 현장전문가 의견

쟁점	유아교육	보육
명칭	유아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아, 유아 이원화	영 유아학교 *가정어린이집: 영아 전문 기관
교사자격	영아교사, 유아교사 이원화 양성	영·유아교사 일원화 양성
재정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	

자료: 한국교육신문(2024.07.31.). 유보통합 '3대 쟁점'해법 정부에 제안.

정부는 이 같은 쟁점 사안을 보류한 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은 앞으로 추진될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어린이집(보육) 측보다 유치원(유아교육) 측이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좀 더 강했다. 유아교육계는 본 시범사업이 일일 12시간 운영, 제시한 교사대아동 비율 등이 '보육'에 치우쳐 있으며(인천일보, 2024.07.30.)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시범학교 선정 기준 부재 등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입장이다(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024.08.09.). 이처럼 유치원 중에서도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이 커서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하였고, 실제 전국의 공립유치원 약 5,100여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40) 중에 8개만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유치원 현장에서 볼 때, (통합기관) 시범사업은 통합모델 제시 없이 추상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일일 8시간 운영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되었으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연장과정과 돌봄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유아교육 관계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기관당 1억원 내외로 지원되는데 교육부가 권고한 집행 항목에서 운영비 편성은 없었다.

〈표 IV-1-4〉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원금 교육부 권고 사항

기관당 지원금	지원금 집행항목(교육부 권고사항)	시범기관 준수사항
1억원 이내/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중 강사 채용, 돌봄전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li> <li>- 자원봉사, 특별강사 운영 등</li> <li>- 추가 교사 배치 시 공립유치원은 시간강사, 사립유치원은 대체 강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기준 채용</li> <li>- 이음교육, 지역사회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li> <li>- 선택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지원 등</li> <li>- 전문가 방문 및 검사비, 학부모 상담비 등</li> <li>- 특강 강사비 등 교육 및 연수 운영비</li> <li>- 연수 참가비</li> <li>- 강사 초청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원유지) 시범사업 유지 기간동안 취업 영유아수를 2024년 기관의 총 현원수 수준으로 관리</li> <li>- (업무협조)</li> </ul>

자료: 교육청별 시범사업 설명회 내용으로 본 면담조사에서 수집  
 교육부·영유아지원관(2024. 7). 2024년 (가칭)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p.15. 참조

보육 현장도 본 시범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신청은 유치원보다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단 규모가 훨씬 커서 신청기관 수가 많을 수 있으나, 유치원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부, 교육청 전달체계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측에서도 모집단 수 자체가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데 동수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였다.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 체제에 있어서 익숙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부, 교육청으로 가야 하니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부, 교육청의 테두리 안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전라권 어린이집).

어린이집수와 유치원수가 3배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모든 사업이 동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보육관계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대구와 경북의 경우, 지자체 대응 투자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나) 공·사립유치원 간 온도차: 시범사업에 비(非)지원한 다른 이유

공·사립유치원은 설립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용 여부 이유가 달랐다. 앞서 언급했지만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보육화”란 이유로 참여를 반대했다면, 사립유치원은 본 시범사업의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컸다.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는 원아당 원비로 마련된다. 그런데 본 시범사업의 주요 골자는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고, 이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데 시범사업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사대아동비율을 맞추려면 원아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운영비 결손으로 이어진다. 시범사업 예산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총 3,308개)은 개인이 사재로 설립한 사인유치원(총 2,837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42) 정부 정책에 따라 기관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매우 민감하다.

〈표 IV-1-5〉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사립유치원 비지원 주된 이유

교육부의 본 시범사업 <sup>1)</sup>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과 요구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교사) 교사대영유아 비율 0세 1:2, 3세 1:13, 4세 1:16, 5세 1:18 초과 시 교사 추가 배치</li> <li>- 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시범사업 유지 기간 동안 현원유지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는 원비*원아(수)로 마련함.</li> <li>- 교사대아동 비율이 낮아지면 운영비는 원비*원아(수) 만큼의 결손이 발생함.</li> <li>- 올바른 유아교육 확립과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아수 조정으로 인한 감소 인원만큼의 결손 운영비 지원은 필수임.</li> </ul>

자료 1): 교육부·영유아지원관(2024.7). 2024년 (가칭)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p.6, p.13.

2): 교육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설명회 내용으로 본 면담조사에서 수집

## 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 부재

본 시범사업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면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통합기관 모델을 발표하지 않는데다가 현장의 의견 수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현장은 답답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본 면담에 의하면 지역연합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통합 모델(안)에 대한 설명 요청을 했으나 명쾌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했다. 전달체계가 구축은 되어 있지만, 최일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없었다.

교육부가 통합모델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의견수렴 등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게<sup>16)</sup> 유보통합 진행사항 공유를 요청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명확한 통합모델(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수도권 보육관계자).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도 교육부, 한어총, 시도분과회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최전선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단톡방은 있으나 공지사항 위주이고 의견개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충청권 보육관계자).

정부는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난 7월 본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반발은 컸는데,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범사업 계획서 제출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미리 기관을 선정하고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큼니다(충청권 유아교육).

시범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2·5세 유보이음교육은 영아, 유아반이 모두 있는 어린이집은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 봅니다(전라권 어린이집).

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백지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의 유초이음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우선 고려합니다.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과 하려고 합니다. 유보이음교육사업은 신청기관이 많아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전라권 유아교육).

〈표 IV-1-6〉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현장 의견수렴 유무: 권역별 현장전문가 의견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수도권	-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음.	-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음. 발표결과를 주목하고 있음.
강원권	- 현장의 의견수렴은 없었음.	-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음. - 제출 기간도 짧아서 준비할 수 없었음.
충청권	- 현장의 의견수렴은 없었음.	-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현장은 혼란스러움. - 교사들의 반대로 신청하지 못함.
전라권	- 현장의 의견 청취 절차 없었음. - 현장에 발 맞추지 않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현장의 의견 청취 절차 없었음. - 시범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2·5세 유보이음교육은 영유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은

16) 교육부 영유아지원국이 신설되기 전임.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 사업신청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기간을 재연장함.
경상권	- 별도 의견 수렴없이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설명회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고, 설명회 참석안대가 늦어 참석하지 못한 기관도 많음.	-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범사업에 참여함.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주: 수도권 면담조사는 시범사업 발표 전에 실시함.

#### 라) 본 시범사업 선정 기준 지역별 상이

교육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교육청 단위에서 다르게 적용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기관 기준(교사배치를 교사대영유아 비율로 제시)과 달리 \*\*교육청은 학급당 유아수(3세 학급 8명)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3세 학급당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시범사업 재선정 기준도 별다른 과실이 없는 경우 재선정, 사업 평가 후 선정, 2024년 선정 기관은 2025년 배제 등 지역마다 다릅니다(경상권 유아교육).

#### 마) 본 시범사업의 효과성

유아교육계는 현재 시범사업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유치원은 신청하기 어려워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계에서도 기관간의 운영 차이가 큰데 이를 조정하지 않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칠 거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예산을 지원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는 시범사업은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에서는 운영비 손실이 발생해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운영이 잘 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하지 못하고 원아모집이 잘 안되는 소규모 기관들이 선정되었습니다...이 시범사업의 향후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교사대아동비율을 상향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라권 유아교육).

시범사업 선정 기관과 미선정 기관으로 분류되어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예산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경상권 유아교육).

두 기관별 예산과 운영, 시설설치에 대한 격차가 큰 상태이고 또 어린이집은 7개유형별 예

산지원이 다르며 정원총족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운영의 내용이 다른데 17개 시도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시범학교를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사업이라 봅니다(보육관계자).

일일 12시간 운영을 하는 시범사업 기관에서 교사가 4시간 단위로 바뀔 수 있는데(아침돌봄, 기본과정, 연장과정, 저녁돌봄) 이는 애착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들에게 발달상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경계선 장애 영유아가 늘어나고 현실에서(본 면담조사 결과)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면 시범사업의 인력 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이들 발달 특성상 담임 선생님과 애착을 형성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개별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범사업은 교사가 4시간 단위로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란 어렵습니다(충청권 유아교육).

이외에도 시범사업 기관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원유지 규정도 참여를 꺼리게 하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보았다.

## 바) 본 시범사업의 개선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통합모델 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재정지원의 공모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재정지원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선정기준의 논란, 통합모델의 획일화(교사대야동비율, 일일 12시간 운영)로 사업의 지속성 보장이 없습니다. 또 내년에 재선정에서 탈락하면 시범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온종일 돌봄사업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운영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원이 끊기자 학부모들의 불편, 채용 인력의 근로계약 종료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교육청은 공모방식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큼니다(강원권 유아교육).

모든 유아교육, 보육 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보통합 시안의 항목별로 점진적 시행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2024년 시범사업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을 하고, 2025년 시범사업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을 하는 겁니다(경상권 유아교육).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모가 작아서 1억 예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려면 원장,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 있고 교사의 불만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가정어린이집끼리 연계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설명회에서 1반이 있는 어린이집끼리는 합쳐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합쳐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3~4명밖에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전라권 어린이집)

## 나. 통합기관 명칭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지난 8월 23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학교, 유치원은 유아학교 명칭을 주장하며,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전문기관이란 명칭을 별도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면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7〉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유보의 입장

구분	유아교육	보육	(소규모)가정어린이집
통합기관 명칭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영아 전문 보육·교육기관 *별도의 유보통합 모델 제시 요구
	영유아학교로 할 경우 우리나라 학제가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과 맞지 않음.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는 명칭은 유보통합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영유아기관 운영 및 통합을 저해할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 기관으로 명명돼야 함.	
	통합기관 명칭은 이견이 있으나, 현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기관명 하위단에 영아반(학급), 유아반(학급), 영·유아반(학급) 등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예: 유아학교(영아반), 유아학교(유아반) 영유아학교(영아반), 영유아학교(유아반)		

자료: EduPress(2024.8.23.). 영유아학교 vs 유아학교...기관명칭부터 갈라진 유보통합.

\*베이비뉴스(2023.04.12.).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독립적인 영아전문 보육·교육기관으로써 별도의 유보통합 모델 제시해야.

## 다. 통합기관 유형

교육부는 현행 10개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통합기관 유형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6.; 22). 이 발표에서 7개 유형인 어린이집들이 사립이란 큰 범주에 묶이면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임용고시와 위탁 2개 기준으로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했다고 한다(본 면담조사 결과).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사립지정형),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립일반형), 직장어린이집(사립직장형)이 사립이 되면서 그동안 정부지원금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공보육을 위해 애써 온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보육의 확충정책과도 충돌하며 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해석이다(베이비뉴스, 2024.07.25.). 전(前)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낸 송대현은 이 같은 기관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있어 우리나라 원칙은 국공립 비율을 늘리는 거였고, 그 작업을 꾸준히 해서 20~30%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9.9%에 불과한데, 교육부 시안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아닌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할 경우 영유아 공보육교육은 10% 밑으로 떨어진다(베이비뉴스, 2024.07.25.).

이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측은 사립지정형이 아닌 공립지정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설립유형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지정형으로 분류된 것을 부적절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그동안 공보육을 책임져왔습니다. 비록 위탁 운영방식 일지라도 사립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설립주체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이 아닌 공립지정형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 본래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충청권 국공립어린이집).

저는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해도 국공립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임용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립지정형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래도 맨 그 체계는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국공립화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립으로 가되 처우가 똑같이만 간다면 예, 교원으로 하면 괜찮습니다(경상권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측의 반발로 교육부는 지난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에서 “제3의 유형”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유형을 주장하고 있다(베이비뉴스, 2024.10.25.).

〈표 IV-1-8〉 통합기관 유형 분류에 대한 입장 차이: 국공립어린이집

구분	의견
반대	- 공립지정형 제안 - 장기적으로 유치원 운영방식에 맞춰 “직영”이 바람직함.
찬성	- 민간 위탁이란 점에서 국공립 분류는 적절치 않음. - 단, 교원으로 국공립과 동일한 처우는 해야 함.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립일반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사립으로 분류가 법상 위헌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본 면담조사 결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건비 다 지원받고 또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써 역할들을 다 했고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보육역사 맨 처음 시작했거든요...그냥 사립으로 분류되는 이 과정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립지정형으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안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경상권 법인·단체어린이집).

## 2. 학부모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지금의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학부모가 처한 상황(취업, 거주지 등)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처럼 한 개 기관만을 다닌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경험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긴 경우가 많으나(사례 1, 3, 5, 6),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도 있다(사례 4).

〈표 IV-2-1〉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

구분	이용기관 경로	현재 기관 선택이유	비고
1	가정어린이집 → 공립병설 유치원	- 안전, 교사의 질, 시설 환경 - 전(前) 가정어린이집의 상급반(만 3세)이 없어서 옮김.	- 현 기관의 또래가 적은 것이 아쉬움 - 방학 중 운영한 거점형방과후 사업 이용 만족도가 높음
2	국공립 어린이집	- 긴 보육시간, 낮잠시간 유(有)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영어, 코딩 등	- 어린이집에서 영어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학부모의 교육 니즈 반영 필요
3	가정어린이집 → 사립유치원	- 집에서 가깝고 주변 평판 - 학교 준비를 위해서는 유치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 월 평균 지불 금액: 약 40만원
4	사립유치원 →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에 대한 신뢰도 - 매년 학부모 수요조사 실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 독립반 운영	-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유치원에서 둘째의 어린이집으로 옮김. *형제가 동일 기관 이용
5	서울형어린이집 → 사립유치원	- 교육과정	- 월 평균 지불 금액: 약 30만원
6	서울형어린이집 → 사립유치원	- 교육과정, 다양한 특별활동프로그램	- 월 평균 지불 금액: 약 45만원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인근에 시설이 좋은 공립단설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비해 운영시간이 짧고, 방학도 길어서 사립유치원을 선택했어요. 공립은 교사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도(매년 교사가 바뀌는 것) 아이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구요, 급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 매운 게 나올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사립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학교 선생님 같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었어요.(학부모 5).

전업주부 어머님들은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냈다가 마치면 또 다른 방과 후 애프터로 학원을 보낼 수 있는데 저처럼 워킹맘은 그러지 못하니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죠(사례 6).

다음으로 학부모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통점으로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사랑을 주로 나왔고(사례 2, 3, 5), 차이점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사례 3, 5) 운영시간이나 방학 유무의 차이(사례 2, 4, 5) 등을 언급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두 기관의 성격이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기관, 보육기관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현재 이용기관	의견
1	공립병설 유치원	- 차이점: 학교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공간 사용 가능
2	국공립 어린이집	- 공통점: 아이에 대한 교사의 사랑 - 차이점: 운영시간과 방학 유무
3	사립유치원	- 공통점: 아이에 대한 사랑 - 차이점: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생활중심 피드백, 유치원은 교육활동 중심의 피드백
4	국공립 어린이집	- 공통점: 교육(보육)과정 - 차이점: 운영시간, 학부모와의 소통 정도
5	사립유치원	- 공통점: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 - 차이점: 운영시간, 방학 유무
6	사립유치원	- 차이점: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부모에게 주는 피드백이 달라요. 어린이집은 생활중심 피드백이라면 유치원은 교육활동 중심의 피드백이죠(학부모 3)

첫째아이를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전에) 유치원을 보냈는데 교육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참여나 부모와의 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육시간이 더 길어서 아이에게 더 안정적입니다(학부모 4).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이나 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개별적으로 케어해서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기 아이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단체 생활에서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기관을 비교했을 때, 교육적인 면에서는 유치원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학부모 5).

〈표 V-2-3〉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구분	현재 이용기관	의견
1	공립병설 유치원	-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점진적 추진 필요
2	국공립 어린이집	- 유보통합 추진 중인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체감하지 못함. -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아쉬움
3	사립유치원	- 양 기관의 장점들을 잘 합치면 좋겠음. : 어린이집 장점은 낮은 교사대아동비율 : 유치원 장점은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 지금 이원화 체제에서도 부모들의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유보통합은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함.
4	국공립 어린이집	- 교육부로 통합되면 0세부터 교육 대상으로 인식, 사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음. - 2023년 유치원과 함께 하는 부모교육에 참여 *선도교육청 사업 - 유보통합 후에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현 기관: 0~5세 독립반 운영 - 유보통합 추진 중인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체감하지 못함.
5	사립유치원	- 유보통합 정책 인지하고 있으나, 체감은 못함.
6	사립유치원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부모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용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학부모 1).

두 기관의 장점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장점은 교사대아동비율이 낮은 것이며 유치원의 장점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거죠. 또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 체제에서도 부모들은 필요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에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 자녀가 정책의 희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학부모 3).

요즘 학부모들은 SNS 발달로 맘카페 등에 정보를 공유, 소통하는 속도가 빠르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관 통합으로 자신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었다. 일원화보다는 지금의 이원화 체계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추진한다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표 IV-2-4〉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바라는 점

구분	현재 이용기관	의견
1	공립병설 유치원	-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용의 편리성과 선택권 보장 필요 - 긴 운영시간, 짧은 방학 기간
2	국공립 어린이집	- 외벌이 가정도 동일한 입소 순위 - 출산 전 부모교육 제공
3	사립유치원	- 교육·보육 질 담보를 위해 교사 장시간 근무는 반대 - 유보통합 후에도 기관 다양성 보장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선택권 보장
4	국공립 어린이집	- 영유아는 혼자 학원을 다닐 수 없으므로 기관 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공 -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5	사립유치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6	사립유치원	- 긴 운영시간 보장

자료: 본 면담조사 결과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들면, 교육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 니즈를 채워주는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린이집을 보낼 때 교육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어려서 안전하게 잘 지내는 것에 만족했어요. 비용이 들지 않았던 점도 좋았고요. 유치원을 보내면서 교육적으로 기대를 하죠. 아무래도 내는 비용이 많으니까요(학부모 3).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의 무상정책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사립유치원의 이용 부담이 경감되면서, 공립유치원보다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 긴 운영시간, 짧은 방학 등으로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설사, 사립유치원의 이용 부담액이 크더라도 자녀의 교육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선택한다. 2022년 유아교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선택 이유가 확연히 달랐는데, 공립유치원은 “집과의 거리”(22.2%), “교사의 질”(18.4%), “교육프로그램”(11.8%) 순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교육프로그램”(24.5%), “원장의 교육철학”(13.7%), “집과의 거리”(12.0%) 순으로 나타났다(김은영·최은영 외, 2022: 424). “교육비 수준”은 공립 2.3%, 사립 1.4%로 나와(김은영·최은영 외, 2022:

424) 기관 선택의 주요 이유는 아니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도 “비용부담이 적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설 외, 2021: 247: 아래 표 참조).

〈표 IV-2-5〉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단위:%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 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친구가 없음	양육 부담감	비용 부담 적어서*	기타	계(수)
전체	40.1	2.3	1.1	22.0	16.1	2.0	13.4	1.7	1.4	100.0(1,4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6.1	3.2	0.7	20.1	11.0	0.8	13.0	3.4	1.7	100.0(390)
사회복지법인	29.8	2.3	2.5	18.2	23.0	-	20.2	2.7	1.2	100.0(107)
법인·단체등	33.3	6.5	-	20.4	25.3	-	11.1	3.5	-	100.0( 58)
민간	42.9	2.1	0.9	19.5	17.4	2.3	13.4	0.3	1.2	100.0(650)
가정	26.8	0.3	2.3	32.2	18.3	5.5	12.2	1.1	1.4	100.0(200)
직장	25.5	-	-	40.6	11.0	1.0	14.9	3.4	3.7	100.0( 55)
협동	43.0	-	-	24.1	32.9	-	-	-	-	100.0( 4)

주: \* 2018년 이후 해당 항목은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이었음.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p.247-248 표 일부 발췌.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특히, 유아기 자녀들 둔 학부모들은 교육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여기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긴 운영시간, 짧은 방학 등 돌봄공백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기관을 선호하고 있었다.

###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교육청 사업과 통합기관 시범사업에 대해 지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전자는 체감도가 너무

낮았고, 시범사업은 현장과의 소통없이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면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향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현장이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시범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통합기관 모델이 나올 것이다.

예컨대, 본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당 1억원 내외로 지원되는데 집행항목에 운영비가 빠지면서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어렵게 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는 원아당 원비로 마련되는데 본 시범사업의 주요 골자는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고,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데 시범사업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사대아동비율을 맞추려면 원아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운영비 결손이 발생한다. 그런데 시범사업 예산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육계는 모집단 수 자체가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데 동수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불만이 컸다.

학부모들은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은 주요한 선택 기준은 아니었다.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원하는 교육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비용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대목으로 학부모들의 다양한 니즈들을 분석하여 통합기관에 반영해야 하겠다.



# V

## 국외사례: 대만의 유보통합

- 01 유보통합 추진 배경
- 02 유보통합 추진 과정
- 03 유보통합 후 유아원 유형 및 운영 이용 현황
- 04 시사점



## V. 국외사례: 대만의 유보통합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연령 중첩의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였던 대만의 유보통합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다. 대만은 2012년부터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아원이란 통합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유보통합 사례는 일본,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 그로 인한 형성된 유·보 이원화 체제, 연령 중첩, 민간(사립) 중심의 기관 설립·운영 등등 우리와 공통된 점들이 많은 대만의 유보통합 사례는 면밀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 1. 유보통합 추진 배경

일제 식민지라는 우리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대만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도 유사하다. 유치원과 탁아소의 이원화 체제로 출발해서 통합 전까지 운영되었다. 대만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한 사회적 배경 역시, 우리와 유사하다.

첫째, 1998년을 전환점으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수가 줄어들고, 기관 수도 감소하였다. 둘째, 사립 위주의 보육·유아교육 구조여서 공사립 간의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모색할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셋째, “같은 연령의 유아들은 같은 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한 논거가 되었고, 유보통합 정책 합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김대홍, 2023: 481).

〈표 V-1-1〉 대만 유보통합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 체제

	유아교육	보육
주무부처	교육부	내무부
연령	4세~취학 전	생후 1개월~6세
기관명	공·사립유치원	공·사립 탁영소(생후 1개월~만 2세) 공·사립 탁아소(만 2세~6세 미만)
법령	유치교육법(幼稚教育法)	탁아소설치판법(託兒所設置辦法)
교사	유아교사(교원양성법)	교보원, 보조교보원

자료: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pp.478-480, p.486 내용을 표로 정리

## 2. 유보통합 추진 과정<sup>17)</sup>

### 가. 중앙 정부

대만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논의는 1997년 12월 행정원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정책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유보통합방안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양 부처 공동기자회견, 정책설명회, 전국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0년에 보육은 만0~3세, 유아교육은 만3~6세의 연령 이원화 모델이 나왔으나, 교육부 장관이 무산한 바 있으며 2005년에 0~12세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유보통합 법령 “아동교육및보육법(兒童教育及 照顧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2~6세 유아에 대한 “幼兒教育及 照顧法”을 채택, 2011년 6월 29일에 공포하고, 2012년 1월1일에 시행되었다(표 IV-1-2 참조).

이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은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 지였는데, 처음에는 내무부로 발표하자 유아교육학계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이정림·邱志鵬, 2011; 50). 또한, 유보통합의 연령도 처음에는 연령 이원화에서 중간에 0~12세로 추진하다가 최종 2~6세로 결정된 만큼 뜨거운 쟁점 사항이었다(대만 학계전문가 면담결과).

17)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발췌, 정리

〈표 V-1-2〉 대만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

연도	내용	비고
1997.12.	- 행정원 회의에서 유보통합 논의	이후 교육부와 내무부 각각 유보통합 방안 연구를 제안했으나, 미시행
1998.7.	- 전국사회복지회의	
*2000.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 자문단” 구성	
2001.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교육부, 내무부 공동의장 - *위원회 내 3개 정책연구팀 구성, 유보통합 통합 및 조직 연구
2004.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통합방안 기획 결과보고서” 발표 - 이를 근거로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 - 정책설명회 1회, 전국 공청회 4회	각계각층의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 교육부, 내무부 각각 유보통합 기획방안 및 부대조치 마련 → 행정원에 제출	
2005.6.20	- 행정원에서 행정주관기관을 교육부로 결정	
*2005.	- 유보통합 법령 제정: 0~12세 아동을 위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통괄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	유보통합프로젝트자문위원회, 법률가들이 참여
*2006.	- 유보통합 법령 초안 공청회	*“아동교육보육법”
2007.5.23. 2009.3.3	-교육부 “아동교육및보육법(兒童教育及 照顧法)” 2차례 제출 → 행정원 → 입법원	유보통합 법안에 대해 각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법원 법안 심사가 순조롭지 않았음.
2010.4.22.	- 입법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아동교육및보육법(兒童教育及 照顧法)” 초안 공청회	어떤 법안을 채택할지 이견은 있었으나, 아동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권리와 이익 확보를 위해 조속한 유보통합 필요에는 일치
2011.3.31.	- 입법원에서 2~6세 유아에 대한 “幼兒教育及 照顧法” 채택, 심의 결의	
2011.4.11./13.	- 입법원 교육 및 문화,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완료	
2011.4.22., 4.29., 5.20	-여야 협상 완료	
2011.6.10.	- “幼兒教育及 照顧法” 입법원 통과	- 총8장 60조항으로 구성
2011.6.29.	- 총통이 공포	
2012.1.1.	- 시행	유치원과 탁아소 명칭 대신, 유아원으로 통합하고 교육부에서 관리·감독

자료: 1)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pp.482-483. 내용을 표로 정리함.

2) \*이정림·邱志鵬(2011). 대만의 육아정책, p.49.

## 나. 지방 정부<sup>18)</sup>

대만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해 어떠한 업무가 추진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면담참여자(2011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2024년 5월 기준) 취학전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유보통합 법을 공포 후,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유보통합 추진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 면담에 의하면, 지방단위에서 유보통합 업무는 법 통합 이전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당시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첫째,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월 1회 교육청과 시도청 담당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회의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목적은 서로의 업무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회의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과장은 반드시 참석하고, 필요하면 다른 부서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합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탁아소의 입안증서와 유치원의 설립허가증서를 설립허가증서로 통합해서 발급하였다. 당시 입안증서가 없는 탁아소가 많았는데, 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기준에 맞추도록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였다.

셋째, 2011년부터 착수한 업무는 시스템 통합이다. 지방정부 시장 밑에 교육국과 사회국이 있는데<sup>19)</sup> 두 개의 이원화 시스템(전국교보자원정보원, 전국유아원학생관리시스템)을 교육국으로 통합하였다. 재정과 인력도 교육국으로 이관되었다.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시 사회국, 교육국 각 1명씩 추가로 채용하였고 통합 후 사회국 1명이 교육국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담당 업무는 유아원 신증설, 유아원 환경 개선, 교직원 관리, 학비 지원, 공공안전점검(소방국과 공동), 교사 양성, 유아원 평가 등이다. 유아원 평가는 6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다. 만약,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원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담당 지역에는 현재 112개의 유아원이 있다. 공립 40개(분원 4개), 비영리 8개, 준공공 33개, 사립 31개이다. 설립유형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하겠다. 참고로 대만도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우

18) 해당 내용은 지동시 담당 공무원 면담 내용으로 해당 지역에 국한된 내용일 수 있음.

19) 대만은 우리와 달리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이 일원화 제도임.

리도 마찬가지로 1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낮는데(동아일보, 2024.06.05.), 야근 등으로 돌봄시간 부족, 집값 상승 등의 경제적 이유가 주된 요인이라고 했다(공무원 면담결과)

### 3. 유보통합 후 유아원 유형 및 운영·이용 현황

#### 가. 유보통합 후 유아원 유형

유보통합 후 대만은 현재 5개 유형의 유아원이 있다. 통합 전의 공립유치원과 공립탁아소는 공립유아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사립탁아소는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사립유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통합 전에 원장이 없는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아원(國小附幼)으로, 원장이 있는 공립탁아소는 단설유아원(專設園)이다(표 참조).

〈표 V-3-1〉 대만 유보통합 전·후 설립유형 및 운영 변화

통합 전	통합 후
공립(병설)유치원	공립병설유아원(國小附幼), 공립단설유아원(專設園)
공립탁아소	
사립유치원	사립유아원,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사립탁아소	

자료: 대만 시립중산유아원 자료(2024).

공립유아원은 지자체 또는 공립학교에 설치된 유아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유아원이다. 사립유아원은 다시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사립유아원으로 구분된다. 비영리유아원과 준공공유아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비영리유아원은 토지·건물 또는 시설·설비 등은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은 비영리재단(NPO)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 사립유아원으로 공공화유아원으로 분류한다.

비영리유아원은 유보통합 후에 본격적으로 설립한 유형이다. 대만도 우리와 유사하게 통합 전에 유치원보다 탁아소가 양적으로 많았는데, 통합 후 교육부가 담당하는 기관수가 많아지자 비영리 재단(NPO)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는

데, 대부분의 (사립)탁아소가 비영리유아원으로 전환하였다(사립유아원 원장 면담 결과). 비영리유아원은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공립유아원과 비슷하게 저렴하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은 공립보다 더 유연하다. 공립유아원은 방학이 있지만, 비영리유아원은 그렇지 않아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장점이다. 정부와 비영리 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이 까다롭다. 준공공유아원은 정부와 협력 계약을 맺은 사립유아원으로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지만, 비영리유아원보다는 운영 면에서 탄력적이다. 면담에 의하면,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준공공유아원 원장 면담 및 표 V-5-6 참조). 그러나 정부가 정한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한다.

〈표 V-3-2〉 통합 후 유아원 유형별 정의와 특징

유형	정의와 특징
공·사립유아원	지자체 또는 공립학교에 설치 교육보육기관은 공립유아원이고, 나머지는 사립유아원임.
비영리유아원	- 정부가 비영리 법인과 공동 운영하는 사립유아원 -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공립유아원에 가깝지만, 보육시간은 더 유연하게 운영 - 정부는 토지·건물 또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용·인사 등은 정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매 학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함
공공화유아원	공립유아원,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 정부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사립유아원 -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므로 공공화유아원 성격을 지니나, 모집방식, 운영시간, 커리큘럼은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함. - 정부가 정한 수업료, 교사및교보원 급여, 기초평가, 건축물 공공안전, 교사대아동비율, 교육·보육품질 등 6개 항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초평가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음.

자료: 대만 시립중산유아원 자료(2024).

## 나. 유보통합 후 유아원 기본 운영

통합 후, 모든 유아원은 2~6세(취학전 아동) 영유아가 다닐 수 있다. 대만은 혼합반 운영이 일반적이었다. 2세반(幼幼班)은 혼합하지 않고 운영하지만, 유아들은 3~4세(中小班), 4~5세(中大班)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대아동비율은 연령별이 아닌 영아 1:8, 유아 1:12로, 크게 2개로 구분하고 있었다. 만 5세 유아가 있는 반에는 (유아)교사 1명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대만의

유아원의 교사체계는 (유아)교사, 교보원, 보조교보원으로 구분된다. (유아)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에서 필수 54학점(교보원 양성과정 32점+교육학 22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교사자격증 취득 후, 일종의 임용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면 우리처럼 공립유아원의 교사가 된다. 교보원은 일반적으로 2, 3년제 유관 학과 대학교에서 실습 포함해서 32학점을 이수한 사람이다. 보조교보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현재는 양성되지 않고 있다(면담결과).

유아교사 채용이 어려워서 2세, 3~4세는 교보원이 주로 담당하며, 5세반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사립유아원은 교보원을 배치하고 있다.

〈표 V-3-3〉 통합 후 유아원 유형 및 기본 운영 사항

구분	유형	기본운영
공립	병설유아원(國小附幼), 단설유아원(專設園)	*연령 2~6세 영유아 *주무부처: 교육부/교육국 *정교사: 유아교사, 교보원 *보조교사: 오전 또는 오후 근무 *만5세반 유아교사 최소 1인 배치 *교사대야동비용 - 영아 1: 8 - 유아 1: 12(2024년 8월 목표)
사립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사립유아원	
*공립유아원, 비영리유아원은 “공공화유아원(公共化幼兒園)”으로 분류		

자료: 1) 유형: 대만 시립중산유아원 자료(2024).  
 2) 기본운영은 본 대만출장에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 입학방식, 운영시간, 학비, 교육과정(커리큘럼) 운영에서 차이가 있다. 공립유아원과 비영리유아원은 학부모가 등록을 하고 추첨을 통해 입학하는 반면, 준공공유아원은 학부모가 기관에 직접 신청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8시경에 시작해서 17시 전후로 종료한다. 이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한다. 학비지원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공립유아원이 가장 저렴하고, 비영리유아원, 준공공유아원 순이다. 사립유아원은 준공공유아원보다 학비가 높지만, 정부가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공립과 비영리유아원은 분절교육, 주입식 교육은 금지하고 있지만, 준공공유아원은 외국어, 몬테소리 등 원장(또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표 V-3-4〉 통합 후 유아원 유형별 운영 기본 방침

구분	공공화유아원		준공공유아원
	공립유아원	비영리유아원	
입학방식	등록 및 지원 후 추첨		보호자가 직접 신청
운영시간	이르면 7시30분부터 돌봄교실 및 방과후 돌봄 실시(시간, 비용 별도)		
	16시 하교	17시 하교	17시 하교
매월학비	첫째아 1,000원/월 둘째아 이상: 무상	첫째아 2,000원/월 둘째아 1,000원/월 셋째아 무상	첫째아 3,000원/월 둘째아 2,000원/월 셋째아부터 1,000원/월
교육과정 운영	통합교육(교과별 분절교육, 주입식 교육 금지)		자율적 운영 가능 (외국어, 몬테소리 등)

주: 대만 화폐 1,000원은 한국 돈 약 43,000원임(2024년 6월 28일 기준)  
 자료: 유형: 대만 시립중산유아원 자료(2024).

사립유아원은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학비를 직접 지원한다. 사립유아원을 2~4세의 첫째 자녀가 다니면 5,000원, 둘째 자녀는 6,000원, 셋째 자녀는 7,000원을 육아수당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5세아는 취학보조금 명목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정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이 방문한 타이베이시의 사립유치원 이용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은 다음과 같다. 2~4세아는 사립유아원에 매달 내는 학비에 따라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며 5세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표 V-3-5〉 타이베이시 사립유아원 이용 학부모 학비 지원

구분	월 학비	보조 금액
2~4세	11,277원 이상	최대4,3333원/월(13,661원~26,000원/학기)
	7,277원~11,276원	2,276원/월(13,660원/학기)
	7,276원 이하	중앙정부 육아수당 공제 후 차액 지원
5세	가구소득에 따라 매 학기 2,543원~12,543원 차등 지원	

자료: 대만 사립유아원 자료(2024)

## 다. 유형별 운영 및 이용 사례<sup>20)</sup>

### 1) 공립(병설)유아원: 란아유아원

#### 가) 운영

현재 2세반 1개, 3~5세반 5개 총 6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재원아는 2세반 16명, 3~5세반 140명 총 156명이며, 교직원은 원감(주임) 1명, 행정교보원 1명, 유유반(2세반) 교보원 2명, 교사 10명, 실습교사 1명, 방과후 교사 등등 합쳐서 현재 22명이 재직 중이다.

병설유아원이지만,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규모가 큰 공립유아원으로 입학하려면 신청하고 추첨에서 떨어지면 자리가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만은 학기 중간에 자리가 발생해도 도중에 입학할 수 없다. 아이들이 서로 어색할 수 있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이다(면담 결과).

공립유아원의 교사는 우리와 동일하게 대학교(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sup>21)</sup> 후 국가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신분이다. 반면, 교보원은 5년 계약직이며 직위도 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교보원 2명은 유유(乳幼)반을, 교사는 3~5세 반을 담당하며 5세반에 교사 2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립유아원 외에는 일반적으로 교사 채용이 어려워서 4~5세반(중대반)에 교사 1명, 교보원 1명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위가 다른 교사와 교보원이 근무하면서 업무 분장의 어려움, 급여 차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혼합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영유아수가 줄어들어, 교사대아동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외동 자녀(소자화)들이 많은데 혼합 연령으로 형제, 자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다.

운영시간은 8시 30분부터 등교, 16시 하교이다. 하교 후 18시30분까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방과후 교사를 별도 채용해서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가정은 시간당 70元(한화 약 3,000원)을 지불한다.

20) 본 연구에서 추진한 국외출장 면담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함.

2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이 있음.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와 다름.

공립유아원은 통합 전에는 비용은 저렴하나, 방학이 길어서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했었다. 그러나 통합 후 운영시간을 다른 유형의 유아원과 맞추어서 방학 중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보 통합 직후 바로 2세아가 란아유아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세반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다가 초등학교 빈 공간이 생긴 2018년부터 운영하였다(공립병설유아원 원감 면담). 또한, 탁영소(0~1세) 같은 초등학교 내에 운영하고 있었다. 탁영소는 사회국 관할이지만 교육국 관할인 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초등학교 빈 교실, 빈 공간들이 생기면서 탁영소뿐 아니라 경로당을 운영하는 등 이러한 운영 형태들이 타이베이시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면담 결과).

란아탁영소는 란아 초등학교 2층에 소재하며 현재 12명 영아가 있으며 주임 1명, 교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탁영소의 입소순위가 있는데 ①소수민족 ②저소득층 ③한부모 가정 ④특수아(장애아) ⑤쌍둥이 ⑥일반가정 순이다.

〈표 V-3-6〉 공립(병설)유아원 통합 후 주요 변화

통합 전	통합 후
2세반 비운영	2세반 운영, 교보원 2명 배치 *교사와 교보원의 적용 법이 다름(교원 vs 근로자)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시간 방학 중 비운영	운영시간 타 기관과 맞춤/방과후 과정 운영(~18:30) 방학 중 운영: 돌봄 위주
-	사회국 관할의 탁영소(0~1세) 학교 내 설치운영 : 초등학교 빈 공간(교실) 활용

자료: 본 연구 면담결과 정리

### 나) 이용

란아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4자녀(5세, 3세, 쌍둥이 11개월)를 둔 외벌이 가정의 학부모를 면담하였다. 4자녀 모두 란아유아원을 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란아유아원을, 생후 11개월 쌍둥이는 란아탁영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첫째 자녀가 2세 때 란아유아원을 신청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3세 때부터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대기 중일 때, 비영리유아원을 이용하였

다. 비영리유아원에서 공립유아원으로 옮기게 된 것을 둘째 자녀가 무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유아원은 둘째 자녀는 월 1,000원을 내야한다(표 IV-3-4 참조). 이용시간은 9시~16시이다.

저렴한 학비뿐 아니라 아이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어서 공립유아원을 선택했고, 별도의 사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만의 유아원은 대부분 차량운행을 안 한다. 따라서 4명 자녀의 등하교를 본인(어머니)이 직접 하는데 탁영소와 유아원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했다. 다만, 관할부서가 달라서 탁영소와 유아원에 같은 건인데 연락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되면 좋겠다고 했다.

유보통합, 학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육아정책으로 다자녀를 출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 2) 단설유아원: 시립중산유아원

연구진이 방문한 단설유아원은 통합 전 공립탁아소로 대만 타이베이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2년에 대직탁아소로 시작해서, 2007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산탁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2012년 8월 1일자로 중산유아원이 되었다. 현재 원장 1명, 교직원 27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사 12명, 교보원 7명이며 보육담당 간사 1명, 간호사 1명, 조리사 3명, 행정직 3명이다. 영유아 수는 221명이고, 학급 수는 9반(2세 3반, 3~4세 3반, 4~5세 3반)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유아원이다. 2세 유유반은 반당 교보원 2명이, 3세 이상 중소반 및 중대반은 반당 교사 2명이 배치되었다. 특이한 점은 중산유아원의 교사, 교보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즉, 여기 교보원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운영시간은 아침돌봄 7시30분~8시, 정규 과정 8시~16시, 정규 방과후 과정 16시~18시까지 운영하며, 학부모가 필요하면 18시30분까지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30분에 20원, 1시간에 35원이다. 운영시간이 공립유아원보다 좀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방과후 과정은 방과후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급여는 시간당 400원(한화로 약 17,000원)이며 주로 퇴직한 교사나 교보원들이 근무한다.

통합 전에 0~5세아가 다닌 탁아소여서 통합 후 시설·설비 측면에서 변화는 무엇

인지 질문했더니 통합 후 법 기준이 강화되어 통합 전에는 교실 1개에 문이 1개였는데 통합 후에는 교실 문을 2개로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교사대아동비율도 큰 변화여서 통합 전에는 유아 기준으로 1:20이었다면, 후에는 1:15로 낮아졌고, 1:1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전에는 2세반을 4반, 3~4세 2반, 4~5세 2반 운영했었다.

중립유아원의 원장은 유보통합으로 2세의 보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 전 초등학교 내 공립유치원이었던 공립병설유아원의 2세~3세아의 보육은 오히려 질이 낮아졌으며 유보통합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저출산으로 정부는 학부모의 육아경감을 줄이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이 유아원의 취직을 꺼리면서 교사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통합 후 좋아진 점은 크게 없어요. 오히려 2세, 3세 유소반의 어린 연령층의 돌봄의 질이 떨어진 것 같아요.……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대한 도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 기능의 장애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최소 1명의 보육 수요가 있어도 돌봄서비스를 해야 해서 교사, 교보원의 심신이 피로해 지고 있어 최근에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이 유아원 입사를 꺼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시립중산유아원 원장 면담).

〈표 V-3-7〉 공립(단설)유아원(통합 전 공립탁아소) 통합 후 주요 변화

통합 전	통합 후	비고
2세반 4개 3~4세반 2개 4~5세반 2개	2세반 3개 3~4세반 3개 4~5세반 3개	유유반 1개 축소 중소·중대반 1개 확대
1개 교실에 문 1개	1개 교실에 문 2개	안전기준 강화

자료: 본 연구 면담결과 정리

### 3) 비영리유아원: 영건유아원

#### 가) 운영

연구진이 방문한 영건유아원은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립유아원으로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비영리유아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가 현재 단독건물을 제공하고, 법인 “타이베이 교보이원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총 8년을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으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학급수는 연령별로 각 1개씩 총 4개이고 교직원 은 담임교사 10명, 비담임교사(조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이다. 2세반 1개(16명, 교보원 2명), 3세반 1개(26명, 교사 1명/교보원 1명), 4세반 1개(26명, 교보원 3명), 5세반 1개(26명, 교보원 3명)이며 교사가 있지만, 5세반이 아닌 3세반에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교사가 희망해서 3세반에 배치한 것이며 규정 상 5세반에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교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교보원 1명이 대리교사 역할이 가능하다는 유예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표 IV-3-8 참조).

〈표 V-3-8〉 비영리유아원 반별 재원아수 및 교사, 교보원 배치

반	2세	3세	4세	5세
원아수	16명	26명	26명	26명
교사, 교보원	교보원 2명	교사 1명, 교보원 1명	교보원 3명	교보원 3명
교사대아동비율	1:8	1:13	1:13	1:13
비고		교사 본인 희망으로 3세반 배치		교보원 1명이 대리교사 역할 가능(유예조항)

자료: 본 연구 면담결과

비영리유아원은 유보통합 전에도 있었지만 통합 후에 확대된 유형으로, 공립유아원(통합 전 공립유치원)이 취약했던 돌봄 기능을 강화한 유아원이다. 비영리유아원은 방학이 없고, 아침돌봄을 위해 7시에 열어서 18시30분까지 운영한다. 정규과정은 17시까지이고 방과후 돌봄으로 1시간30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한다. 방과후 돌봄은 담임교사가 순환하면서 담당한다. 방과후 돌봄은 시간당 35원(한화 약 1,490원)이다

본 면담에 참여한 영건유아원 원장은 유보통합의 장점이 많다고 했다. 단점은 교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점인데, 이는 유보통합으로 기인한 것 보다는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 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는데 통합 후에는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공립, 비영리 비중을 합치면 사립보다 높아졌습니다. 교사 월급도 많이 올라갔고, 교사대아동비율도

1:15, 1:13, 1:12를 목표로 점차 낮추고 있어서 교육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교육과정도 진보되어 통합 전의 교과식 분과 수업에서 아이중심, 놀이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아이들이 직접 놀이감을 만듭니다. 단점으로는 학부모들의 교사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유아원이 늘어나고 있고, 교사들은 공립교사가 되기를 희망해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본 면담조사 결과)

## 나) 이용

본 유아원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가 면담조사에 참여하였다. 현재 5세 둘째 자녀가 다니고 있다. 출생 후 5개월까지는 어머니가 육아휴직으로 양육했고, 이후 개인 보모를 고용했다가 2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했다. 첫 유아원으로 여기를 다니려고 했으나, 추첨에서 탈락해서 사립유아원에 다니다가 자리가 생겨 옮긴 사례이다. 비영리유아원은 공립유아원보다 돌봄시간이 길어서 맞벌이 가정에게 더 적합한 기관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 자녀여서 월 1,000원(한화 약 43,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 진학에 우선권이 있는 등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사립유아원에 다닐 때는 일률적인 교육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했으나, 여기서는 아이 각 자의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을 해서 그림이나 만들기가 서툴지만 아이들 마다 달라서 흡족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했다.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 유보통합은 했지만, 다양한 유형의 유아원들이 있어서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불만족한 점으로 업무 교사의 잦은 이직을 언급하였다,

## 4) 사립유아원: 영광유아원(통합 전 사립유치원)

### 가) 운영

본 유아원은 타이베이시 중심에 위치한 20년 역사의 사립유아원으로 통합 전에는 사립유치원였다. 본 면담에 참여한 Hsiao Min-Fe는 이 유아원을 설립한 CEO이고, 원장은 별도로 두고 있었다.

현재 2세 2반(유유반), 3~4세(중소반) 1반, 5~6세(중대반) 1반 등 총 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재원아수는 유유반 24명(한 반에 12명씩, 교사 4명 배치), 중소

반 30명(교사 3명 배치), 중대반 30명(교사 3명 배치)으로 총 84명이다. 유유반 교사대아동비율 1:8, 중소대반은 1:15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세아가 있는 반은 교사 1명 배치가 필수여서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유유반에도 교사 4명 중 1명만 교보원이다. 유유반에 교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아이가 진급을 하면 교사도 같이 이동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유유반을 제외하고는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이베이시의 유아원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다.

대반은 교사 1명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유유반의 교사 4명 중 3명이 교사인데, 2세가 중소반, 중대반으로 진급하면 교사도 같이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유아원의 교육방침입니다. 입학하고 졸업 때까지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이베이시 유아원들은 혼합반으로 운영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는데 타이베이는 많이 (혼합반) 운영합니다(본 면담조사 결과).

운영시간은 7시30분~8시30분에 등원하고, 정규과정은 16시30분에 종료된다. 돌봄이 필요하면 1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6명, 교보원 4명이며 설립자는 교사 출신, 원장은 교보원 출신이었다. 설립자는 원장 경력이 43년으로 유보통합의 전후를 잘 알고 있으며, 비영리유아원이 유보통합 이후 많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하면서 담당 기관수가 통합 전보다 많아지자 비영리재단(NPO)를 만들어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립탁아소 대부분이 비영리유아원으로 전환했고, 현재 1~2%의 탁영소(0~2세)만 남았습니다(본 면담조사 결과).

유보통합으로 좋은 점으로는 2세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꼽았다.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립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2세아를 받기 위해서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해야 했는데

반면, 공립유아원(통합 전 공립유치원)은 교사와 교보원의 업무, 처우 등의 갈등 문제로 인해 교보원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2세 영아를 받지 않은 공립유아원이 아직 있다고 했다.

통합해서 좋은 점은 2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유아원이 2세를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아원은 교사와 교보원의 갈등으로 아직도 2세 영아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공립은 유보통합 후 교사와 교보원 간의 갈등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영아 보육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있습니다. 공립유아원(유치원)은 교

보원을 잘 받지 않습니다. 교사와 교보원 간의 급여 차이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금액이 교사는 2,000원이고 교보원은 900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반발이 심했고, 지금은 교보원에게 1,000원 지원합니다(본 면담조사 결과).

## 나) 이용

영광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녀가 본 유아원을 다니고 있는데, 첫째 자녀가 다니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둘째 자녀도 보냈다고 했다. 둘째 자녀는 탁영소를 다니다가 2세때 유아원으로 옮겨서 현재 만 5세로 2024년 9월에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었다. 참고로 대만은 1학기가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며 2학기는 3월~7월까지이다.

읽기, 쓰기는 가르치지 않고 창의력 계발과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철학이 마음에 들어서 학비는 비싸지만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비가 저렴한 공립, 비영리, 사립 순으로 선호한다고 한다.

이용시간은 8시~8시30분에 등원해서 17시30분에 본인이 직접 하원하며 학비는 월 28,000원(한화 약 120만원)로 상당히 비싸다.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만, 공립, 비영리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을 알 수 있다(표 V-3-5 참조).

## 5) 준공공유아원: 묘율현가성유아원(통합 전 사립탁아소)

본 유아원은 타이베이시에서 다소 떨어진 신주시 묘율현이란 작은 지방에 위치한 사립유아원으로 통합 전에는 사립탁아소였다가, 2020년부터 준공공유아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이 3개이고, 현재 이 유아원의 원장이 시부모님인데 본인(면담한 참여한 사람은 며느리)이 승계받아 운영하려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본 유아원은 정원 120명, 현원 92명으로 지역의 아이들이 부족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교직원인 교사는 채용하지 못하고, 교보원 5명, 대리교보원 4명, 행정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5세반에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교보원이란 4년제 비전공 대졸자로, CPR 기본교육 8시간 외 추가 3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대리교보원은 2개월의 실습과 관련 이수과목 32학점을 이수하면 교보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5세아 (중)대반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 작은 지역이고 유보통합 후에 교보원에게 유아교육 역할이 부여되면서 교사, 교보원 채용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 후 정부의 시설 비용 지원이 커져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도 줄어들어서 좋아진 점도 많지만, 주변에 공립, 비영리유아원이 있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준공공유아원이 되려면 영역별 평가를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4년마다 하는 정기적 평가와 더불어, 불시 점검을 받는다고 했다.

준공공유아원이 되려면 교육과정, 교사, 건강(보건), 시설·설비, 환경 평가를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4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불시로 점검하러 옵니다. 준공공이 되면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낮아졌지만, 주변에 공립, 비영리유아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운영은 어렵습니다(본 면담결과).

본 유아원은 앞서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유아원들과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도 운영하고 있었다. 통학 차량은 유아용 2대, 초등학생용 2대 등 총 4대를 운행하고 있었다. 시골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원아모집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은 1~6학년 대상으로 현재 45명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했다. 초등학생은 별도의 건물에서 활동하며 이곳은 학원을 관할하는 사회부(국)가 관리해서 유아원보다 관리감독의 강도가 낮다고 했다. 초등방과후 돌봄 비용은 월 5,000원(한화 약 21만원)이고, 19시30분까지 운영한다. 유아의 방과후 돌봄은 18시30분까지이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은 유보통합 전에도 운영했었다.

유보통합 전후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아동, 교사, 기관의 정부지원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 결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었고, 교사 급여도 개선되었으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원아모집의 어려움, 교보원의 업무 가중(교육활동 중시) 등으로 교사 기피현상이 생기면서 교사 구인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했다. 교사 채용의 어려움은 정부가 요구하는 준공공유아원의 교육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유보통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운영시간은 차이가 없어요. 설치비용 지원이 커져서 교실바닥 교체, 큰 공간을 나눠서 작은 교실로 재구성 등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도 통합 이후 확대되었어요. 2008년에는 원비가 18,000원이었는데 점차 줄어들

어 9,000원, 준공공이 된 후에는 3,000원이에요. 교사 급여도 매년 1,000원씩 상승되고 있고요..현재 운영이 어려운 것은 원아모집과 교사채용입니다. 원아모집은 저출산이 주된 이유이고, 교보원은 원래 보육원 자격이었는데 유보통합 이후 교육활동을 많이 해야 해서... 교보원 중에는 이러한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교사 인력이 더 부족합니다. 준공공유아원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본 면담결과).

#### 4. 시사점

대만의 유보통합 역시, 10년 이상의 장기간 논의와 논쟁을 거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안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을 이루어낸 대만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대만 유보통합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통합 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연령 범위와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 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0~12세로 추진했다가, 3~5세 등이 제시되었는데 공청회를 거쳐 최종 2~6세 유아 대상의 “유아교육및보육법(幼兒教育及照顧法)”을 확정하였다. 본 면담에 참여한 공립란아유아원의 원감은 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아도 교육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연령 통합에서 2세를 포함하게 됐다고 했다. 2세아를 받지 않았던 유치원에서 2세아를 수용하게 된 객관적 근거로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합 부처를 정하기까지 대만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양 부처가 공동으로 의장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로 주무부처를 확정하였다. 교육부로 확정하는 데에는 영유아 발달단계에서 교육을 좀 더 강조하는 세계적 동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이정림·邱志鵬, 2011: 48).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쟁점 사안을 풀어나갈 때,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삼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연령과 부처를 확정하고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과정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이 제기된 지가 약 30여년 가까이 되고, 연령과 부처에 대한 논쟁은 그 과정에서 “뜨겁게” 있어왔다.<sup>22)</sup> 따라서 현 정부의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은 논의과정 없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0~5세(취학전 아동) 연령 통합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따른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는 0~2세아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설비 등 공간 구성 등 물리적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0~2세를 담당할 경험이 없는 유아교사들의 반대가 크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도 1안 “0~5세 영유아교사 정교사”와 2안 “0~2세 영아 정교사 3~5세 유아 정교사” 두 개안을 제시하면서(교육부, 2024. 6: 16) 교사 통합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는 연령 통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령 통합은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개편, 이로 인한 교사 처우 개선, 기관의 시설·설비 재구성, 통합기관의 성격 등등 연동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며 재정 소요와도 맞물려 있는 핵심 쟁점이다.

둘째, 대만은 통합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지방단위에서의 통합은 약 3년의 시간이(2009년~2011년) 소요되었다. 서로의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 설립허가증을 통합하는 과정,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 등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이 회의를 했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본 면담에 참여한 대만의 공무원은 한국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지방단위에서의 관리체계일원화를 위해 2023년에 구성된 “4자 실무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부와 복지부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구성된 “4자 실무협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단위에서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유보통합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이 지침을 준거로 유보통합을 위한 행·재정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4자 실무협의회”에 보고하며, “4자 실무협의회”는 교육부에 보고하는 식의 상호

22) 문용린 교수는 유보통합 정책이 수면위로 오른 1997년부터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까지 7년의 시기를 유아교육 대논쟁 시기로 칭함(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10 :24).

식 전달체계를 명확히 구축, 운영한다. 다시 말해서, 하향식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상향식 방식의 전달체계도 구축해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대만의 유보통합에서 교사체계는 통합하지 못했다. 통합 후에도 (유아)교사와 교보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양성체계, 자격증, 법적 직위도 다르다. 본 국의 출장을 통해 유아교사는 교원법에 근거하지만, 교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자인 교보원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사와 교보원 간의 법적 차이는 갈등을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면담에 참여한 대만의 유아교육 전문가와 공립유아원(통합 전 공립유치원)의 원장은 대만(4~6세)을 교보원이 담당할 점, 교보원과 교사의 급여 차이가 없어지고, 교사 업무가 많아지는 점 등을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공립탁아소에서 공립유아원으로 전환한 시립중산유아원의 원장은 통합 후에 2세아가 3~5세와 같은 기관에 통합되면서 오히려 보육의 질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대만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을 이끌어 냈지만, 유아교육 전문가는 보육에 대해, 보육 전문가는 유아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교사와 교보원의 처우가 차별로 남아있어서 교보원은 교사가 되려고 하고, 교사는 국가시험을 치러 공립유아원의 교사가 되려고 하면서 사립유아원들은 교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넷째, 유보통합 이후 더 높은 양질의 교육·보육을 위해 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였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만은 출생순위별로 유아원의 학비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교사대아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영아는 현재 1:8에서 1:6 또는 1:5, 유아는 1:15에서 1:1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담 및 시립 중산유아원 자료).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도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 후에 시설·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보통합은 정책의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열악한 사립유아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공공유아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변경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었다. 정부 지원은 강화하되, 지원의 기준을 엄격히 해서 상향 표준화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연구를 발주해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박근

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관련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는데(미발간), 정책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은 이해관계자, 단체 등이 많아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은데 이럴수록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한 정책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견들을 좁혀나가야 한다. 대만 역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관련한 이견들을 조정해 나갔다(표 IV-1-2 참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정책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 지난 2023년에 많은 유보통합 관련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으나<sup>23)</sup> 구체적인 정책방안(가령, 통합기관 모델 시안 또는 교사양성체계 1·2안 등)을 주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그룹 대상의 토론회나 세미나는 거의 없었다. 즉, 유아교육이나 보육 각 계의 입장에서의 토론회, 포럼 등은 많이 개최되었으나, 중앙 정부 단위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및 수렴을 위한 “열띤” 자리는 없었다. 2023년 하반기에 “유보통합 모델 시안 마련을 위한 쟁점과 대안 등 집중 논의” 워크숍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연구자문단 합동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교육부, 2023.10.19.). 당시 정부는 이 워크숍을 통해 통합모델 시안을 연말에 발표했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6월 27일에 발표한 계획(안)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경향신문, 2024.06.27.; 베이비뉴스, 2024.06.28.; 한겨레, 2024.06.28.),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 내지는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만은 통합 후에도 정부 지원은 강화하되 유형을 단일화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통합 전에는 공립, 사립이었다면 통합 후에는 공립, 비영리, 준공공, 사립으로 다양화하였다. 정부 지원은 차이는 있지만 공립, 비영리, 준공공 유아원이 받고 있으며 사립은 학부모에게 지원한다. 대만의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공립, 비영리, 준공공, 사립 순으로 선호하지만, 학비가 비싼(정부 지원을 일부 받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 사립유아원도 원장의 교육철학이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있었다. 통합 후 방학 중 돌봄, 방과후 과정 등 돌봄 기능을 강화

23) 문무경·박창현·정유나(202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1):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pp.52-53.

하였다. 돌봄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공립유아원(통합 전 공립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학부모가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유보통합의 목표가 정책수요자인 학부모와 아동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I

##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

01 추진 방향

02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 VI.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1. 추진 방향

#### 가.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영유아는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 영유아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수혜 우선 순위에서 가장 멀리 밀린다는 우스개 말이 있다. 영유아는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전문가, 공무원, 원장, 교사, 부모 등—가 챙겨야 한다. 기성세대의 이익과 영유아 미래세대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면 가장 이상적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기성세대는 영유아의 이익을 우선 검토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2024년 7월에 발표한 (가칭) 영·유아 시범사업은 일일 12시간 운영시간을 위해 4시간 단위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부모들은 긴 운영시간을 희망한다. 그리고 교사의 근로시간 준수와 업무 부담을 줄이기 다양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는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아이 관점에서는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한 기관에서 긴 보육·교육시간이 버거울 수 있다. 그리고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자주 바뀌는 교사 시스템은 아이의 정서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나. 정부는 지방정부(지자체, 교육청)·현장(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쌍방향” 소통

정부가 유보통합의 격차해소와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선도교육청사업은 교육

청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어린이집의 개별 사업 참여가 저조하였다. 유치원도 공립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따라서 현장의 체감도가 매우 낮아서 정책 효능감이 떨어진다. 정부는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현장 간의 괴리가 크다.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은 체감도는 높지만 만족도나 호응도는 매우 낮다. 이 역시, 시범사업 추진 전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내지는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우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은 설립유형별, 지역별, 지자체의 지원금과 지원방식 등등이 달라서 매우 복잡하다. 정부는 정책 발표를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최일선 현장은 정부가 개별 기관이 수용 가능한 기준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역할이다. 그렇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실행하라는 원론적 기준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정책을 탁상행정이라 한다. 탁상행정이 되지 않고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현장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 다. “격차 해소” 보다는 “상생의 길”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측은 유보통합에서의 “격차 해소” 용어 자체가 사기를 저하한다고 했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그동안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 보수교육 등 교사교육, 교사대아동비율, CCTV 설치 등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유치원도 공·사립에 따라 유보통합을 비롯한 각종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크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수가 감소하는 초저출산 시대에 도태되기 않기 위해서 학부모의 선택을 받고자 애쓰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신분이 보장되므로 이러한 노력을 덜 한다고 보고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기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공립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질”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나왔다(김은영·최은영 외, 2022; 424).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게 타인을 대할 때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기성세대 끼리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격차는 아니라는 배려의 자세로 유보통합에 동참해야겠다.

## 라. “차근차근” 유보통합

이 용어는 지난 해 교육부가 발간한 유보통합 책자명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되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뿐 아니라 지역의 담당 공무원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장이 워낙 다양해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수록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계획 일정에 얽매이면 정부 일방의 추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호응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 2.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 가. 쟁점사안 중점 논의를 위한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 구축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일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다. 만약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사안에 대해 현장이 숙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물밑에서 사전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청의 유보통합 전담조직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 담당자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해서 교육감/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분기별 또는 사안별). 교육감/시도지사는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대만은 유보통합을 위해 약 3년 동안 지역단위의 담당 공무원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서 통합 기준을 협의했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다.

우리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 나. 지역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효율성 제고

### 1) 지방정부(지자체, 교육청)의 예산 이관 논의 기구 마련

우리나라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이원화 제도이며 각 장들은 선출직이다.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 뽑힌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예산을 관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방으로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산이나 인력, 기관수 등 諸 부문에서 보육이 유아교육보다 크다. 규모가 큰 보육이 규모가 적은 유아교육으로의 통합은 많은 쟁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능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가동해서 타당한 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2) 교육청 내 유보 균형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청에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장학사, 장학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전문가는 보육 현장에 대해서는 대개 잘 모른다(본 면담조사 결과). 시도청이나 시군구에는 장학사, 장학과 같은 보육 현장 전문가 인력이 없다.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은 순환 근무이기 때문에 장학사, 장학관에 비해 보육 현장을 잘 모른다.

이에 지역 단위의 유보통합 추진단에 장학사, 장학관에 준하는 보육 현장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랫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유보통합 전담조직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다. 유보통합 시범사업 세부 과제 조정

### 1) 일부 기관 선정의 공모방식보다는 모든 기관이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공모를 준비하기에는 짧은 기간, 선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안한 기관들이 많았다. 또한, 이번 사업 종료 후 재선정이 불투명한 점도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었다.

선의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기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선의의 경쟁을 하기에는 발표, 공모, 선정까지 너무나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현장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과 미선정된 기관으로 구별되면서 또 다른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구와 경북의 사례처럼, 기관 당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기관에 골고루 배분한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다음 시범사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2) 운영시간

육아정책에는 가정, 기관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예: 부모수당,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등) 학부모는 장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기관의 긴 운영시간, 짧은 방학 등 돌봄공백이 적은 기관을 학부모들은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제 기관 이용시간은 일일 평균 어린이집이 7시간 12분, 유치원은 7시간 4분으로(김은설 외, 2021; 198) 8시간이 채 안 된다. 대만의 사례에서도 일일 운영시간은 약 9~10시간이었다. 일일 12시간 운영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보육화”라고 반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모델 기관의 일일 운영시간은 10시간 내외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 3) 배치인력

운영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배치 인력 수도 줄어든다. 농어촌 지역의 원장들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의 관련 학과(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보육학과)는 지원자들이 줄면서 학과 존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으로 배출되는 교사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

을 때, 농어촌 지역 등의 교직원 채용이 어려운 지역은 배치인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 많은 교사(교직원)를 배치하는 방식은 아이 발달에도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자 입장에서도 채용이나 관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 배치는 운영시간과 연동되는 문제이므로 앞서 제시한 운영시간을 단축하면 배치인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 4) 통합기관 명칭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통합기관 명칭은 누리과정 사례처럼 대국민 공모를 해서 제3의 전문분야(예: 한글 등 국문학)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정할 것을 제안한다.

#### 5) 통합기관 유형 재검토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이 사립으로 묶였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에서 “공영”으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으나(베이비뉴스, 2024.10.25.), 정해진 바는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는 “공영”으로 분류되는 안(案)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공개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으로 분류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지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6) 통합기관의 다양화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대만은 유보통합 이후 기관 유형이 더 다양해지고 정부 지원도 강화되었다.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현재처럼 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라. 관련 법 제·개정, 교사 자격·양성 개편 등 핵심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투명하게 운영

유보통합의 근간을 이루는 재정과 인력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 시 보육 재정의 이관 범위, 교부금의 사용 범위 등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는 관련 계획안을 발표할 때는 지자체장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발표해서 불필요한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또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한다.





## 참고문헌

- 공병호(2024.06.14).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지속 유지 방안. 2024년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 자료집.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각 분과위원회. 135-158.
-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2024.09.30.).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유보통합을 향한 공동의 길 모색한다-도청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 공동제작, 유보통합 한 발 더 가까이.
- 경기도교육청(2024.2.28.).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 교육부(2024.0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교육부(2024.06).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3.03.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2023.01.30.).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 교육부 보도자료(2023.05.15). 영유아 중심 차별 없는 교육·돌봄을 선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2023.10.19.). 이주호 부총리,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연구자문단 합동 워크숍 참석.
- 교육부 보도자료(2023.12.08.).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의 교육부 일원화로 유보통합 추진의 안정적 기반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4.01.19.). 유보통합 '유아학교' 3월 첫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4.8.20.).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교육부·보건복지부(2023.01.30.).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10).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2024.7.). 2024년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4.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연보.
-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法學研究」
- 김미정(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시범사업과 경기도 시사점. 「이슈분석」제262호(23-14).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아름·최윤경·심현기·박유경(2023).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1.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구자연·권정윤·이미정·박소영·김수현(2023년 수행 미발간).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문무경·이윤진·권미경·박원순·배운진·김지현·이재희·박은정·김혜진·이혜민(2022).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박창현·정유나(202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 실행과제 도출과 성과지표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24.
- 박창현·박은정·김경희·이금규(2023).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5.
-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동훈·정유나(2023).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지원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3.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7.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 이미정(2024). 지방 유보육행정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유보통합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65-68.
- 이정림·邱志鵬(2011). 대만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2024.08.09.).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줄속 추진,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위한 실질적 방안부터 고민해야. <https://blog.naver.com/casaji7715/223542454568>. 인출일: 2024년 10월 17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4.11.27.).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 최효미·김태우(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2.
- 행정안전부(2024.06.0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A교육청 내부자료(2023.04.).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서.
- B교육청 내부자료(2024.01.19).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최종결과 보고서.

## [뉴스 기사]

- 경향신문(2023.06.27.). 연 2조원 이상 드는 유보통합...재원 마련안은 ‘흐릿’,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6272046005#c2b>. 인출일: 2024년 7월 1일.
- 동아일보(2024.12.16.). 교육부 유보통합 공청회, 어린이집 반발로 무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1216/130656183/1>. 인출일: 2024년 12월 16일.
- 베이비뉴스(2023.04.12.).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독립적인 영아전문 보육·교육 기관으로써 별도의 유보통합 모델 제시해야.
- \_\_\_\_\_ (2023.12.0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 재정·인력 등 5가지 제안 발표.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19>. 인출일: 2024년 7월 1일.
- \_\_\_\_\_ (2024.06.28.).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안 참담한 심정”.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99>. 인출일: 2024년 7월 1일.

\_\_\_\_\_ (2024.07.19.). 국공립을 사립으로 만드는 유보통합, 찬성하시겠습니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60>. 인출일: 2024년 10월 17일.

\_\_\_\_\_ (2024.07.25.).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으로 전환 이유, 국가 지원 줄이려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no=119085>. 인출일: 2024년 10월 17일.

\_\_\_\_\_ (2024.10.25.).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없던 일로... 단 ‘제3의 유형’으로 구분 검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98>. 인출일: 2024년 12월 4일.

동아일보(2024.06.05.). 한국만 그런게 아니네...‘합계출산율 1’미만 싱가포르·대만·홍콩의 대책은?,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605/125291268/1>. 인출일: 2024년 7월 2일.

인천일보(2027.07.30.). ‘보육’초점 맞춘 유보통합 추진\_\_\_현장 교사들 반발.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115>. 인출일: 2024년 10월 15일.

한겨레(2023.11.12.).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줄었지만...지역별 격차는 커져- 전국 평균 작년보다 5% 감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15958.html>. 인출일: 2024년 10월 16일.

한겨레(2024.06.28.). 정부 유보통합 로드맵... ‘교사자격통합’ 가장 큰 불씨 남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6823.html> 인출일: 2024년 7월 1일.

한국교육신문(2024.07.31.). 유보통합 ‘3대 쟁점’ 해법 정부에 제안.

EduPress(2024.06.05.). 교육부, 유보통합 조직개편...“영유아정책국” 신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 인출일: 2024년 7월 1일.

\_\_\_\_\_ (2024.07.01.). “보육중심 유보통합 반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합회 직무연수.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5>. 인출일: 2024년 10월 15일.

\_\_\_\_\_ (2024.08.23.). 영유아학교 vs 유아학교...기관명칭부터 갈라진 유보통합.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3>. 인출일: 2024년 10월 17일.

**[인터넷 사이트]**

교육부 사이트

법제처 사이트

정부업무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년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록. 교육부 > 정책 > 유보통합 사이트. 검색일: 2024년 10월 14일

**[대만 관련 자료]<sup>24)</sup>**

대만 시립중산유아원 자료(2024)

---

24) 대만 출장에서 수집함





# Monitoring and Improving Outcom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gration(II)

Yunjin Lee, Eunseol Kim, Hyejoo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listening to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various field stakeholders on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tasks planned by the government in 2024. Specifically, how the current government's ECEC integration policy is evaluated at the front-line sites (childcare centers, kindergartens, etc.).

The main research method is interview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heads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eachers, parents, and field officials(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cy consumers). Ten years before us, we visited five types of nurseries (ECEC integrated institutions) in Taiwan that integrat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system to find out the changes, operations, and use status before and after the ECEC integration. In addition, we met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ollected stories and data on the process of ECEC integration at that time. In Taiwa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met regularl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discuss understanding each other's work and coordinating for integration, and took a method of reporting the results of the meet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certificate of an integrated institution was derived from the different establishment certificate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other words, the standards for an integrated institution were established, and this process took about 3 years(2009-2011).

More than any previous government, the current government is enthusiastically promoting ECEC integration, but most policy consum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showed little experience of the integration policy. Regarding the field-applied policy ((tentative name) of Early Childhood school pilot project), which is highly felt, the government's lack of communication was mentioned as the biggest problem, such as the government conducting it too hastily without time to prepare on the spot. For practical ECEC integration, organizations, budgets, and laws should be supported, and to this end, the government's plan to achieve this year is to unify the education-oriented management system, promote financial transfer and integration, and promote the collectiv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Local governments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government's proposal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have not been able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as a wa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servation integration, 1) establishing a bottom-up communication system to focus on issues 2) operating a discussion body in major sectors such as organizations, budgets, and law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unification of the regional management system 3) adjusting detailed tasks of the reservation integration pilot project ((tentative name) infant and toddler school pilot project 4) guaranteeing parental choice by strengthening and diversifying the publicity of the integrated institution.

Keywor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gration, the government's lack of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Measures to Improve Performance

## 〈부록 1〉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

<b>비전</b>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b>목표</b>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
<b>전략</b>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
	[2단계]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 시행

	1단계('23~'24)	2단계('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추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교육청</li> </ul>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	유보통합 본격 시행
<b>학부모</b>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b>교사</b>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 과정 적용
<b>시설</b>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	△
<b>조직</b>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 지원
<b>재정</b>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b>법령</b>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23)	제·개정 법률 시행

주: 조직, 재정, 법령 부문의 굵은 선은 2024년에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과제라는 점에서 강조한 것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3.1.30.).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유보통합 추진 방안, p. 5.

〈부록 2〉 유보통합 추진 일정(안)

1단계 (격차 해소)		2단계 (본격 추진)	
상	'23 하	'24	'25~
추진단	'관리체계통합방안(조직 재정)' (중앙, 지방) 수립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교육부 복지부	(교육/복지부)이관 업무·정원·조직 등 분석	(복지부) 시설 보육 업무·정원 이관	교육부로 일원화('25) ⇒교육청 중심 유보통합 본격 시행 지원
시도교육청, 광역 지자체		(교육청/지자체) 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25)
추진단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및 시행령, 「국가재정법」,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가칭) 국가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교육부 복지부	(교육부) 유특회계 확보 (복지부) 보육예산 확보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운영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교육청) '24년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예산 편성(교부금)	지방 단위 통합된 재원으로 운영
예산	유특회계(+교부금)	유특회계+교부금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주: 조직, 재정, 법령 부문의 굵은 선은 2024년에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과제라는 점에서 강조한 것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3.1.30).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유보통합 추진 방안, p.16.

### 〈부록 3〉 면담지(원장, 교사, 학부모)

#### □ 원장

이름		기관명	
나이		최종학력	
경력	총 ____년 ____개월	전공	

1. **현 정부 유보통합 1단계 2023년도 대표적인 정책인 “선도교육청 사업”에 참여하셨는지요?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2023년에는 15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함(충남, 제주 제외).**
  - 1-1. 선도교육청 사업 관련 공문 또는 유치원에서 참여 요청 제안 여부 등
  - 1-2.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가장 많이 좁혀졌거나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예: 누리과정 운영, 돌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급식비지원 등)
  - 1-3. 선도교육청 사업 외에 유치원과 실제 협력 네트워크를 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 **현 정부 유보통합 2단계 2024년에는 선도교육청 사업을 비롯해서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 후 과정, 유보통합 모델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 의사 및 의견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2-1. 유보통합 모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시도청-교육청 단위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구청-서울시교육청의 유보통합추진단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4. **현 정부의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유보통합 관련해서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사

이름		기관명	
나이		최종학력	
경력	총 ____년 ____개월	전공	

1. 2023년에 유보통합 1단계 주요정책인 선도교육청 사업에서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에 참여하셨는데, 참여하신 배경(이유)과 운영 내용, 기간,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 2023년에 “거점형 방과후 과정”운영에 어린이집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 2.1. 그 밖에 어린이집이 참여한 선도교육청 사업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유보가 같이 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2.2. 유보통합 전에도 어린이집과 교류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3. 유보통합 2단계 2024년에도 선도교육청 사업을 비롯해서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유보 통합 모델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 의사 및 의견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3-1. 유보통합 일환으로 거점형 방과후 과정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2. 유보통합 모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보통합 진행 속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5. 현 정부의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끝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학부모

이름		거주지역	
나이		최종학력	
자녀수		직업	

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유치원을 언제부터 다니고 있나요?  
선택한 이유, 등·하원 시간, 월(또는 학기)별 내는 비용 등 이용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1. 지금의 유치원 이전에 다녔던 기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 귀하는 2023년 거점형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이용기간, 일일 이용시간, 교사, 급간식 제공 여부, 비용, 프로그램 등등  
- 유아수, 교사수, 혼합반 운영 여부 등
3. 2023년도에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인근의 어린이집이 같이 하는 행사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4. 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다른 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5. 끝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록 4〉 전문가 유보통합 이행수준 진단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4년 일반과제로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현장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고자 서면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보고서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 방법

아래의 “붙임2 과제별 추진 일정(안)”은 정부가 2023년 1월 30일에 발표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있는 내용으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추진 일정을 계획한 것입니다(진한게 표시한 칸이 정부 일정(안)임).

귀하께서는 **과제별(1단계)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고(추진했거나) 있다면 ○

추진하지 못하고(못했고) 있다면 X

평가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렵다면 △

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 이유(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2단계} 이후 추진할 계획인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

추진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X

평가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렵다면 △

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 이유(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예시									
항목	일정	'23년		'24년		'25년		'26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단계: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							
평가근거: 수요조사를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함.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및 '선도교육청 운영계획' 발표		△							
평가근거: 전자는 2023.7.28.에 발표했으므로 계획보다 늦게 발표했음. 후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음.									
- 선도교육청 운영(교육청별 지원 실시)			○	△	△				
평가근거: 23년 하반기 전국교육청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 상·하반기는 운영 여부를 잘 모르겠음.									
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사업은 본래 목적인 유보 간 “격차해소와 및 통합기반 마련”은 이렇다 할 실질적 성과가 없으므로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붙임2	과제별 추진 일정(안)
-----	--------------

항목	일정	'23년		'24년		'25년		'26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23~'25**

■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추진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전반적 평가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1단계: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및 '선도교육청 운영계획' 발표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선도교육청 운영(교육청별 지원 실시)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추진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작성해 주십시오.

②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	--	--	--	--	--	--	--	--

- 제도 개선(관리시스템 등) 관련 자문단 논의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	--	--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	--	--	--	--	--	--	--	--

- 만0~2세 무상보육(계속)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	--	--	--	--	--	--	--	--

- 만5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	--	--	--	--	--	--	--	--

- 만4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i>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i>									
--------------------------------------------------------	--	--	--	--	--	--	--	--	--

항목	일정	'23년		'24년		'25년		'26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만3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b>②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감감 추진과제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작성해 주십시오.</b>									
<b>③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b>									
- 이관 업무·정원조직(중앙·지방) 분석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수립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운영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b>③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추진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작성해 주십시오.</b>									
<b>④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b>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자문단 논의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통합 기관 모델 관련 정책연구 추진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연구결과 등 시안 공개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시안 관련 의견수렴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교사 자격·양성, 시설 기준 등 개편 방안 마련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b>④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추진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작성해 주십시오.</b>									
<b>[2단계: 교육부·교육청] 유보통합 본격 시행</b>									
<b>①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운영</b>									
- 지역별 기관 수급 계획 수립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통합기관 운영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항목	일정	'23년		'24년		'25년		'26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b>①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운영 추진과제 실행여부에 대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b>									
<b>②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b>									
- (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 준비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교사) 개편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적용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 개정 고시 및 연수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 현장 적용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시설설립기준) 시설 개선 예산 지원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시설설립기준) 시설기준 개선안 적용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시스템) 입학시스템 등 개편 작업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 (시스템) 입학시스템 통합 적용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b>②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추진과제 실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b>									

## 〈부록 5〉 대만 출장 면담지(원장, 교사, 학부모, 공무원)

한국은 지금 유보통합 추진 중인데(0~5세 교육부로 통합 추진)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예: 예산 및 관리체계 통합, 교사 통합, 기관 통합 등). 대만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통합 이후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현장(원장, 교사, 학부모,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 알아보고, 한국 유보통합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함.

### □ 원장

#### 기본인적사항

이름		기관명	
나이		최종학력	
		전공	
경력	원장경력 _____년_____개월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 1. 유아원의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학급은 몇 개이며, 교사는 몇 명이며, 원아는 몇 명인지 또, 이들 외에 직원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 지 등
-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지
- 교사 대 아동 비율
- 맞벌이 부모님을 위해서 늦게까지 운영하는 지, 운영한다면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는 지 등

#### 2. 유아원을 운영하시면 유보통합 전과 후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보통합을 해서 좋아진 점, 그렇지 않은 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 유보통합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달라졌는지요?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재 유아원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 대만은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요?
6. 유보통합을 먼저 한 나라로서, 한국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한국의 어린이집은 종류가 7개이고 총 30,923개임. 유치원은 종류가 국공립, 사립(법인보다 개인 유치원이 많음)이고 총 8,562개임. 양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많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을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하려고 하면서 예산, 공무원 인력, 교사, 통합기관의 성격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

학부모

기본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자녀수·연령	

1. 유아원은 2세부터 다닐 수 있는데 2세 이전까지는 육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2. 귀하께서 이 유아원은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지금의 유아원을 자녀가 다니고 있나요?  
- 이전에 다른 유아원을 다녔다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3. 지금 유아원의 이용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등, 하원 시간
- 등, 하원은 누가 하는 지
- 유아원에 내는 비용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얼마 인지

## 4. 학부모님들은 유보통합을 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5. 정부에 바라는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 기본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현 업무 경력	

## 1. 유보통합을 하면서 기존의 탁아소(보육) 업무가 교육 업무로 이관하면서 어려웠던 일 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탁아소 관련 예산, 담당 인력 등의 이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십 시오.

## 2. 현재 근무하는 지역의 유아원 담당 조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조직명, 규모, 인력규모, 예산, 관할 유아원 수, 업무 등등

## 3. 대만의 유아원은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데 그렇다면 0~1세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양 육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 4. 유보통합 전과 후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 보통합을 해서 좋아진 점, 그렇지 않은 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5. 유보통합을 먼저 한 나라로서, 한국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한국의 어린이집은 종류가 7개이고 총 30,923개임. 유치원은 종류가 국공립, 사립(법인보다 개인 유치원이 많음)이고 총 8,562개임. 양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많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을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하려고 하면서 예산, 공무원 인력, 교사, 통합기관의 성격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

〈부록 6〉 17개 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전담팀 현황(2024. 12. 3. 기준)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서울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교육기획팀, 유보통합추진1팀, 유보통합추진2팀	교육기획팀 4명 (단장 1, 장학관 1, 장학사 2) 1팀 4명 (사무관 1, 주무관 3) 2팀 4명 (사무관 1, 주무관 3)	유보통합추진업무총괄 유보통합교육기획업무총괄 (가칭)영유아학교시범운영기관업무총괄 유아교육및보육관련유관기관소통·협력 유보통합관련교사자격등에관한사항협의? 지원 유보통합교육기획관련연구및분석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운영지원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유치원및어린이집교(직)원연수운영 통합연수체계마련에관한사항 교육과정? 보육과정운영에관한사항 유보통합교육기획관련연구및분석 유보통합추진1담당업무총괄 유보통합추진및이관방안기획 영유아보육조직, 정원, 사무분석및이관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위탁체계분석및이관방안기획 유보통합관련조직및인력운용(교류, 파견, 전입등)방안기획 (가칭)영유아학교특색사업운영 부서일반직공무원인사 부서성과관리및주요업무 영유아보육조직, 정원, 사무분석및이관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위탁체계분석 유보통합관련자치법규분석및제? 개정추진 (사무·정원이관관련)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영유아보육조직, 정원, 사무자료조사및분석 유보통합정책홍보업무 부서예산·결산업무 급여, 맞춤형복지업무 일상경비관리·집행 문서접수·배부및기록물관리업무 부서정보공개업무 부서총무업무(보안, 물품관리포함) 유보통합추진2담당업무총괄 유보통합추진및이관방안기획 영유아보육재정, 재산, 정보시스템분석및이관추진 유보통합관련유치원·어린이집재정지원분석및기준조정 방안기획 찾아가는자치구청사업추진등대외협력업무 (가칭)영유아학교특색사업 운영 팀성과관리및주요업무 영유아보육재정, 재산분석및이관추진 유보통합관련유치원·어린이집재정지원분석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유보통합관련자치법규분석및제·개정추진(재정,재산이관 관련) (가칭)영유아학교특색사업기획및운영 유보통합이관대비협의체구성및운영 영유아보육재정,재산자료조사및분석 유보통합관련유치원·어린이집정보시스템자료조사및분석 부서의회(국회·시의회)및대외협력업무 유보통합포상업무 부서민원(국민신문고, 청원)업무 부서청렴및팀총무업무
부산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	10명 (사무관 1, 장학사3, 주무관6)	유보통합추진팀업무총괄 교육지원청과의업무조정 (시청)유보통합업무(행정·재정·인력) 이관 업무 및 총괄 유보통합추진계획수립 유보통합법령(조례)분석및제·개정업무 유보통합추진협의체운영(추진단및실무협의체등)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업무총괄 어린이집설치등의이관업무(국공립어린이집위탁, 휴폐원등) 기타유보통합관련업무 (남·북부관내)유보통합이관업무(행정·재정·인력)추진 어린이집재산,환경개선(기능보강 등)이관업무 어린이집시설및설비기준등의이관업무 어린이집지도,감독이관업무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운영총괄 누리과정비및보육료지원(유보통합)총괄및이관 인건비등처우개선비지원(유보통합)총괄및이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에듀파인(유보통합)지원및이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지도감독및행정처분등(유보통합)및 이관 만5세추가지원등학부모부담경감업무 과전체에·결산업무(비법정전입금예산포함) 물품구매,용역계약업무등일상경비집행업무 과에·결산관련시의회(국회)자료작성 공무원급여관리(맞춤형복지포함) 물품업무 (서부)유보통합이관업무(행정·재정·인력)추진에관한사항 유보통합추진협의체운영지원 보육교직원관리이관업무지원 유보통합현장방문업무지원 팀서무및팀업무지원 (동래·해운대관내)유보통합이관업무(행정·재정·인력)추진 원비안정화및학급운영비등학부모부담경감(보육서비스가 격관리)이관 공공형·열린어린이집선정·관리이관업무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운영총괄 유보통합모델적용(공동교육과정운영등)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유보통합홍보(이해연수, 설명회, 성과보고회등) 유보통합선도교육청(교육과정운영등)업무 어린이집교사의전문성과역량강화(건설등)연수및이관 가정양육지원업무(보호자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이관 어린이집평가및관리체계강화이관 자격양성체계및근무여건개선, 보육교직원관리이관 보육정책지원(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실태조사등)이관 유보통합자문단구성운영 유보통합건설등단구성운영및연수지원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지원
인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보통합 준비팀1, 2	1팀 4명 (장학사 3, 주무관 1) 2팀 5명 (팀장 1, 주무관 4)	인천형유보통합추진을위한기초연구추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사업총괄 인천아이누리교육지원센터운영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계획수립및운영 유치원-어린이집교육·보육및방과후과정운영현황분석 유보통합토론회운영 유보통합자문협의체운영 유보통합실무위원회운영 유보통합정책연구운영(교육분야) 유보통합교육감특별위원회산하정책TF운영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업무총괄 유보이음교육거점기관공모·운영 유보이음교육거점기관역량강화지원및네트워크운영 지역기반형유아교육·보육혁신사업운영사례공유회추진 4대분야교사역량강화연수운영 유치원·어린이집교원자격취득관련업무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업무분석·협업 유보통합실무위원회운영 0~2세표준보육과정개정후속조치사업추진 영유아특수교육현황분석및관련업무 정서·사회·심리발달지원사업추진 어린이집이음학기운영 어린이집장애영유아지원강화사업추진 유보통합설명회운영 유보통합실무위원회운영 아이행복교사단운영지원 유보통합정책홍보전략수립및운영 유보통합관련회의지원 유보통합정책연구지원 이관관련법령(조례)분석및제·개정지원 타시도유보통합추진현황분석 팀예·결산관리 팀서무업무 유보통합예산및조직이관준비기획및업무총괄 유보통합추진및이관방안기획 유보통합추진방안계획수립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운영 유보통합정책연구운영 시·군·구보육사업건설기획및추진 이관관련법령(조례)분석및제·개정 유보통합조직·정원·사무분석및이관추진 유보통합재정분석및이관추진 유보통합실무위원회총괄및운영 유보통합현장방문계획수립및추진 유보통합정책연구운영 이관관련법령(조례)분석및제·개정 유보통합재산·시스템·유치원·어린이집수급분석및이관추진 유보통합실무위원회운영 유공교원표창(장관)관련업무 유보통합관련회의지원 유보통합정책연구지원 이관관련법령(조례)분석및제·개정 어린이집급식비지원 유보통합실무위원회운영 유보통합관련회의지원 유보통합정책연구지원 이관관련법령(조례)분석및제·개정 유보통합업무(행정·재정·인력)이관
경기 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유보통합전략, 유보재정기획, 유보교육정책	준비단 1명 (단장 1) 통합전략 5명 (사무관 1, 주무관 4) 재정기획 4명 (사무관 1, 주무관 3) 교육정책 4명 (장학관 1, 장학사 3)	선도교육청(거점형방과후과정)운영 유보통합기본계획수립 광역단위보육업무이관방안개발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사업) 敎-道유보통합추진단운영 유보통합준비지역업무담당자연수운영 지역사회및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시군단위보육업무이관방안개발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조직·인력) 유보통합준비업무담당자연수운영 시군단위권역별유보통합설명회·협의회운영 유보통합관련조례제, 개정, 백서제작 수도권교육청유보통합협의체운영 자문기구구성·운영 의회, 국회, 감사대응업무(업무보고, 질의등)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지원 유보통합기본계획수립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설명회·협의회운영지원 부서총무업무(일반, 민원, 문서배부등) 부서예산및결산업무 부서물품업무 부서일상경비집행및관리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설명회·협의회운영지원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기본계획수립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운영(연구용역,시스템) 교육·보육 비용 지원구조개선방안개발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재정) 유보통합재정관련법령등조사및분석 지역사회및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재정) 교육·보육 비용 지원구조개선방안개발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운영(재정시스템구축)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기본계획수립지원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관련설명회·협의회 운영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재산) 유보통합재정관련법령등조사및분석지원 선도교육청(어린이집급식비)운영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지원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운영(재정연구용역) 유보통합재정시범사업관련설명회·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사회및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지원(재정) 유보재정기획담당총무업무(자료취합등) 유보교육정책기획 영유아학교시범사업계획및운영 영유아학교시범사업컨설팅담당기관장협의체운영 유보교육정책(시범사업)홍보관련업무 유보교육정책관련대외업무 유보통합정책연구(시범사업) 유보통합대비교육과정운영분석및컨설팅방안마련 (선도교육청)거점형방과후과정계획및운영 영유아교원4대분야역량강화연수계획및운영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연수계획및운영 유보통합정책연구(장애영유아유보이음교육) 유보교육정책관련교육발전특구협력체계구축 유보이음교육현장지원자료개발및보급 소규모유치원·어린이집교육·보육여건개선사업계획및 운영 영유아정서심리지원계획및운영 유보교육정책관련지역사회연계(체험형)운영
대구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보통합담당	9명 (사무관 1, 장학사 4, 주무관 4)	(가칭)영유아학교시범학교운영추진 아이행복현장교사단,지역컨설팅추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추진 교육발전특구유아교육·돌봄분야추진 영유아교육과정교사연수·컨설팅지원 유·보이음지원자료개발 어린이집평가및관리체계조사및분석 어린이집누리과정을운영및보육실태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조사및분석(유아교육진흥원연계방 안 등)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영유아교육과정교사연수·컨설팅추진 어린이집이음연수, 상호공개의날, 실기형연수 표준보육과정분석및공동교육과정개정관련 (가칭)영유아학교시범학교운영추진 정서·심리·사회·언어발달지원사업 어린이집컨설팅추진 시·군·구 자체교육관련사업분석 어린이집누리과정운영및보육실태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조사및분석(유아교육진흥원연계방안 등) 영유아교육과정교사연수·컨설팅추진 어린이집이음연수, 상호공개의날, 실기형연수 유보통합 홍보관업무추진 유치원공모사업(안전교육활동우수, 생존수영교육, 엄마품 돌봄유치원)운영 안전한 환경조성지원업무 (가칭)영유아학교시범교육청업무추진지원 유보통합시범교육청달성군협력사업업무추진 유아교육진흥원분원설립업무지원 영유아교육과정교사연수·컨설팅추진지원 대구유아교육발간 대학생 자원봉사제운영 유보통합정책추진및이관방안기획 유보통합조직·인력이관추진(정) 유보통합조직개편및인력운용계획수립 유보통합정책추진단및정책추진자문단운영 유보통합시도교육감협의회업무추진 교육부, 지방의회등유관기관협력체제유지 시청보육업무·재정등분석 기타유보통합업무및행사추진 유보통합재정이관추진(정) 보육재정분석및예산확보·편성 유치원-어린이집운영현황분석·적용검토(정) 시군구차등지원적용방법검토, 격차완화, 표준(안)마련 등 유아교육진흥원분원설립추진 유보통합실무협의체운영 동구·중구·수성구보육업무·재정등분석 기타유보통합업무및행사추진 유보통합정책홍보및대외협력업무 유보통합추진관련자치법규제·개정 보육업무매뉴얼, 지침등제작및유보통합시범운영 신규보육업무담당자교육계획및수립및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및보육관련공유재산이관 어린이집현장방문계획수립및추진 유보통합현장자문단운영 유보통합재정이관추진(부)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유치원-어린이집운영현황분석·적용검토(부) 시군구차등지원적용방법검토, 격차완화, 표준(안)마련등 남구·달서구·달성군보육업무·재정등분석 기타유보통합업무및행사추진 보육업무구군청멘토링제운영 보육업무시스템(행복e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시스템 등)이관 어린이집안전·보건·급식·위생업무 보육관련각종통계·자료수합및작성 유보통합조직·인력이관추진(부) 유치원-어린이집운영현황분석·적용검토(부) 시군구차등지원적용방법검토, 격차완화, 표준(안)마련등 북구·서구·군위군보육업무·재정등분석 기타유보통합업무및행사추진 담당(계)예산및결산, 일반업무
광주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	8명 (사무관 1, 장학사 2, 주무관 5)	유보통합 정책 홍보 계획 수립·추진 및 정책 연구에 관 한 사항 유보통합관련연수·설명회추진 선도교육청운영및격차완화업무추진에관한사항 어린이집교사관련업무 유보통합모델의지역화(광주)추진업무및분석 유치원-어린이집(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업무분석 어린이집평가및관리체계조사및분석 영유아특수교육현황분석및관련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연계방안마련 유보통합추진방안및계획수립 유보통합추진실무협의회운영 유보통합협약, 협상에관한사항 보육업무분석(총괄) 유보통합조직및인력이관에관한사항 유보통합추진단(TF)운영 어린이집및보육관련단체, 위원회운영업무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업무 보육예산분석(총괄)및제정이관, 보육예산확보업무 유보통합교육(지원)청조직개편안수립및체제정비 유보통합관련법령건의및자치법규등개정추진 구별보육업무추진사업표준안마련 시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및지원에관한업무 보육기관관련인력현황분석 보육사업관련기록물(문서)이관업무 유보통합대비보육예산세입·세출편성및관리 유보통합관련지자체공유재산이관에관한업무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및지원에관한업무 유보통합현장의견수렴지원 타시도유보통합모니터링업무 유치원-어린이집현황및실태분석, 보육통계업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및지원에관한업무 유치원-어린이집운영시스템관련업무 신규보육담당자교육계획수립및추진 교육감(의회), 성과관리, 민원, 자료수합업무
대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 1, 유보통합 2	1팀 5명 (장학관 1, 장학사 3, 주무관 1) 2팀 5명 (사무관 1, 주무관 4)	유보통합1 담당업무총괄 유보통합모델업무총괄 유보통합기획에관한업무 유보통합모델에관한업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영·유아학교시범기관원장협의체·아이행복현장교사단운영 에 관한 업무 영·유아학교시범기관설립·단·학습공동체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정책추진자문단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교육과정에관한업무 유보통합대외협력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교육과정)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연수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정책설명회운영에관한업무 영·유아학교시범기관방과후과정(돌봄)에관한업무 유·보·초이음교육에관한업무 유보통합위킹그룹운영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특수교육관련교사역량강화사업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교원자격에관한업무 유보통합정서·행동발달검사지원등에관한업무 유보통합놀이치료가족상담등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정책홍보에관한업무 유보통합관련학부모사업추진에관한업무 어린이집평가및열린어린이집분석에관한업무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자격검정및자격증발급분석에관한 업무 보육교직원관리분석에관한업무(임면보고등) 어린이집대체교사·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지원분석에 관한 업무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양성교육분석에관한업무 어린이집연장보육, 그밖의연장보육, 시간제보육등분석에관 한업무 유보통합포털사이트개편에관한업무 대덕구청유보통합이관에관한업무 공공형어린이집분석및유보통합1팀지원업무 유보통합2담당업무총괄 유·보관리체계일원화총괄 유보통합조직·재정이관총괄 유·보통합2기획에관한업무 유·보관리체계일원화추진에관한업무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유보통합조직이관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추진에관한업무 교육(지원)청조직개편및공간확보에관한업무 지방의회및유관기관협력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재정이관에관한업무 보육정책위원회분석에관한업무 보육료및가정양육수당,시간제보육지원분석에관한업무 유아교육·보육재정기준분석에관한업무 어린이집재무·회계분석에관한업무 보육통합시스템(대전시보육운영관리시스템)기능분석에관한업무 유성구청유보통합이관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재정)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공유재산승계·관리에관한업무 어린이집수급(인가, 휴·폐지, 재개)분석에관한업무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위탁분석에관한업무 어린이집기능보강분석에관한업무 유보통합자치법규제·개정지원에관한업무 유보통합현장방문추진에관한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분석에관한업무 동구청,중구청유보통합이관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재산)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사업(인건비성제외)분석에관한업무 유보통합추진자치법규제·개정지원에관한업무 유보통합업무매뉴얼제작에관한업무 어린이집평가및열린(공공형)어린이집분석에관한업무 어린이집안전관리분석에 관한업무 서구청유보통합이관에관한업무 대전유보통합실무협의회(유아교육·보육사업)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예결산및일반사무에관한업무
세종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유보통합 전담	5명 (사무관 1, 장학사 2, 주무관 2)	유보통합모델학교기획및관리총괄 보육업무예산, 조직, 인력이관통할 유보통합담당주요업무계획수립 영유아학교시범사업기획및추진 영유아학교시범사업선정, 운영지원 영유아학교시범사업운영방안보고서작성 영유아학교시범사업교육정책특색사업발굴·추진 영유아학교시범사업컨설팅및교사학습공동체운영 영유아학교시범사업성과평가추진 영유아학교시범사업관련지자체협업 영유아학교시범사업관련기관협의회운영 기타유보통합모델관련업무추진 유보통합모델자문단및TF구성·운영 어린이집보육업무·정책분석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선도교육청·교육격차완화업무기획및추진 유치원·어린이집영유아교사역량강화연수운영 어린이집대상누리과정컨설팅운영 어린이집영유아정서·사회·심리발달지원 어린이집영유아체험프로그램발굴·지원 유치원·어린이집안전체험행사운영 기타선도교육청·교육격차완화관련업무추진 교육원유아교육부·육아종연계협력사업추진 유보통합현장소통업무기획및추진 유보통합정책설명회, 토론회, 간담회등추진 유보통합정책홍보자료제작및안내 어린이집보육업무·정책분석 어린이집보육업무·정책분석계획수립 유보통합이관계획(사무·재정·인력등)수립 유보통합조직과제도관련종합계획수립 유보통합부서간기능이관 유보통합법령분석및자치법규제·개정추진 유보통합추진단및유보통합협의체구성·운영 어린이집보육업무·정책분석 유보통합국정과제관리 유보통합대외협력추진(시청·시의회·교육부등) 기타유보통합관련업무추진 어린이집정부·지자체재정분석(예산추계포함) 어린이집보육업무·정책분석및매뉴얼제작 보육사업운영실태확인등보육현장방문추진 유보통합실무협의체구성·운영 실무협의회운영(특별자치시·도및충청권교육청) 유보통합공약사항관리 유보통합관련기초자료및통계작성 유보통합관련교육감표창업무추진 유보통합담당일일서무
울산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보통합기획팀, 유보통합조정팀	기획팀 6명 (장학관 1, 장학사 1, 주무관 4) 조정팀 4명 (사무관 1, 주무관 3)	기획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총괄 유보통합기획팀업무총괄 유보통합모델학교선도교육청운영 연수운영(유보통합및각종연수) 유보통합지역협의체구성및운영 팀주요업무(국정과제, 정책과제, 특교등) 유보통합홍보자료제작 울산형유아교육보육지원사업(유보통합) 유아모집(처음학교로)운영 유보통합추진단(T/F팀)및실무협의체운영 유보통합지역협의체구성및운영 유치원, 어린이집교육(보육)과정실태조사및분석 유치원, 어린이집방과후(연장)과정실태조사및분석 교육과정컨설팅및장학운영방안기획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보육통합시스템관련업무분석 지방업무이관(울산시, 울주군) 어린이집업무및예산지원현황(국공립)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및서비스격차추진 영유아보육업무분석(조직, 정원) 유치원및어린이집기관평가(인증) 유관기관및교육·보육공동체대상이해연수 교육청내유보통합및보육업무이해도제고 유치원어린이집교원자격, 양성, 훈련등 유보통합기획팀일반사무 지방업무이관(남구) 어린이집업무및예산지원현황(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아나이스총괄및기획 유아나이스업무별협이체 유아나이스사용자교육, 예결산 유아나이스현장자문단 유치원안전교육및성교육업무 유치원심리상담지원 방과후전담사인건비예산및결산 유치원인사·교육과정등행사업무지원 유아나이스시스템공동운영, 스쿨넷관련 유아나이스현장컨설팅단및업무매뉴얼 유치원보건관련업무 공립유치원환경개선비(놀이터, 도서실, 전자칠판등)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운영 유치원현황, 교원명부, (팀)정보및홍보 팀주요업무(일, 주, 월), 팀취합업무 유치원인사·교육과정등행사업무지원 조정팀 유보통합조정팀업무총괄 영유아보육업무분석(법령, 조례, 규칙등) 및 관리 지방의회및유관기관협력체제분석 영유아보육업무분석(예산) 예산이관추진및추가예산확보방안업무 어린이집재무회계관리현황분석등 유치원, 어린이집설치, 인가관련업무분석 지방업무이관(울산시, 북구) 어린이집업무및예산현황(민간) 보육관련위원회업무현황분석 유치원, 어린이집안전교육및CCTV등 유치원, 어린이집보건, 건강, 영양등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업무분석, 활용방안업무 시간제보육사업관련업무 유보통합정책홍보전략수립및운영 지방업무이관(중구) 어린이집업무및예산현황(직장, 협동)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열린어린이집관련업무 교육시설및설비기준등분석 유치원및보육교사처우개선관련 영유아특수교육현황분석및관련업무 사립유치원사무직원배치기준(마련) 사립유치원설립,운영인가자체기준(정비) 지방업무이관(울주군) 어린이집업무및예산현황(가정) 유보통합팀일반사무
강원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유보통합팀	9명 (사무관 1, 장학사 2, 주무관 5, 파견교사 1)	유보통합팀업무총괄 유보관리체계일원화추진방안수립 도,시군보육정책분석 보육정책분석및중장기보육사업계획수립 지자체보육업무현장조사기획·추진 유보통합정책협의회추진 유보통합추진단기획및운영 영유아정책분과, 누리과정분과운영 어린이집운영현황(교육-보육)실사및분석 어린이집누리과정(보육과정)운영실태분석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어린이집유아언어발달강화사업지원 보육교직원배움중심공동연수(유아교육원)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성과평가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기획·지원 시범학교운영지역협력체계구축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성과평가 유보통합격차완화추진 유보통합정책홍보기획 어린이집연합회협의지원 유보통합주요업무계획및미지정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업무분석및연계 유보통합정책연구지원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누리과정컨설팅, 더배움공동체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운영 시범학교운영·관리, 지원계획수립, 현장지원단운영 영유아교사역량강화 영유아교육·보육채무성강화 보육교직원처우개선및단체교사지원사업 유보통합관련연수(포럼, 설명회)운영 유보통합의견수렴및현장소통 유보관리체계일원화추진지원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지원 4대분야교사직무연수운영 시범학교현원관리 영유아정서·심리발달지원(유아교육원)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어린이집누리과정(보육과정)운영분석지원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및특성화활동분석 장애전담어린이집및특수교육대상유아현황분석 유치원·어린이집현황분석 유보예산(재정)통합인수추진 도,시군보육업무예산(재정)분석이관추진 예산이관범위협의및확정 교육지원청보육예산(재정)이관지원 예산(재정)인수협의화운영 보육현자오사및자료분석(예산) 도,시군세입및재정확보 하위법령(자치법규,조례)등개정 과일반직인사 유보조직(정원)통합인수추진 도,시군보육업무조직(정원)분석이관추진 조직(정원)이관범위협의및확정 교육지원청정원(조직)이관지원 조직·행정인수협의화운영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정원·인력) 유보통합추진단운영(실무TF팀,자문위원회) 도,시군보육업무현황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강원,춘천,원주,강릉)사업분석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지원(예산) 시군단위보육업무현장조사운영 강릉권역지방단위(교육지원청)이관준비지원 강릉,속초양양,동해,삼척,태백,고성 시범학교운영예산관리및정산 유보통합팀예·결산업무 시군자체(특색)사업현황분석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지원(정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및문서이관 원주권역지방단위(교육지원청)이관준비지원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보육통계관리(유치원-어린이집현황) 유보통합추진단운영지원(실무TF팀,자문위원회) 춘천권역지방단위(교육지원청)이관준비지원 -춘천,홍천,화천,철원,인제,양구 유보통합팀민원업무 유보통합팀일반서무
충북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	7명 (팀장 1, 장학사 2, 주무관 4)	유보통합추진팀소관업무기획및총괄 일상경비출납원,본인물품출납원 지역기반유보통합모델학교운영 유치원-어린이집운영현황분석(방과후,돌봄) 누리과정·보육과정 운영 분석 및 컨설팅 어린이집학급보육과정운영분석 어린이집일과및교육활동통합방안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장애전담-장애통합어린이집분석 어린이집특색활동운영분석 유보통합정책연구추진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지원 지역기반형영유아보육혁신사업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업무분석및활용방안 설립유형별어린이집현황및운영실태분석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비교분석 유보통합업무이관계획수립 유보통합대외협력업무(의회등) 유보조직(정원)분석및인력운영계획수립 조직이관관련법령및자치법규등개정추진 어린이집정부지원현황분석 시군별어린이집지원사업분석 충북유보통합이관대비협의체운영 중부권이관대비협의체운영(청주, 진천, 괴산증평) 중부권예산, 조직분석및이관추진 중부권보육업무분석 보육예산(재정)분석및이관계획수립 예산이관관련법령및자치법규등개정추진 예산추계및추가예산확보방안검토 북부권이관대비협의체운영(음성, 충주, 제천, 단양) 북부권예산, 조직분석및이관추진 북부권보육업무분석 조직이관관련법령및자치법규검토 어린이집재무회계 유치원-어린이집수급관리및현황분석 유치원-어린이집설립요건및인가 일반직인사업무 현장의견수렴지원 남부권이관대비협의체운영(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예산, 조직분석및이관추진 남부권보육업무분석 예산이관추진관련법령및자치법규검토 어린이집관련행정시스템분석 어린이집설치기준조사(시설임대, 시설처분)등 유치원-어린이집교구·설비기준분석 유보통합정책홍보
충남 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유보통합추진 1,2팀	1팀 4명 (팀장 1, 장학사 1, 주무관 2) 2팀 5명 (팀장 1, 주무관 4)	유보통합추진1팀업무종합계획수립과운영 유보통합추진1팀기획업무 유보통합모델의지역화 영유아학교시범기관운영·관리 영유아학교시범교육청운영 유·보교직원역량강화연수운영 유보통합대비학부모역량강화지원 보육기관교육·보육과정컨설팅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교육·보육관련유관기관협력(유아교육원,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청-도청유보통합추진단·자문단 운영 실무분과협의회운영(유보정책분과,인사분과,예산분과) 유보통합조직·인력이관에관한업무 보육정책위원회에관한사항 관련법령제·개정업무 유보통합정책설명회 유보통합관련의회,국회,감사대응업무 사립유치원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보조지원 보육단체활동지원및행사추진 보육기관지도·점검관련사항 보육기관장애영유아지원에관한사항 지역사회및근거리관련력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지원 지자체어린이집담당인력현황분석 교육과정및보육과정분석업무 유보통합추진2팀업무종합계획수립과운영 유보통합추진2팀기획업무 유보통합재정확보및이관업무 도청,시·군·구어린이집지원사업및재정분석 지역실무협의체관리·운영(천안,태안) 관련법령제·개정업무 필수경비산출TF팀조직·운영 업무인수협의회구성·운영 지역실무협의체운영(아산,논산·계룡) 예산현황파악분석및예산추계 지자체·공유재산분석업무 유보통합재정연구용역 보육기관수급및조직·정원관리 지역실무협의체운영(공주,보령,서천,금산,부여) 유보통합추진1,2팀예산관련업무 보육통합시스템기능분석에관한업무 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관한업무 유보통합현장방문추진에관한사항 유보통합1,2팀정책홍보 지역실무협의체운영(서산,당진,예산,청양,홍성) 유보통합재정확보및예산·결산관리 보육료및가정양육수당지원분석에관한업무 유보통합포털운영에관한업무 유보통합추진1,2팀일반사무에관한사항 유보통합추진1,2팀소관행사및기타업무지원
전북 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유보통합담당	12명 (장학관 1, 장학사 3, 주무관 6,	유보통합담당업무총괄 전북특별자치도유보통합기본계획수립 영유아교육·보육통합체계기획 교육·보육격차완화방안계획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국정과제-유보통합분야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업무 시도교육감협의회안건제출 유보통합정책협의회운영 전북특별자치도관리체계일원화추진단구성·운영 전북특별자치도유보통합추진협의회구성·운영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관련업무 특별자치도실무협의회추진 3~5세누리과정업무이관 전북어린이집연합회관리및행사업무이관 유보통합전문직원인사관련 유보통합중장기계획관련업무(총괄) 유보통합추진실적및계획 교육청평가및성과지표유보통합분야 전북보육정책위원회관련업무이관 보육관련단체운영지도이관 유보통합홍보 교육발전특구유보통합협력사업 교육,보육교직원역량강화연수 지방행정사 무관 (도청파견) 1, 지방사회복 지주사 (도청파견) 1)
			유보이음교육운영 누리과정어린이집대상간설팅운영 지역기반형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 유보통합정책연구(교육분야) 0~2세표준보육과정업무이관 보육교사교육원위탁및보수교육과정운영지원업무이관 영유아특수교육관련업무이관 어린이집평가에관한업무분석및이관 유보통합모형운영및지원 교육부통합모델시안발표에따른지역화 전북형통합모델개발운영 통합모형개발T/F운영 모델학교운영전방 모델교육청운영현장지원 모델학교지원컨설팅단운영 유보통합관련워크숍운영 보육사업정책관련직원연수에관한업무 공약사업-유보통합분야 유공교원표창(도지사)관련업무 유보통합홍보 담당업무대외홍보 누리집유보통합분야관리등 유보통합보육업무및정원·인력이관업무 교육지원청유보통합정원에관한업무 유보통합보육업무정원운용계획수립 유보통합보육행정및업무이관 유보통합관련자치법규제·제정에관한업무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운영기관 국공립어린이집위탁및장기임차사업업무기관 어린이집지도-점검업무기관 어린이집지도-점검계획수립업무 어린이집지도-점검표준안마련 어린이집재무회계관리현황분석등 유보통합보육예산이관업무 도청및지사체별보육예산현황파악 보육예산이관범위및방법분석 지자체공유재산이관에관한업무 유보통합관련지자체공유재산현황파악 공유재산이관범위대상및방법분석 국정과제-유보통합분야지원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업무및정책협의회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및관리업무기관 시간제보육사업업무기관 유보통합대외홍보 보육료지원업무기관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어린이집필요경비(무상교육) 어린이집시설지원업무기관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업무 어린이집설립인가및관리업무기관 교육시설및설비기준등분석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기능보강사업 직장어린이집실태조사및미이행사업장관리 민간·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운영기관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선정및관리업무 유보통합관련기록물관리업무 도청및지자체어린이집관련기록물현황파악 기록물관리범위및방법분석 유보통합관련자치법규제·개정에관한업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관업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용자및적용업무분석 유치원및어린이집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정보공시관련업무기관 유보통합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및지원 유보통합대외홍보물제작및배포 보육료지원업무기관 보육료및유아학비자격결정및지원업무 0~2세영아보육료 3~5세누리과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관련통계자료관리업무기관 취약보육어린이집관리 보육교직원직원및관리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인건비지원, 임면, 배치기준및복무관련 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원인건비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및관리 보조·연장·대체교사지원·담임교사지원·겸직원장지원비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처우개선비·보육도우미등 어린이집운영비지원업무이관 영아반운영비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농어촌어린이집지원등 취약보육운영비지원 냉난방비, 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 급간식비지원 어린이집안전관리업무이관 어린이집시설안전관리및점검관련업무 어린이집안전교육및CCTV관리 어린이집생활환경관련업무 건강관리및응급조치(건강진단, 건강주치의, 방역) 급식·위생관리(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음용수등) 아동학대관련(cctv운영관리등),보육교직원등안전교육 어린이집시설, 설비및교재, 교구기준업무이관 어린이집통학차량안전관리관련업무이관 요구자료작성및팀자료취합 각종회의자료취합정리 팀운영물품구입및관리 팀행사지원 도·시군보육사업이관업무 도·시군보육사업예산및사무현황파악분석 도내유형별어린이집및보육관련단체현황파악 유보통합관련도·시군협력체계구축 시군별자체사업분석및이관대상업무협의 유보통합업무관련지자체담당자현장지원 유보통합관련지자체담당자의견수렴및사례공유등 전북특별자치도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운영 교육행정협의회의안건제출 도·시군보육사업이관업무지원 도·시군보육사무및예산현황파악 시군별자체사업현황및공동·특수사업분석 시군별자체사업현황및공동·특수사업분석 도·시군사무별이관대상자료(시스템, 데이터등)파악 도·시군이관대상공유재산유형별현황분석 도·시군이관사무별쟁점사항파악등 도내유형별어린이집및보육관련단체현황파악 유보통합관련도·시군협력체계구축지원 시군별자체사업분석및이관대상업무협의 유보통합업무관련지자체담당자현장지원(설명회등) 유보통합관련지자체담당자의견수렴및사례공유 전북특별자치도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운영지원
전남교	유초등교육과	8명	유보통합업무전반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육청	유보통합추진팀	(팀장 1, 장학사2, 주무관5)	유보통합기본계획수립(영유아교육·보육통합체계기획) 유보통합관련국정과제(공약)및성과관리 유보통합관련교육청평가및성과지표관리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의회, 국회등)총괄 유보통합추진단,자문위원단운영 교육발전특구유보통합관련업무지원 지역기반형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협조 보육단체관리(어린이집교원간담회, 협의회운영) 유·보/어·초이음교육운영 유공교원표창(장관) 팀성과관리및주요업무 보육사무이관업무담당자연수운영(장학) 가치)영·유아학교시범사업운영 가치)영·유아학교시범사업건설당년협의체운영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장학분야) 영유아장애유아지원사업업무(특수교육) 유보통합관련대외홍보 그밖의유보통합업무(장학분야) 유보통합추진및이관방안기획 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추진계획수립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사업) 보육업무정원운용계획수립 유보통합실무협의체(도교육청·도)운영 보육사무이관업무담당자연수운영(행정) 가치)영·유아학교시범사업업무지원 유보통합관련유치원·어린이집예산·재정분석및조정방안기획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행·재정분야) 유보통합관련대외협력(의회, 국회등)업무지원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예산·재정) 팀지방공무원인사및포상관리 유보통합관련호남권위킹그룹운영 가치)영·유아학교시범사업재정분야업무지원 유보통합관련보육업무매뉴얼·지침개발 유보통합관련법령분석및조례제·개정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조직·인력) 유보통합지역협의체(교육지원청·시·군)관리및지원 유보통합준비업무담당자연수운영지원 가치)영·유아학교시범사업재정분야업무지원 유보통합관련공유재산분석및이관방안기획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위탁체계분석 유보통합관련유치원·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관련업무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재산) 유보통합업무매뉴얼·지침개발지원 유보통합관련대외홍보지원 어린이집시스템(입소, 보육통합시스템등)분석및이관방안기획 보육통계관리및정보공시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팀민원(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제안), 보안업무 수기문서대장등기록물분석및이관 보육현장조사및자료분석지원 유보통합업무매뉴얼·지침개발지원 유보통합관련법령분석및조례제·개정지원 그밖의유보통합업무(행정분야)
경북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유보통합 담당	7명 (담당 1, 장학사 1, 주무관 5)	유보통합업무통합 유보통합추진및이관계획수립 영유아학교시범사업기획및성과관리 영유아학교시범사업정서심리발달지원사업추진 영유아학교시범사업컨설팅단, 원장협의체, 운영기관교원연 수 운영 유보통합현장소통(토론회, 공청회)운영 타부서유보통합협조체제구축 유보통합표창업무 유보통합정책연구분석및활용 영유아학교시범사업내실화추진 영유아학교시범사업아이행복교사단운영 영유아시범사업이음학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및유아교육체험센터연계사업추진 지역기반형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추진 어린이집장애영유아지원분석 유보통합조직·인력이관추진 유보통합조직개편및인력운영계획수립 유보통합(자치법규, 조례등)제·개정 유보통합시도교육감협의회업무추진 정부기관유보통합협조체제구축 어린이집설립기준제도마련 유보통합협의체운영 유보통합추진단, 자문단, TF팀운영 도·시·군실무협의체운영 보육단체관리 도·시지역보육사업및재정분석 경상북도청보육업무및재정분석 시지역예산분석및이관 시지역자체(특색)사업현황분석및개편 0~2세표준보육과정정후속조치업무 유보통합도의회및국정(행정사무)감사자료관리 보육교직원자격·근로여건분석 어린이집안전업무이관및지원 군지역보육사업및재정분석 군지역예산분석및이관 군지역자체(특색)사업현황분석및개편 보육관련통계자료작성및관리 보육관련공유재산이관 4대분야교원역량강화및학부모대상연수운영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어린이집건강,보건업무이관및지원 유보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유보통합담당예산및결산업무 어린이집교원연수이수관리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어린이집급식업무분석및이관 과일반서무업무 부서민원및보안업무 기록물및물품관리 부서급여(초과근무포함)및맞춤형복지업무
경남 교육청	부교육감 산하 유보통합추진1담당, 2담당	단장 1명 1담당 5명 (사무관 1, 주무관 4) 2담당 5명 (장학관 1, 장학사 4)	유보통합 정책 추진 업무 총괄 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추진계획수립 사무·정원업무분석및업무분관운영 도·시·군·구현장실사(총과르사무·정원) 유보통합협력체계구성·운영(총괄,유보통합협력단) 유보통합정책설명회 유보통합업무매뉴얼,지침등제작 유보통합현장소통지원 지방공무원인사 유보통합업무분관운영(총괄,재정)및재정분석 유보통합추진실무단,보육업무지역협의체운영 유보통합관련법령분석및자치법규제·개정 도·시·군·구현장실사(재정) 유보통합현장소통지원 유보통합포털구축및운영지원(특교포함) 유보통합표창업무 성과관리,청렴,민원(국민신문고,정보공개,제안) 사무·정원업무분석및업무분과운영지원 유보통합협력체계운영지원 유보통합관련법령분석및자치법규제·개정지원 도·시·군·구현장실사및현장소통지원 부서급여,예산편성및집행,결산 부서사무일반(의회,감사,보안,물품,재산·시설,기록물,각종 취합업무등) 재정업무분석및업무분과운영지원 도·시·군·구현장실사및현장소통지원 정책설명회업무지원 유보통합추진2담당업무총괄기획및관리 유보통합모델분석및개선업무지원 유보통합모델학교운영(총괄) 유보통합현장소통및설명회지원 유보통합추진단실무단운영지원 교육전문직인사 유보통합관련현장실사 유보통합선도교육청운영 유보통합현장소통운영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구분	소속부서	인력수	주요 업무
			보육교직원자격,보육교사근무여건분석 유보통합컨설팅단구성및운영 유보통합업무분과운영(교육·보육분야지원) 유보통합모델학교운영지원 유보통합관련연수추진 보육과정,돌봄,학사관리 분석 지역별육아종합지원센터업무분석 및 협업 유보이음학습공동체운영 어린이집장애영유아및특수교육업무분석 유보통합모델학교운영지원 유보통합관련현장실사 유보통합정책연구및홍보 유보통합업무분과운영(교육·보육분야) 지역사회연계·협력사업운영 평가및장학업무분석 유보통합모델학교운영지원
제주 교육청	대외협력과 유보통합팀	4명 (사무관 1, 장학사 1, 주무관 2)	유보통합기획및추진총괄 지방자치단체보육사무이관총괄 「제주유·보통합 추진단」및실무팀협의체운영 유보통합관련법안마련및자치법규정비 유보통합관련업무협약및홍보전략수립 일상경비출납원 영·유아학교시험사업운영 영·유아교육·보육과정관련업무 보육교원자격관리및연수운영 유보통합소통네트워크운영 유보통합정책참여게시판및자료실운영 특별자치도유보통합실무협의체운영 유보통합관련협의체구축(유치원,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유보통합종합실행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사무이관 「제주유·보통합 추진단」및실무팀협의체운영지원 통합기관유형별비용지원구조개편 통합기관설립·운영기준정비 유보통합관련조례(규칙)제·개정 호남권유보통합실무협의체및시도교육감협의회(유보특위)운영 부서일상경비및물품관리 어린이집운영현황분석및기초자료(통계)작성 유보통합포털등통합정보시스템구축업무 유치원·어린이집간격차해소관련업무 지방자치단체자체(시책)사업현황분석 유보통합홍보(설명회,성과보고회등) 영·유아학교시험사업운영지원 어린이집포상업무 유보통합팀업무일반 일반사무업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8 651005  
ISBN 979-11-6865-100-5